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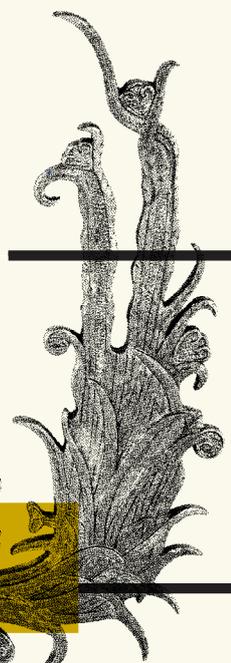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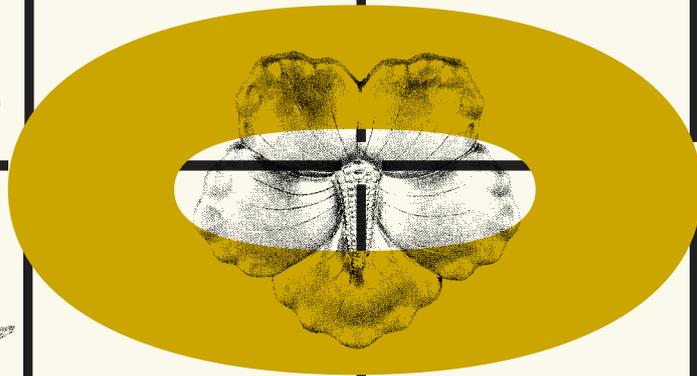
기본소득

2023 봄

#015



Basic



Income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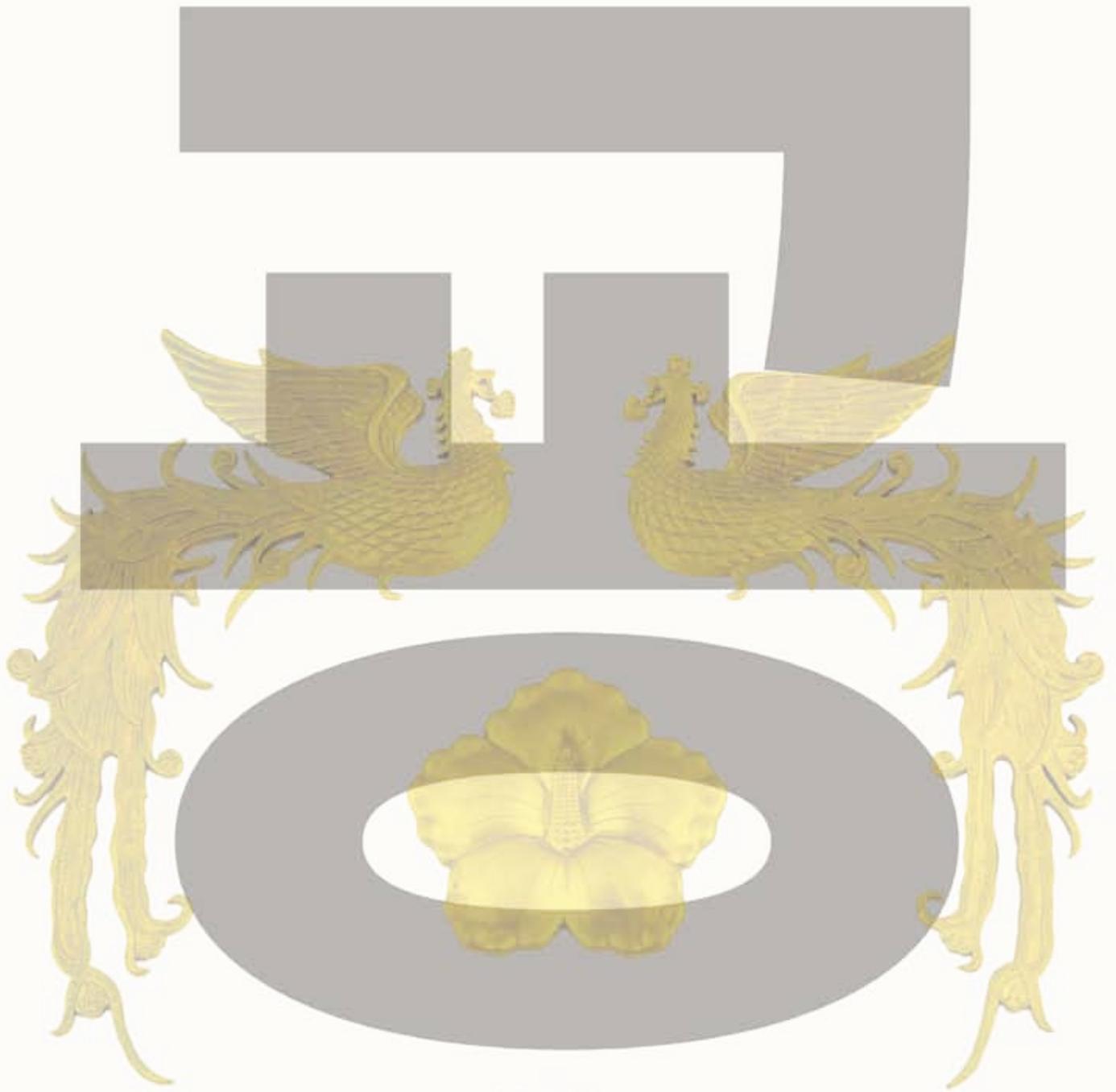
Issue No.15

CONTENTS

머리글	006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_이관형
이 계절의 이슈 1.: 눈떠보니 벼랑_ 윤석열 정부 1년	009	윤 정부 1년, 연금개혁의 경과와 전망 - 제도권 정치의 범위를 넘어 금융·보험자본의 정치로 화한 한국의 연금정치 _ 남찬섭
	014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 _ 이상민
	018	윤석열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 평가 - 핵 발전 사랑 외에 전문성과 책임성 모두 결여 _ 김현우
	023	검찰총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1년' _ 용혜인
	030	무능과 혐오의 정치 1년, 그래도 역사는 진보한다 _ 이주희
이 계절의 이슈 2.: 기본소득의 현장	036	카탈루냐 기본소득, '잠시 멈춤' - 국회에서 열린 '카탈루냐 기본소득 간담회' 후기 _ 오준호
	043	독일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 연구소(FRIBIS)의 윈터 스쿨 참가기 _ 이지은
화제의 인물	064	[김대중] 전남학생기본소득_ 인터뷰 · 정리 이관형
	078	[자우] 너의 '존재'를 응원해 _ 인터뷰 · 정리 한인정
문학	088	[시] 펄쩍펄쩍 뛰며 놀자고 보채는 _ 이영광
	089	[시] 69시간 _ 손택수
	090	[짧은 소설] 겨우 여기 _ 강영숙
	095	[짧은 소설] 디너 코스 _ 최진영

CONTENTS

동향	101	[국내동향] 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현실 속의 기본소득”으로 _ 안효상
	106	[해외학술동향] 기본소득이라는 역사적 어셈블리지 - 『역사적 관점에서 본 보편적 기본소득』_ 조민서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111	정동자본주의 하에서의 기본소득 _ 신승철
기본소득과나	115	청년기본소득 시작점에서 _ 나민진
	117	십시일반 기본소득 기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_ 노혜린
기본소득의 새로운 지평	121	기본소득의 실재를 찾기 위한 여정 _ 김민수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기본소득의 현장

- 스페인 카탈루냐 기본소득실험
- 독일 프라이부르크기본소득연구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이관형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

이맘때면 언제나 등장하는 말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꽃샘추위’라는 말이 있듯이, 봄이 왔다고 하는데 추위가 완전히 물러나지 않아 봄 같지 않다고 느껴서 하는 말일 듯하다. 또 하나는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나 세상 돌아가는 본새가 생동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하는 말이 아닐까한다.

언제부터인지 ‘꽃샘추위’라는 말이 사라졌다. 봄이 왔나 느끼기도 전에 너무 금세 더워진다. ‘꽃샘더위’라고 해야 할 판이다. 세상 돌아가는 본새도 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단한 환경보호론자도, 대단한 애국자도 아닌데 기후걱정, 나라 걱정으로 “춘래불사춘”을 되뇌는 요즘이다.

이번 15호는 ‘이 계절의 이슈1’로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작은 코너를 마련했다. 복지, 경제, 환경, 정치, 사회의 다섯 분야에 대한 간략한 평가다. “안 봐도 비디오요, 안 들어도 오디오”라는 말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성의 더듬이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을 줄 안다. ‘이슈2’는 기본소득의 현장으로 스페인 까탈루냐의 기본소득 실험상황과 독일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 연구소에서 진행한 윈터 스쿨 체험기를 다룬다.

또한 교육기본소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십시일반 기본소득을 진행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자우’ 씨를 인터뷰한다. 계간 《기본소득》을 든든히 괴고 있는 ‘문학’ 코너는 이번 호에도 기대를 빚겨가지 않는다. ‘동향’에서는 2023년 BIEN대회 개최 준비 상황과 피터 슬로만의 『역사적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에 대한 서평을 심는다. ‘함께 만 들어가는 기본소득’에서는 다소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겠으나 현실을 ‘정동자본주의’로 파악하고 그 구조 하에서의 기본소득이 지니는 의미를 서술한 글을 접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나’에서는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폐지에 대한 입장과 십시일반 기본소득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기본소득의 새로운 지평’에서는 기본소득 연구자인 부산대 김민수 박사의

글을 담는다.

봄과 관련하여 “춘색무고하(春色無高下), 화지자장단(花枝自長短)”이란 말도 있다. 봄별은 누구나 어떤 것이나 높낮이 없이 고루 비추나, 꽃가지는 스스로 길고 짧은 차이를 나타낸다는 말이다. 불경에 나온다. 불법(佛法)은 누구나 차별을 두지 않으나, 그 법을 받아 각자가 이루는 것은 천양지차를 보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봄별 자체가 골고루 들지 않는다. ‘춘색무고하’는 영원이지 현실은 아니다.

이 봄,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반지하 전세방에도, 펜트하우스에도 봄별이 골고루 들 날이 올 꺼야. 기본소득을 통해 ‘춘색무고하’의 세상이 열릴 수 있을 꺼야.” 다시 눈을 뜬다. 현타가 온다. “‘춘색무고하’는 개뿔, ‘춘래불사춘’이다.”

BasicIncome Issue 1.

[기획자의 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간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근대 이후 '기나긴 혁명'의 시공간을 살고 있으니 어쩌면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비상사태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1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느끼는 것은 그 일들이 하나같이 전례없는 일이고 그간의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고나면 전대미문의 일이었다고 역사적 퇴행이었다. 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 통치자가 아무 망설임없이 시행령 따위로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일을 일상적으로 행하는가 하면, 그의 즉흥적이고 즉자적이며 즉물적인 판단에 의해 그간 진화시켜온 사회적 체계가 간단하게 파괴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 어느 자리에선가 했던 그의 말대로 그는 국민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않으며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다. 특히나 자기 권리를 호소하는 사람이라면 아예 귀를 닫아버린다. 더 나아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제발 살게 해달라고 읍소하는 모든 이들을 오히려 '기득권 세력'이라 규정하고 모든 통치수단을 동원, 탄압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태산인데 여기서 그치지도 않는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는 모든 국민에게 통치조직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내뱉는 말에는 절대 복종하라고 강요하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우리는 비유하자면 '눈떠보니 벼랑'에 놓이게 되었고, 조금 더 개념적으로 말하면 통치자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법과 사회적 체계의 기능이 정지되는 예외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긴급상황과 역사적 퇴행의 반복이 일상화된 이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이 아노미 속을 응시하고 분석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의 어떤 일그러진 욕망들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해 살피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망나니 칼춤'에 도대체 무엇이 망가지고 있는지를 직시하는 일도 놓쳐서는 안된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아노미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보다 고차의 대안적 기획도 발명해야 한다. 망쳐진 정도가 처참해서 차분하게 바라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럴수록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함은 물론이며, 이것이 이번 호 '이 계절의 이슈 1'를 '눈떠보니 벼랑 - 윤석열 정부 1년'으로 잡은 까닭이다. 이 힘든 일에 선뜻 동참해주시고, 암흑 속에서 강렬한 빛을 보게 해주신 남찬섭, 이상민, 김현우, 용혜인, 이주희 제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윤 정부 1년, 연금개혁의 경과와 전망

- 제도권 정치의 범위를 넘어 금융·
보험자본의 정치로 화한 한국의 연금정치 -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연금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이는 작년 대선 과정에서 연금개혁이 의제로 부상하면서 그에 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대통령실에 설치할 것 같았던 연금개혁특위는 국회에 설치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작년 11월에 설치되었다. 이후 경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국회연금개혁특위(국회특위)는 산하에 연금전문가 16인(공동위원장 2인 포함)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이 민간자문위에 대해 2022년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에 관한 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2023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에 관한 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자문위는 작년 11월 16일 구성 이후 올해 1월 17일까지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직역연금과 퇴직급여 등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1월 27~28일 양일에 걸쳐 8차 및 9차 회의를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여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막판 집중논의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민간자문위는 양일에 걸친 마라톤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 며칠 후인 2월 8일 국회특위는 양당 간사와 민간자문위의 두 공동위원장 간 회동을 거쳐 민간자문위에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수개혁보다는 구조개혁에 관한 논의를 해달라는 주문을 함으로써 요구내용을 변경하였고 이로써 국회특위의 연금개혁논의는 다소 갑자기 경로가 변경되었다. 이를 두고 연금개혁 실패를 전망하는 진단들도 있는데 그런 진단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이지만 그와 함께 국회특위가 경로변경에 이르게 된 과정이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의 성격이 변화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금개혁 정치의 성격 변화를 보려면 1998년부터의 연금개혁 과정 전반을 봐야 하지만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연금개혁과정부터 살펴본다. 2019년 경사노위의 연금개혁논의에 대해서는 흔히 그 의미를 폄훼하는 경우가 많다.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논의는 그 직전 해인 2018년에 실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복지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여론이 모이지 못하고 국회도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시 정부가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 국회로 연금개혁안을 가져가는 전략을 택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당시에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에 연금개혁의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여소야대라는 국회상황과 여당인 민주당마저 연금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상황, 당시의 정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언론 환경 등을 감안하면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이다. 또 연금개혁이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고 보면 그런 점에서도 경사노위를 매개로 한 것은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물론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연금개혁방안에 대해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경사노위의 논의과정에서 다수 안案에 한국사회 연금개혁 역사상 가장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당시 연금개혁안은 세 가지였는데(<표 1> 참조) 이 중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되 보험료율을 12%로 인상(10년 단계적 인상)하는 것이었고¹⁾ 여기에는 한국노총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가 찬성하여 노동계와 시민사회계 그리고 청년단체까지 모두 찬성하였으며,²⁾ ‘나’안은 현행 유지안이었는 데 여기에는 경영계가 찬성하였고, ‘다’안은 소득대체율 현행유지에 보험료율 10% 즉시인상안이었는 데 여기에는 자영자를 대표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찬성하였다. 하지만 경사노위의 연금특위가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이 힘을 잃게 되었고 그에 따라 경사노위 ‘가’안이 다수 안으로서 한국의 연금개혁 역사상 가장 폭넓은 합의를 받은 안이었다는 사실도 그 빛이 바래게 되었다.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논의과정은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준다. 첫째,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다수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연금개혁에서 보험료 인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보험료 인상은 기금소진으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재정안정을 강요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급여향상과 함께 추진되어 연금의 본질적 기능인 보장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1) 당시 ‘가’안에서 보험료율 12% 인상은 결국 9%에서 12%로 인상하는 것이므로 3%포인트 인상하는 것인데 이 중 2%포인트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데(현재 2028년까지 40%로 하향하게 되어 있는 소득대체율이 2019년에 45%였다) 필요한 인상분이었고 1%포인트는 재정안정을 위한 인상분이었다. 당시 재정계산으로 ‘가’안을 택할 경우 기금소진시점이 7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 당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범위와 관련하여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상태여서 연금개혁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 ‘가’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년단체로는 당초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와 청년유니온이 참여하였지만 청년유니온은 연금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명단에서 빠졌다.

<표 1>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의 연금개혁안들의 주요 내용과 찬성단체

(1)	(2) 주요 내용	(3) 찬성 단체
(4) '가'안	(5)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2%	(6)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7) '나'안	(8) 소득대체율/보험료율 현행유지	(9) 한국경총, 대한상의
(10) '다'안	(11) 소득대체율 현행유지-보험료율 10%	(12) 소상공인연합회

출처: 경사노위, 2019,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결과보고

둘째,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매개로 추진하려던 연금개혁은 결국 무산되었는데 그것이 무산되는 과정은 우리 사회 연금정치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경사노위의 논의 이전에 한국 사회는 1998년과 2007년에 걸쳐 이미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모두 재정안정론에 지배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재정프레임에 강하게 지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제도이든 재정은 그 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도 우리 사회는 재정이 마치 제도의 근본인 것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그리하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해서라도 재정안정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본말전도가 일어나고 스스로 진보연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본말전도에 휘말려 재정프레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³⁾ 재정프레임에 갇힌 나머지 경사노위의 다수 안이 한국 사회의 연금개혁 역사상 가장 폭넓은 합의를 이룬 것이고 또 노동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실현된 한 사례임에도 그 사실마저 부정한다.⁴⁾

이런 재정프레임은 재정주의자들에 의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생산되고 언론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언론의 뒷배를 이루고 있는 금융·보험자본에 의해 이용되는데 이는 이번 국회특위 민간자문위의 논의과정에서 매우 극명하게 드러났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간자문위는 1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연금개혁방안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라톤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능한 한 합의안을 만들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관한 단일수치를 도출하지 못하면 수치의 범위를 정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민간자문위의 두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상당수 위원들부터 제시되었다. 하지만 재정프레임을 옹호하는 위원들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범위를 정해서까지 굳이 합의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민간자문위에서 합의안은 불발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다.

3) 사실 경사노위 연금개혁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찬성한 '다'안은 경사노위 연금특위가 종료되는 단계에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갑자기 제출한 안이었다. 당초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되는 보험료에 국고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다수안인 '가'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안을 제시하는 바람에 공식자료상으로는 '다'안에 찬성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당시 위원장은 연금전문가도 아니었는데 그가 막판에 이례적으로 '다'안을 낸 것은 '나'안을 '가'안과 '다'안의 중간 정도 되는 안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나'안을 유력한 안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임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며 이는 그가 재정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재정프레임에 갇힌 채 '정치적 계산'에 의해 무리한 안을 갑자기 제출한 행태는 국회특위 민간자문위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4) 심지어 일부 재정주의자들은 2019년 경사노위 다수 안에 찬성한 청년단체에 대해 청년의 이해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기까지 한다. 이는 청년의 이해관계가 재정주의 프레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단히 오만하며 비민주적인 태도라 할 것이다.



민간자문위가 마라톤회의를 연 1월 27일과 28일은 금요일과 토요일이었는데 회의 종료 후 각 위원들에게는 민간자문위가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므로 민간자문위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국회특위에서 최종결정이 있기 전까지 함구해달라는 문자가 전달되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난 1월 30일 월요일에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크게 실렸다. 이 기사는 재정주의자들의 인터뷰만 편향적으로 실은 채 보험료 인상이 합의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다음날 민간자문위가 보도 자료를 내어 합의된 바 없다고 했고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보험료 인상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수많은 언론이 보험료 인상을 보도하고 난 후였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 합의가 보도된 다음날에는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는 보도가 수많은 매체를 타고 나갔다. 그 다음날에는 국민연금가입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는 내용이 수많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러한 보도들에는 기금소진이 항상 빠지지 않고 친절하게(?) 거론된다. 그리고 또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젊은 세대는 보험료 부담에 빠질 것이라는 내용도 크게 보도된다. 그리하여 결국 국회특위가 연금개혁을 통해 더 내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게 하면서 받는 돈은 그대로 받게 하려 한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회특위는 민간자문위에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요구사항 자체를 바꿔버렸다. 민간자문위에서 합의되지도 않은 보험료 인상과 수급연령 및 가입연령 조정을 합의되었다고 보도해버림으로써 결국 정치권으로 하여금 그 어느 것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나아가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전체적인 생애주기와 노동주기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것마저 연금의 재정프레임에 갇히게 만들어 그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사실 금융·보험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이 달가울 것이 없다. 언론이 보도한 대로 정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5%로 인상하면 아마 우리 국민들은 민간연금이나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금융·보험자본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다. 2019년 경사노위 연금논의에서도 보험료 인상에 끝까지 반대한 주체는 노동계가 아니라 경영계였다. 그리고 금융·보험자본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도 원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부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은 민간연금이나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보험자본은 국민연금을 현재의 규모 그대로 유지시켜(혹은 더 축소시켜) 민간연금의 지분을 침해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실제 의도인 것이다. 언론은 연금개혁 부진의 탓을 제도권 정치에 돌리지만 기실은 연금정치 자체가 금융·보험자본의 이해관계에 지배당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으며 언론이 그에 앞장서서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것이다. 자본의 이해관계에 친화적인 정권이 집권하고 그 세력이 연금개혁을 추진하자 자신들의 의도를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재정주의자들의 재정프레임은 이런 의도에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보험자본의 이해관계를 거스를 생각이 없는 현 정부 하에서 국민연금의 제도개혁은

전망이 어두울 것 같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재정계산결과 및 그에 따른 연금개혁방안을 법률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내놓아야 하지만 그 방안이 나오더라도 아마 연금의 제도개혁은 어려울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이렇게 연금의 제도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가 금액에서 일치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40만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연금기금의 수익을 강조하여 기금운용거버넌스를 바꾸면서 이를 연금개혁으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다. 즉, 지난 2월 24일 기금운용위원회의 3명의 상근전문위원 중 1명을 검사출신 인사로 선임하였고 이어 3월 7일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비상근전문위원 위촉방식을 바꾸고자 기존에 6명 전원을 가입자단체 추천으로 위촉하던 것을 3명만 가입자단체 추천으로 하고 나머지 3명은 정부가 금융·투자전문가들 중심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안을 회의 직전에 공지하고 회의 당일 상정하여 사실상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기금운용에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기금을 금융자본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정권)가(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현 정부의 연금개혁은 제도로서의 연금은 현재의 모습과 규모 그대로 두어 민간금융자본에 해를 끼치지 않게 묶어두는 한편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올려 포퓰리즘을 극대화하고 거대하게 쌓인 연기금은 금융자본의 이해 속에 놓이게끔 거버넌스를 개악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연금개악에 재정주의자들의 재정프레임과 기금소신론은 계속 활용될 것이다.

현 정부가 자본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벌이는 연금개악과 같은 사례는 연금 외의 다른 사안에서도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권도 자신들이 내거는 복지정책의 표제어에 복지혜택의 대상에 낙인이 따를 수도 있는 ‘약자’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내걸면서 ‘약자복지’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정권은 그만큼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후안무치한 정권인 것이다. 게다가 사회서비스에서는 부동산개발에서나 보던 프로젝트파이낸싱 같은 기법을 동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노동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그 노동이 배제된 자리에 포퓰리즘과 약자와 개발을 채워 넣어 복지를 시혜와 시장원리로 지배되는 장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 혹자는 기초연금을 기본소득의 전단계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선거 때마다 급여수준이 올라가는 기초연금의 정치는 사회권을 관철하려는 건전한 복지정치가 아니라 국민연금은 자본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묶어두고 국민연금이 그렇게 묶이게 되었다는 사실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끔 하려는 표퓰리즘 정치에 의한 것이다. 이런 정치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커지면 재정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제도를 축소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 가면 현 정권은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 확대의 경로와 기제를 지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바꿔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우리 모두의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계속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측은 지난 정부가 지나치게 확장 일변도의 재정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전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의 좀 거친 주장은 지난 문재인정부가 공간을 거덜 냈기 때문에 건전 재정 유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측은 고물가와 경기둔화 상황에서 국가가 재정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의 좀 거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예산 편성으로 서민의 삶이 피해를졌다고 한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이 둘 사이 중간 정도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진실은 이 논쟁 바깥에 존재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정부가 확장 일변도 정책을 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고 이번 정부가 건전 재정 또는 긴축재정을 펼쳤다는 평가도 정확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IMF 일반정부 재정수지를 통해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재정지출 정도를 파악해 보자. 문재인정부가 취임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한 2017년부터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1% 내외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이전 박근혜정부 때보다 2017년, 2018년 재정수지 흑자 폭이 더 크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는 -2.2%의 비교적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당시 다른 선진국 평균 재정수지 적자 -10.4%와 비교해보면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둘째 해인 2021년도부터는 재정수지가 0으로 곧바로 균형재정을 기록한다.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큰 폭의 흑자재정을 펼치다가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적자재정을 펼쳤지만, 그 적자 규모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작은 규모였다. 다음해인 2021년부터는 균형재정을 회복했다. 다만, 2022년에는 다른 나라는 재정수지 적자 폭을 줄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시 증가하여 -1.8%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도 우리나라 재정수지가 다시 악화한 이유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제2차 추경에서 무려 55.2조원의 추가지출을 편성했던 영향이 크다. 즉, 최소한 IMF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확장재정, 윤석열정부는 건전재정을 운용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결국, 윤석열정부의 재정정책을 건전재정이라고 칭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긴축재정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경제적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

IMF 통계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통계와 달라 낯설 수 있겠다.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했던 재정수지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창의적으로 개발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사용하는 방식이다. 용자금액 전액을 지출 금액으로 간주해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기재부의 통계를 보는 것보다는 IMF의 재정수지를 보는 것이 더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의 재정수지를 국제비교할 수 있다.

IMF 일반정부 GDP 대비 재정수지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선진국평균	-3.7	-3.1	-2.6	-2.7	-2.4	-2.4	-2.9	-10.4	-7.2	-3.6	-3.7
G20	-4.0	-3.4	-2.9	-3.1	-2.9	-3.0	-3.5	-11.4	-8.3	-4.3	-4.4
프랑스	-4.1	-3.9	-3.6	-3.6	-3.0	-2.3	-3.1	-8.9	-6.4	-5.1	-5.6
독일	0	0.6	1	1.2	1.3	1.9	1.5	-4.3	-3.7	-3.3	-2.5
이태리	-2.9	-3.0	-2.6	-2.4	-2.4	-2.2	-1.5	-9.6	-7.2	-5.4	-3.9
일본	-7.6	-5.6	-3.7	-3.6	-3.1	-2.5	-3.0	-9.0	-6.7	-7.9	-3.6
한국	0.8	0.6	0.5	1.6	2.2	2.6	0.4	-2.2	0	-1.8	0.1
스페인	-7.5	-6.1	-5.3	-4.3	-3.1	-2.6	-3.1	-10.3	-6.9	-4.9	-4.4
영국	-5.5	-5.5	-4.5	-3.3	-2.4	-2.2	-2.2	-12.8	-8.0	-4.3	-2.3
미국	-4.5	-4.0	-3.5	-4.4	-4.6	-5.3	-5.5	-14.5	-10.9	-4.0	-5.7

출처: IMF Fiscal Monitor Oct. 2022

윤석열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23년도 재정수지는 다시 균형재정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악화하고 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3년 재정수지는 적자로 선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균형재정을 편성한 만큼 적극적인 확장재정이라고 평가하기에도 어렵지만, 건전재정이나 긴축재정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합리적이지는 않다.

정부는 확장재정도 아니고 긴축재정도 아닌 2023년도 재정 상황을 ‘따뜻한 복지와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국가 예산 지출은 반드시 세입은 물론 부채까지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재정의 트릴레마(삼중 모순)라고 한다. 재정의 트릴레마란 복지 등 지출을 늘리고자 한다면, 증세하거나 또는 부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감세 조치를 취했다. 감세하면서 따뜻한 복지와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2023년도 보건복지 지출 증가율은 2022년 대비 3.8% 증가에 불과하다. 2022년 물가상승률이 5%가 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7% 증가했다. 실질 복지지출 규모는 감소하였다는 의미다. 또한, 2023년 정부 총지출 증가는 5.2%이나 총수입 증가는 고작 2.8% 증가에 불과하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증가하니 2023년도 재정은 충분히 건전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경제 상황에 따라 국세 증가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까지 펼친 결과는 따뜻한 복지와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은 민간 중심으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은 첫째, 수출 활성화, 둘째 투자 촉진 및 규제 혁신 셋째, 신성장 4.0 전략, 넷째, 중소기업 활성화, 다섯째, 공정시장 구현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정책목표가 진척되는 것 같지는 않다. 수출은 2022년 4분기 수출실적 -10%, 2023년 1월에는 -16% 감소다. 설비투자 지수는 지난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음수를 기록하며 신성장 4.0 전략은 모호하다. 최근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에 한국형 챗GPT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2023년 올해는 기존의 구성 전략을 탈피한 신성장 전략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인공지능 관련 예산금액을 보면 2022년 1.2조원에서 무려 34% 감액한 9천억원이다. 예산 지출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신성장 전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윤정부는 특히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투자를 늘린다는 이유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공제율을 최근 15%로 크게 확대했다. 기존 투자세액 공제율을 6%에서 2022년 연말에 여야 합의에 따라 8%로 확대한 직후에 윤대통령은 국회 합의안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윤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최근 3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15% 추가 확대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현재 반도체 위기는 반도체 기업의 현금 사정에 따라 투자가 부족해서 발생한 위기가 아니다. 단순히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이 반도체 위기를 풀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 분업을 통한 반도체 발전 방향의 퇴조와 미국의 칩스액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팍리스 업체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어떻

게 키우고 파운드리 전문업체의 분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순히 설비투자 세액공제에만 수조원의 돈을 쓰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 단지 국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미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다.

또한, 근로 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동 개혁은 일관된 정책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60시간 근무가 필요하다고 하다가 최근 노동자 건강을 위해 무리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확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경제 둔화는 윤정부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부정적 대외 경기 여건과 물가 불안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다만, 이렇게 경기가 불투명할수록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정부의 정책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윤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의 정책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실상 거짓말을 하거나 즉흥적으로 바꾼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3년 정부 세입예산안을 보면 전년보다 16.6% 국세 수입이 상승한다며 이는 정부의 '주요 세목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의 일환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입 기반 확충에 따라 16.6% 상승한 것이 아니라 실재는 1% 증가에 불과하다. 2022년 세입 예측 오류에 따라 수정되기 이전 수치에 대비 16.6% 상승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미 세입 예측 오류를 사과까지 하고 2022년 세입 규모를 수정한 이후에도 다시 수정전보다 16.6% 증가했다는 홍보는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법인세 최고 구간 감세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최고구간이 아니라 전 구간 1%p 감세했다. 법인세 전 구간이 1%p 감세될 것은 시장 참여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이다. 마찬가지로 이미 3년 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올해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도 다시 법을 바꾸어서 미뤘으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도 2022년 갑자기 인하하고는 올해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시 인상한다는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즉, 이미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도 다시 뒤엎어지는 일이 많다. 또한, 단 한 번도 거론조차 되지 않은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여론의 추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 180도 바뀌는 일이 많다. 모두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일이다.

요즘과 같이 물가는 오르지만,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는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대단히 제한적이다. 경기를 부양하자니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자니 경제성장률이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누가 경제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민적 합의를 통해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 또는 정부가 무엇인가 한다는 이미지만을 위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즉흥적 경제 정책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 평가

- 핵 발전 사랑 외에 전문성과 책임성 모두 결여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

1. 탈 원전만 과잉 쟁점화되었던 20대 대선

지난 정부 기후 에너지 정책의 기초였던 “탈 원전과 에너지전환”은 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의 의지에 기대어 추진되었고 정치 세력의 집단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서 구조적 취약성을 보였다. 그래서 핵 발전 축소와 온실가스 감축, 핵 발전 수출, 핵폐기물 처리 정책 사이에 정합성이 없었고, 야당에게 비판의 여지를 계속 제공했다. 이는 정부가 바뀐 이후 탈 원전 정책이 완전히 뒤집히는 결과로 이어졌다.

20대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찾아 보기는 어려웠다. 정의당처럼 기후위기를 선거 제1의제로 표명한 경우도 있지만, 여론조사 3위 내의 후보들에게서 기후위기는 전혀 심각한 주제가 아니었다. 그나마 지난 선거들보다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이야기가 많아진 것이 다행일 수 있겠지만, 다분히 국제적 압력과 기후운동의 영향 덕분이었다.

그럼에도 탈 원전 공방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탈 원전으로 탄소중립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핵 발전 증설을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의 기술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 로드맵을 이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지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논쟁의 중심이 된 것은 울진에서 추진되다가 문재인 정부가 취소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문제였다. 사업이 공식적으로 취소됐기 때문에 재개가 아니라 신규 추진이 맞지만, 어쨌든 부지 기초공사가 되어 있고 헤드 부품 일부가 만들어져 있으니 하던 사업을 계속하자는 논리였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를 재개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11기도 연장 가동하면 2030년까지 40%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 탈원전 폐지,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로 기조 변화

2023년 3월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 과제를 통해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미래시장을 창출하고 선도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원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2030년 10기)의 계속 운전이 핵심이다.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현재 석탄발전 57기 운영 중)하지만, 진행 중인 7기의 석탄 화력발전은 이미 인허가가 끝났다는 이유로 계속 추진한다. 투자 정책으로는 기후 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텍스노미’ 확정에 따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최근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2030년까지 핵 발전 32.4%, 석탄발전 19.7%, LNG발전 22.9%,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21.6%의 비중으로 한다. 문 정부 때의 핵 발전과 재생에너지 목표 수치를 서로 뒤집은 것이다.

10차 전기본은 ‘사업자의 의향’을 담아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대해 부산과 울산 주민들은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석탄발전 폐쇄 계획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사전공개본에 따르면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과 가스, 두 화석연료 발전원이 무려 4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삼척과 강릉 등에 신규 석탄발전의 건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신호다.

3. 탄소중립 정책은 계속, 그러나 현실성 고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들이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큰 틀은 이어받고 있지만, 의지와 추진



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없는데다가 ‘탈 원전 폐지’의 고집이 더 압도적으로 작용하여 기후 정책 전체를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2022년 10월, 새 임기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 감축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2023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위촉직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하였다고 주장한다.

윤 정부는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실은 산업계의 이해 반영이 미흡하고 정부 주도 하향식이었다고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도전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경직화 및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함께 산업계를 비롯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히는데, 이 ‘실현가능성’ 역시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포장하는 말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는 세부 이슈에서 오히려 현실에서 상충하는 모습을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게 K-택소노미 논란이다.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이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의 한국판이다. 환경부가 2021년 12월 30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 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를 뜻한다. 여기서 녹색경제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는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K-택소노미 초안에는 원전이 배제되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원전에 관한 기준은 EU-택소노미 기준에 비해 느슨하다. 쟁점은 사고저항성 핵연료의 적용 시기인데 EU-택소노미는 2025년부터 정했으나 K-택소노미는 ‘원전 신규 건설’은 바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계속운전’의 경우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기준도 쟁점이다. EU-택소노미는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해 문서화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K-택소노미는 고준위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만 담겼다. 현재 한국 정부의 고준위 처분장 계획은 방폐장 부지 선정 후 37년 내 확보이므로 설령 올해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2060년에야 처분장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느슨한 기준 탓에 원전 산업계조차 이 K-택소노미가 시장에서

투자 기준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하자 국내 재생에너지업계와 환경단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2022년 11월 28일 피어스 대표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를 강력히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한국 정부 초안에 담긴 재생에너지 목표가 RE100 기업들의 친환경 전력 조달을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RE100 회원사들 사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회원사들은 현재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2% 남짓만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RE100에 가입한 해외 기업들 중 52곳이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재생에너지 수요가 예상보다 더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한은 또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낮추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존 제도상 의무공급비율은 12.5%에서 2026년 25%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RPS 비율을 하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4. 향후 예상 쟁점과 과제

첫째, 문 정부에 이어 윤 정부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절성은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한국이 제출한 NDC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COP27에서도 한국은 후퇴 금지와 상향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목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30년까지 NDC 목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몇 건의 소송(청소년 기후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의 적합성과 현실성 문제다. 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원전 산업 복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핵 발전을 30% 이상 비중을 기계적으로 설정하고 다른 에너지원 구성을 이에 종속시켰다. 하지만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법률적 과정, 노후 원전 수명연장의 기준과 기술 및 비용 문제, 지역민과 지자체의 반발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원전 수출 다변화에 원전 생태계의 존망을 걸고 있지만 해외의 대규모 수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에 따른 관련 업계와 RE100 단체의 반발, 그리드(송배전망과 백업 전원) 조기 확충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도 쟁점이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 역시 산업과 일자리 정책 방향, 법제도, 이해당사자 참여 모두에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석열 정부의 2기 탄소중립위원회는 그나마 노동조합 인사 참여는 전무하다. 정의로운 전환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는 지역(충남 탈 석탄,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등)의 이해관계자와 노동자 조직 대변성이 매우 부족하다. 정부의 관련 정책과 법률은 기업 위주 지원과 일자리 취업 알선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지역 공동체 회복과 역량 강화 청사진이 부재한 형편이다.



넷째, 에너지 요금과 세제 관련 쟁점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요금 현실화와 새로운 세금(탄소세) 도입이 요구되고 있고 한국전력이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에너지 가격만을 고려한 임시변통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만을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기후환경 거버넌스의 개선 필요성이다. 윤석열 정부에 와서 탄소중립위원회는 오히려 더욱 전문가와 산업계 주도로 구성되었고, 광범한 기후위기 당사자와 사회 부문들이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탄소중립위원장과 산업부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 탄소중립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섯째,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하여 전환을 관리할 정부부처 개편(예. 기후에너지부) 논의가 유야무야 되고 있으며,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정책 정합성 확보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윤 정부의 핵 발전 사랑이 끌고 가는 기후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목표 사이의 정합성마저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세부 정책 수단도 미흡하여, 기후 보호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시장의 추세와도 크게 동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앞으로 국내 외에서 많은 갈등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값비싼 수업을 치르게 만들 것이다.

윤 정부가 기후 에너지 정책에서 보이고 있는 난맥상은 기실은 과거 정부들의 정책 프레임이 갖는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시장에서의 단기적 이윤과 경제의 총 규모 성장, 임기 내의 정권의 인기만을 고려한 그야말로 하던 그대로 business-as-usual 정책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정부가 문 정부의 정책을 뒤집으며 빚어내고 있는 혼란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시장 지상주의 보수 정부와 맞서면서도 기후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더 큰 전환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싸워나가는 여러 트랙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필요한 변화를 요구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어려움 모두를 시민들과 가감 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정권은 짧지 않지만 전환은 훨씬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악화될 기후와 환경 속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나날은 더욱 길다.

검찰총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1년'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통합의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 뒤에 걸려있던 문장이다. 역대 대통령의 당선이 모두 그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는 더욱 많은 타이틀이 쏟아졌다. 제6공화국 이후 공직 선거에 처음 출마한 정치 신인이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첫 사례였고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었으며,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동시에 역대 최소 득표차를 기록하며 당선된 대통령이었다.

일명 집권 10년 주기론을 깬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보수정권이 이렇게 빨리 다시 집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던 진보진영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초 접전을 이뤘던 대선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보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평가된다.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냈던 촛불 민심을 기반으로 출범한 민주정권 역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끌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엄중한 경고였다. 권력주기의 단축은 정권심판론의 정서가 더욱 거세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접전 끝에 겨우 승리를 움켜쥔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당선 직후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며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모시겠다”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로부터 1년이 흘러온 지금, 대통령이 약속한 ‘헌법정신 존중’, ‘의

회 존중’, ‘야당 협치’는 눈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없애겠다고 약속했던 ‘분열과 분노의 정치’만이 남았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존재감을 각인 시켰던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남기겠다’는 검사동일체 사고로 불법 선거개입 의혹까지 감수 해가며 결국 여당을 사당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윤석열 정부 1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낡은 극단정치의 부활이다.

검찰 출신 인사 70여명 진출, 검찰공화국으로 퇴행하다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직행한 대통령은 주요 요직의 인사들 역시 검찰 출신 인사로 가득 채웠다. 취임 1주일 만에 이뤄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격 발탁은 윤석열 대통령이 펼칠 ‘검치’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후 행정부와 정부여당, 대통령실의 주요 요직에도 검찰 출신 인사가 속속들이 배치되었다. 윤석열 정부 100대 요직 중 검찰 출신은 10%가 넘는 12명에 달한다. 두 자릿수에 달하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 내각에 발탁되는 일은 전무후무한 사례다.

검찰출신 인사들은 노른자로 꼽히는 핵심 보직에 배치되었다. 역대 정부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에 각각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정과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배치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 대통령은 자신의 손과 발이 될 대통령실 핵심 요직을 전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웠다. 정부 요직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검찰 출신 장관만 4명인 데다가, 주요 요직 중 이완규 법제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정승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검사 출신이다. 그야말로 분야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검찰 출신들을 기용한 것이다.

‘검찰일색’인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이며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검찰이 사회 전반을 다 장악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투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나 낙마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가진 경찰마저 틀어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가 국수본부장에 배치되어 수사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 아들 학폭 논란 따위는 흠결도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인사검증의 키를 쥐고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정순신 임명을 통과시켰다. 검사동일체 정부를 향한 대통령의 의지가 국가 차원의 인사시스템까지 마비시켰다.

집권 1년차가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검찰총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들이밀고 있다. 상명하복과 일사분란의 수직적 검찰 문화가 국정 작동 원리로 기

능했다. 대통령 본인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이 잘못 들은 것이라며 도리어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는 권위주의는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마저도 다음날 대통령실의 한 마디에 번복되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2023년도 예산안 등 크고 작은 국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며 무협치로 일관했다. 국민 159명을 잃은 참사 앞에서 이상민 장관을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대통령의 ‘제사람 지키기’는 결국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소추라는 결과를 낳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검사 동일체’ 국정운영 기조로 인해 여야 간 타협은 실종되었고 강대강의 극한 대립만이 남았다.

수사·기소·압수수색의 사정정국의 포문이 열린다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민정수석실 폐지를 제1과제로 꼽으며 했던 말이다. 윤 대통령이 ‘사직 동팀’까지 거론하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데에는 민정수석실이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하며 정적을 통제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시각이 깔려 있었다. 또한 법과 공정을 내세우며 당선된 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초법적으로 휘둘러지지 않게끔 스스로 경계하겠다는 뜻도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당선 이후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은 물론, 감사원까지 동원해 전 정권 때려잡기에 몰두하며 사정정국의 포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대통령의 칼날이 향한 곳은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제1야당 대표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공안 수사1·2·3부를 전부 내세워 275차례에 걸친 무분별한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찰은 정작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물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 부족으로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어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의 무리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치 검찰’의 면모뿐이다.

전 정부를 향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역시 점점 그 속내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달 감사원은 ‘전 국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정부가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는지, ‘건전 재정’을 해친 것은 아닌지 조사하겠다고 선포했다. 현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감사원이 정권의 칼자루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전 정부 트집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감사원의 행보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이 소신이었음을 증명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 역시 시작되었다. 검찰은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노조 때리기’라는 목표 하나로, 불공정하고 비논리적인 수사를 자행했다. 경찰과 검찰은 노동조합에 무려 ‘사용자에 대한 공갈협박죄’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핑계 삼아 시민사회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반대세력을 ‘간첩’으로 낙인찍는 국정원의 경찰의 공안몰이 역시 부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선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민주노총을 해체하겠다’는 반 헌법적인 발언으로 못매를 맞기도 했다. 모두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대통령령의 관저에 불려가 축하 만찬을 대접받고 난 직후 일어난 일이었다.

국정원은 몇 달째 민주노총에 침투한 간첩을 수사한다며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증거와 수사결과를 제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심지어 최근에는 기자로 위장해 노조의 기자회견을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히며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실 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과 수사기관만 알 수 있는 피의사실이 보수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정부여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받아 정부의 실정에 비판하는 세력은 모두 ‘종북간첩단’의 지령을 받는 세력인 양 매도하는 사정 드라이브가 반복되고 있다. 이쯤 되면 정치적 낙인을 가하고 자 없는 죄를 만드는 수준이다.

‘합법을 가정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려는’ 사정기관들의 초법적인 행태가 정치와 언론, 시민사회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침범하는 사정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 민생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노조 때리기와 사정정국으로 지지율을 올리려는 알팍한 계산으로 보인다. 더욱 비판적인 점은 이제 정부여당마저 사당화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정 드라이브가 더욱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참사 앞에서도 ‘법적 책임’만 찾는 무책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무치無恥’는 159명의 국민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 앞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참사를 수습하고 책임을 통감했어야 할 대통령은 마치 수사 지휘하듯 참사를 대했다. 참사 직후였던 10월 31일,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밝힌 참사의 원인은 ‘주최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였다.

‘법령미비’라는 대통령의 한 마디가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했다.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 이후 한덕수 총리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의 책임자들은 모두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버텼다. 총리는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주최가 없는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군중 관리를 할 수 없다”며 제도상의 문제로 책임을 회피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유례없는 사안이라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었다”라며 문제를 축소하기 바빴다.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국민의 분노를 키운 것은 바로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사 이후 14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유가족과 국민을 향한 책임 있는 사과와 다짐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참사 6일 만에 종교계의 추모행사에서 “죄송하다”고 한 마디한 것이 그 ‘사과’의 전부였다.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과도,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으니 그 화살이 피해자와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을 향하기 시작했다.

참사 앞에서 ‘무한책임’을 이야기했던 윤석열 정부는 정작 정부의 책임자 중 그 누구도 경질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도리어 여당 지도부를 향해 “장관 하나 못 지키나”라고 호통을 치며 이상민 장관 방탄에 앞장섰다. 이미 대통령과 한 몸이 된 국민의힘 역시 수사를 핑계로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사법적 책임의 증명’과 ‘법적절차 이후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법조계 인사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여당에서 ‘법적절차’와 ‘사법적 책임’의 의미를 모를 리 없다. 참사의 책임을 사법적 책임으로만 선을 긋는 국민의힘의 태도에는 정부의 ‘책임’을 지워내겠다는 함의가 깔려 있다. 일선 경찰, 혹은 일선 소방관 일부의 ‘사법적 책임’만 따지는 수사에서는 국가의 책임은 축소되거나 지워진다. 참사의 책임을 형사책임으로 좁히려는 특수본의 몰아가기식 수사는 일선 공무원들의 잇따른 자살을 낳았다.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수사를 하듯 참사를 대하여 뒷선의 책임만 끊어내려고 하니, 현장에서 뿔 공무원들에게 형사책임의 압박감이 고스란히 전가된 것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던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된 책무를 스스로 내던진 대통령 본인에 의해 형해화되었다.

이상민 장관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삼권분립·민주주의·법치주의 모두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함은 점점 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보고서에서 국정조사 결과를 ‘정정’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국감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문서를 가지고 사적 의견을 표출한 행정권 남용도 문제지만, 정정을 요청한 내용이 더욱 심각하다.

행정안전부가 법령 위반까지 감수하면서 정정을 요청한 내용은 이상민 장관 탄핵의 핵심 사유가 되었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과 중대본 설치, 유가족 명단에 대한 발언들이다. 이상민 장관이 직접 국정조사장에 출석해 증인선서까지 한 후 증언한 내용에 대해, 국회가 지적하고 탄핵까지 소추한 사안에 대해 정정을 해달라는 초법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세력을 탄압할 때는 법치주의를 몽둥이처럼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법과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검사동일체에 이은 당정동일체의 등장... 야3당 공조로 맞서야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에 맞추어 열렸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희당’의 완성으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동일체’는 ‘당정동일체’로 이어졌다. 대통령은 당무개입을 넘어 불법적인 선거개입까지 불사하며 ‘사당화’의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부터 대통령의 조직적 사당화 프로젝트는 시동을 걸고 있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은 5번에 걸쳐 드러났다. 이준석 당 대표를 쫓아낸 것이 그 시작이었고 당원 투표 100%로 룰을 바꿔서 유승민 전 의원을 찍어 누른 것이 두 번째였다.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장에서 해임하고 이조차 부족해서 초선의원 연판장까지 돌려서 주저앉힌 것이 3번째 당무개입이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대통령은 정무수석을 통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김영우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내쫓으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적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전당대회 막바지에는 대통령실 직원의 김기현 후보 선거운동 녹취까지 공개되었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자, 윤희관들은 해당 문제를 두고 ‘당정동일체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려 들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단순히 ‘당정동일체냐, 당정분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사당화 시도 그 자체였다.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서 국회를 조직하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시민사회를 조직했던 치밀하고도 노골적인 사당화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당화’ 정치의 약점은 중도층 확장에 실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1년 전 대선 때처럼 ‘우린 저들과 다르다’고 내세우며 허울 좋은 약속 몇 개 한다고 민심을 끌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1년 동안 한국 사회가 더 나빠졌다고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못 살겠다, 바꿔보자’의 민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총선을 1년 남긴 지금, 대통령의 반 헌법적 폭주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민주진보진영의 공조가 여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유다. 반민주적인 정부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주눅 들지 않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내었던 야3당의 단호한 행보에 국민들은 호응과 지지를 보냈다. 지금의 정국 역시 윤석열 정부의 반 헌법적 퇴행에 맞서 야3당의 공조를 강화해 민생을 지켜야 할 때이다.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여당에 맞서 국정조사 특위 설치를 가결시켰던 것처럼,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기어이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정치가 해야 할 도리를 우직하게 해내야 한다.

오늘날의 검찰공화국을 만든 데에는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자리를 내어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역시 작지 않다. 촛불 이후 정치의 과제는 국민이 열망했던 개혁과제를 완고한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서라도 빠르고 제대로 수행해내는 데 있었다. 개혁과제 앞에서 좌고우면했던 집권당의 행보는 180석의 대승 이후 불과 1년 뒤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탄핵대상이었던 국민의힘에게 패배한 근본적 원인이었다.

1년 후 총선에서 뼈아픈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제1야당 역시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의 최전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위기에 대응조치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민주진보진영은 민생을 지키기 위한 대안과 개혁으로 정부와 맞서야 한다.

조금 더디지만 대안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한국판 횡재세와 탄소세 등이 대표적이다. 이뿐 아니라 최근 반도체, 자동차산업 등과 연계된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한국의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오로지 소수의 대기업에게 독식 되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 민생 폭주에 맞선 대안 중심의 공조 드라이브로 우리 사회의 복합적 경제위기를 해소해 나가야 국민의 국가와 정치에 대한 신뢰 역시 회복할 수 있다.

기본소득당 역시 늘 그래왔듯 반대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서너 걸음 앞선 대안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멈추도록 막아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그 책무를 기꺼이 받아 안아, 가장 명확한 분석과 대안을 토대로 반 윤석열 전선을 새롭게 구축하며 야3당의 공조를 견인해야 할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내겠다는 약속으로 이 글을 맺는다.

무능과 혐오의 정치 1년, 그래도 역사는 진보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역사학자 네틀 J. P. Nettl은 “개념적 변수로서의 국가”라는 에세이에서 미국, 영국, 유럽내륙 국가의 ‘국가성 stateness’에 내재한 제도적, 문화적 차이를 밝힌 바 있다. 역사적 발전 경로의 차이로 국민 주권이 주로 발현되는 곳이, 유럽은 중앙행정기구, 영국은 정당과 의회, 그리고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미국의 경우는 특정 기구보다는 법과 헌법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삼권분립 하의 대통령제이지만, 권위주의 정권의 영향으로 대통령실과 행정부에 항상 과도한 힘이 실려 왔다. 훌륭한 대통령일 경우 권력을 독점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정치가 퇴행하며 경제와 민생이 극도로 불안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했다. 윤석열 행정부의 일 년보다 이를 더 잘 보여주는 사례는 드물다. 어떤 정권이라도 일 년 차에는 보기 힘든 엄청난 사건 사고와 함께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는, 혼돈의 한 해가 저물 무렵, 갑자기 세 가지 ‘개혁’이 등장했다. 이미 우리 교육은 신자유주의적으로 서열화된 체제가 고착된 상태이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유지, 강화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교육개혁일 수 있는가? 또,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을 국민에게 단순히 떠넘기겠다는 것이 어떻게 연금개혁일 수 있는가? 따라서, 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은 개혁이라는 명칭이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노동’ 하나로 축소된다.

노동 '개악'과 지키지 않는 공약들

초장시간 노동을 '유연화'로 포장해 추진하려는 윤 정부의 노동정책은 행정 권력의 대표적인 남용 사례이다. 경영계 의견을 여과 없이 받아 지금도 세계 기준에서 매우 후진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을 완화하는 대신 주당 70시간 안팎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공을 들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확대는 여소야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법이 개정될 수 있는데, 국회나 노동계와의 논의 없이 이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 권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이미 IT업계 등의 요구로 특정 업무에 한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노동계의 반발로 개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이다. 특별연장근로 대상 선정이나 근로시간면제 업종은 법의 개정 없이 행정부의 의지로 가능하므로 사회적 합의 없이도 초장시간 노동이 확대될 수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보완 대책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한 탓에 2019년 9백여 건에 불과했던 승인 건수가 2021년 6천 건이 넘게 폭증한 바 있다. 윤 정부는 이런 문 정부보다 더 나아가, 신청되는 특별연장근로를 거의 다 승인해 주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초부터 9월까지 약 반년을 조금 넘긴 시기에 이미 7천 건이 넘는 연장근로가 승인되었다. 장시간 노동은 영세한 무노조 기업에서 더 제약 없이 행해지는 만큼, 산재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 노동조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행정 권력의 남용을 넘어 오용에 해당한다. 지난 5년간 노조에 엄청난 액수의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말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고보조금을 받은 노조에게 그 보조금에 대한 회계자료 외에 노조 자체의 조합비 회계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노동운동이라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월권이며, 경영자 단체 등 다른 시민사회 결사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조차 잘못된 일이다.

노조에 대한 공격이 이런 이슈에 반응하는 특정 집단을 자극해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판단된다. 20대 대선 결과는 0.73% 차이라는 박빙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신념체계가 충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시장 정의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과 성과주의 원칙의 뒤늦은 확산이 강렬하지만, 바로 그런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좌절과 일자리 위기에 따른 복지 수요도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험을 통해 복지의 '보편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친재벌과 친기업에 지나치게 경도된 정책은 중산층화된 노조원과 그 가족 구성원의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두게 만드는, 그래서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만일 윤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길 원한다면 산별 노조의 핵심적 교섭내용에 대한 효력 확장을 포함, 단체교섭을 집중화할 수 있는 구조의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해야만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문제제기를 한 중소기업의 대기업의 보복 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없이는 대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는 실행되기 어렵다.

노동과 관련된 윤 행정부의 더 큰 문제는 행정 권력의 오남용을 통해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약속하고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일들이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대선 기간 출간된 국민의 힘 공약집에서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 제화”하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당시 한국노총에서 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기 초반에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미 임기 2년 차를 앞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한국노총이 대선주자에 요청한 답변서에는 이 외에도 “비정규직 사용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율의 고용 보험료를 부과”하고, “매달 통상임금의 10%를 적립하여 비정규직 고용 종료 시 고용안정 지원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공약을 통해 표를 받고 승리한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대통령의 에토스, '혐오'정치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 나는 미국에서 연구년을 보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공화당 메케인 후보에 크게 뒤쳐지던 오바마 후보는 2008년 부동산 대출 업체의 파산으로 시작된 심각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그래, 미국 같은 나라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되려면 이 정도 경제 위기는 발생해야 했겠지. 믿기지 않는 극적인 역전승을 눈앞에서 목격한 나는 그해 12월, 예정되었던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그리스로 떠났다. 하지만 2008년 겨울, 그리스는 폭동 중이었다. 15세 어린 소년이 아테네 시내 중심부에서 경찰이 쏜 총에 숨졌다. 그 죽음은 30%에 이르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배경으로 진행된 대학 민영화와 복지예산삭감, 그리고 부패 스캔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촉발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악화되는 소득불평등과 더불어, 특수 사립학교나 해외대학에 자신의 자녀를 보내는 그리스 엘리트집단이 청년실업과 저임금을 방치하는 동안, 형편없는 일자리에 좌절한 젊은이들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아테네 공항 폐쇄로 학회 당일 출국하려던 유럽 참가자들이 전원 불참하게 된 탓에, 학회를 주최한 아테네대학 아니스 바루파키스 경제학과 교수와 나를 포함, 하루 먼저 대륙을 건너온 소수의 참가자들은 고대의 부서진 유물과 현재의 폭력의 잔해가 묘하게 조화를 이룬 아테네의 한 야외 식당에서 당시 화제였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다. 바루파키스 교수는 단호했다.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고, 오바마는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할 것이며, 그 역시 미국 패권주의를 위해 덜 힘센 나라들을 괴롭힐 것이다”가 그의 주장이었다. 바루파키스 교수는 그 이후 그리스 시리자(급진좌파 연합) 내각의 재무장관으로 특히 독일 메르켈 총리와 그리스 채무를 둘러싸고 짧지만 힘든 싸움을 벌인 바 있다. 자본주의 하 민주주의의 한계를 끊임없이 지적했던 그는 기본소득의 지지자이기도 하다. 그는 기본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총수요감소에 대응하는 반 디플레이션 정책으로서, 사회적 구매력을 확장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정했다. 역사적인 그리스

폭동의 현장에서, 전쟁터 같은 아테네 시내에서 들었던 바루파키스 당시 교수의 말은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고, 나 역시 큰 맥락에서 그에 동의한다. 오바마 케어의 굴곡진 역사와 한계를 고려한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민,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을까, 매우 회의적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윤석열 행정부를 일 년 가까이 겪으며, 나는 대통령의 에토스(Ethos)가 얼마나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지 깨달았다. 그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수많은 유사 검사들이 행정부의 요직에 진입했다. 법조인, 특히 검사는 이미 발생한 사건과 상황의 위법성을 법에 근거해 사후적으로 파헤치는 일에 종사하는 만큼, 다가올 미래를 먼저 주시하며 국민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기존의 부족한 법을 바꾸어 낼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정치와는 완전히 상극인 직종이다. 우리 국민에게는 매우 불행하게도, 이 치명적인 자질 부족을 극복하려는 방편으로 윤 대통령은 내 편을 넓혀 통합하는 것이 아닌, 상대편을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국정의 동력을 얻는 혐오의 정치를 선택했다. 혐오를 원초적인 본능으로 보는 경우, 이는 생존에 위협이 되는 물질과 대상을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적대적 감정으로 정의된다.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은 인간에게 자신의 동물성과 죽음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설사 무해하다 해도 그걸 만지게 되면 자신까지 오염될 것이란 비합리적인 생각을 유발하기도 한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혐오라는 감정의 비합리성이 이런 원초적인 혐오에서 투사적 혐오로 넘어갈 때 더욱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혐오를 유발하는 대상의 특성을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다른 인간에게 투사시킴으로써 지배적 집단이 좀 더 안전하게 자신을 유한성으로부터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투사적 혐오는 차별과 배제의 원천이며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서구와 차이점은 극단적인 능력주의 담론의 확대와 함께 상대적으로 열등한 생산성을 지녔다고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본능적인 감정인 혐오가 우리의 사회구조적 맥락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대상에게 투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백인 중심 사회에서는 이질적인 유색인종이거나 이민자가 주된 혐오의 대상이듯이, 남성 중심적 조직이나 사회에서는 여성이, 젊음이 바람직한 기준인 사회에서는 노인이, 비장애인 위주의 사회에서는 장애인이, 자본(기업, 특히 재벌) 중심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일 년 간, 우리 사회는 약자가 강자에게 무릎 꿇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지독한 혐오 사회로 몇 발자국 더 다가갔다. 모두가 존중받으며 적극적인 자유를 향유하는 대신, 가장 힘센 기구인 국가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모호한 ‘국익’을 위해서 개인이 건강하게 차별받지 않고 노동하고 쉴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변질되었다. 국가가 항상 이렇게 고자세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해서 국민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는 면에서는 참으로 일관적이다.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진보한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루파키스 전 장관의 통찰은 맞다. 신자유주의라는 특수한 역사적 국면에서 대통령 한 명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개방형 경제를 운영하는 우리의 경우, 비록 보수 정권과는 수준과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진보진영의 어떤 대통령도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런데, 유능한 대통령만 역사를 진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혐오의 정치는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덧씌워져 있던 번쩍이는 포장지를 걷어내 그것의 거친 민낯을 보도록 만들었다. 그의 정치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괴롭혀 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배설물을 보다 명징하게 드러냄으로써 변화에 대한 열망과 추동력을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현란한 포장에 속아 신자유주의가 결국은 더 많은 빈곤을, 더 심한 적극적 자유의 제약을 가져오는 기제mechanisms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영원히 그런 상태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 자본이 아무리 불평등하게 분포된 자본주의라고 해도, 선거에서 누구나 한 표를 갖는 민주주의제도 하의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다. 대통령이 평등과 통합의 에토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전무하다면, 대신 국민이 더 노력하면 된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른다.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청년들이 장시간 노동에 찬성하리라 여기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 사회도 전 세계적 추세를 따라 여가와 삶의 질을 소중히 여기며, 이런 성향은 젊은 층에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혐오 정치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담론의 영역에 더 가깝다. 실제 삶에서 그런 담론이 유의미한 이득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런 담론은 재생산되지 못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의 징후가 이처럼 분명할 때에는. 진보는 비록 일시적인 후퇴와 지루한 기다림으로 발목 잡힌다 해도 과거의 경험에서 배워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곁의 어려운 동료 시민이 결국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협력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몇 년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흐를 수도 있을 것 같다.

BasicIncome Issue 2.

[기획자의 말]

이번 호 ‘이 계절의 이슈 2’의 주제는 기본소득의 현장이다. 지난 11호에서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실험과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의 사례를 다뤘다. 지난 호에서 국내 사례를 다뤘다면 이번 호에서는 해외 사례를 다룬다.

먼저 스페인 카탈루냐주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이야기다. 2021년 봄 부터 추진된 카탈루냐주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올 3월 초에 예산상의 문제로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2년 12월 14일 국회에서는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주제로 초청간담회가 열렸다. 오준호 기본소득 공동대표가 이를 소개하고 카탈루냐주 기본소득 운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다음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연구소FRIBS와 여기에서 열렸던 기본소득 겨울학교에 대한 이야기다. 겨울학교에 참여한 이지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생생한 참가기를 보내주었다. 필립 판 파레이스의 지도하에 5일간 열린 겨울학교는 최근의 글로벌 이슈와 연계하여 기본소득의 논쟁을 논하는 자리였다. 겨울학교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고 또 어떤 내용을 배우고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 연구소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카탈루냐 기본소득, ‘잠시 멈춤’ - 국회에서 열린 ‘카탈루냐 기본소득 간담회’ 후기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운영위원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앙헬Angel의 이메일은 이렇게 시작했다. 가끔 카탈루냐 뉴스를 찾아보고 짐작한 대로였다. 앙헬은 카탈루냐주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 미디어담당관이다.

본래 이 글은 지난해 말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스페인 카탈루냐주와의 온라인 간담회 후기를 써달라는 청탁에 따라, 간담회 이모저모를 서술한 다음 올해 카탈루냐에 예정됐던 기본소득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밝은 톤으로 덧붙이려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범사업 상황이 좋지 못하다. 지난 3월 10일 카탈루냐주 의회는 올해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표결은 사회당과 훈트Junts가 주도했다. 훈트는 친기업 정당으로 연립정부에 참여했다가 돌아섰다. 앙헬은 이렇게 썼다.

“그나마 다행은 카탈루냐 시범사업 사무국이 여전히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선 (주정부가 시범사업을 중단했을 때) 사무국과 시범사업이 모두 폐쇄되었지만, 카탈루냐 정부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계속 사무국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카탈루냐 주정부가 사무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보면 시범사업 추진 의지는 아직 굳건한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취소된



카탈루냐 간담회 카탈루냐측 참가자(정면 가운데가 누리아 쿠엔카 레온 카탈루냐 주지사실 사무총장. 그 오른쪽이 세르히 라벤토스 사무국장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 앙헬은 강조했다. 카탈루냐 연립정부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지하는 새 동맹을 구성하면 시범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애초 쓰려던 방향, 즉 국회 간담회를 소개하며 ‘기본소득 지지자들이여, 카탈루냐를 주목하라!’ 하고 희망적으로 마무리하긴 힘들다. 하지만 이 상황조차도 현실 속 기본소득-올여름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주제이기도 한-의 한 면이다. 카탈루냐 상황은 기본소득 운동에서 만나는 현실 장벽을 재확인하게 하며, 이 장벽을 넘거나 우회하는 전략의 고민을 던진다.

이 글에선 카탈루냐주에서 준비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국회 간담회 행사의 후기를 덧붙인다. 그리고 카탈루냐주 기본소득 운동이 주는 시사점을 짧게 부연한다.

‘잠시 멈춤’ 카탈루냐 기본소득, 어떤 내용인가

2021년 봄 총선에서 집권한 정당연합은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공동과제로 합의했다. 집권 정당연합은 주로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좌파정당들로 구성됐으며 다수당은 카탈루냐 공화 좌파당ERC이다.

2021년 6월에 주지사실¹⁾ 직속으로 ‘카탈루냐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이하 사무국)이 설치됐고 세르히 라벤토스Sergi Raventós 사무국장이 취임했다. 사무국은 여러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1) 카탈루냐주 자치정부 수반의 공식 직위는 대통령presidente이다. 다만 한국이 대외 관계에서 스페인 정부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주정부’ ‘주지사’ 명칭을 쓰기로 한다.

받아 시범사업을 설계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확정된 시범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 금액은 성인 기준 월 800유로(한화 110만원)를 지급한다. 이는 빈곤선을 넘는 수준이다. 미성년자는 월 300유로(한화 43만원)로 한다.
- 대상은 5천 명이다. 25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눈다. 2500명은 카탈루냐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발하고, 2500명은 지자체 전 주민이 포함되도록 2개 지자체를 선발한다.
- 두 그룹 모두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성해 실험집단과 대조 연구한다. 지자체 실험은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3~5개 지자체를 합한 통제집단을 구성한다.
- 기간은 2023년부터 2년간이며, 사업 이후 결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 소득 최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차 기본소득을 실제 도입할 때 최상위층이 세 부담을 더 많이 지는 조세개혁을 한다는 가정을 시범사업에 반영한 것이다. 즉 시범사업에서는 증세가 없는 대신 최상위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5천 명에게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총예산은 8500만~9000만 유로(한화 약 1200억 원)다.²⁾ 5천 명은 카탈루냐 전체 인구는 770만 명의 0.1%가 안 된다.

라벤토스 사무국장에 따르면, 현 스페인 복지시스템은 빈곤 감소 효과가 매우 부족하다. 스페인 정부의 최소생활보장제도IMV는 빈곤층의 13.3%만 수급권을 보장한다. 약 87%의 빈곤 시민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³⁾

카탈루냐 사회경제적 상황은 스페인 평균보다 낮지만 그래도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를 겪고 있다.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이 20%이고 실업률은 10%에 조금 못 미친다. 카탈루냐의 최저소득 보장제도RGG는 28%의 빈곤층에게 수급권을 줘서 IMV보다 조금 낮지만, 지원 금액은 빈곤선의 70% 정도일 뿐이며 여전히 많은 대상자를 배제한다.⁴⁾

카탈루냐 주정부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혁신적 해결책’을 찾고 있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그 해결책의 일부가 될 것을 기대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존의 조건부 지원 제도의 기술적, 도덕적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효과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설계했다.

그런데 사무국에 의하면 여러 나라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은 한계가 많다. 우선순위를 무조건 성과 개별성에 뒀고 보편성을 덜 강조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실험 참가자 수도 적었고 지급액도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카탈루냐 시범사업 설계에 반영됐다. 기본소득 지급액은 빈곤선을 상회할 만큼

2) “5천명에게 월 100만원” 카탈루냐의 경제위기 해법, 오준호, 오마이뉴스. <https://omn.kr/1ztoz>

3) 같은 기사.

4)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발표문, 세르지 라벤토스.



카탈루냐 간담회한국측 기념촬영(좌로부터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서영석 민주당 의원, 용혜인 상임대표)

높다. 월 800유로(약 110만원)는 한국의 생계급여와 비교해도 상당히 관대한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로 2023년에 약 62만 원이다. 지자체를 선정해 인구 전체(상위 10%는 제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올해 2월 기준 4241명이다. 이를 보면 카탈루냐 시범사업이 놀라울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은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액수에선 차이가 크다(이 정도로도 사업 시행 1년 동안 청산면 인구가 346명 늘었다고 한다).

카탈루냐 주정부의 ‘유럽에서 가장 야심찬 시범사업 계획’이라는 설명은 진실이다. 실제 시행되어 효과가 속속 나타나면 각국 정부의 정책적 상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무국의 설명처럼, 잠시 연기되었을 뿐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길 바란다.

국회에서 열린 카탈루냐 기본소득 간담회

필자는 지난해 7월 세르지 라벤토스 사무국장과 서면인터뷰를 해서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썼다 (“5천명에게 월 100만원” 카탈루냐의 경제위기 해법). 윤석열 정부 집권과 함께 밀려오는 사회 퇴보가 갑갑하고, 담대한 대안 없이 우왕좌왕하다 윤 정부 집권을 도와준 민주당이 답답한 터에, ‘카탈루냐 찬가’의 고장에서 들려온 기본소득 실험 소식은 필자를 설레게 했다.



카탈루냐 간담회에서 온라인으로 토론하는 장면

필자의 인터뷰 요청에 라벤토스 사무국장, 앙헬 미디어담당관이 적극 호응했으며, 덕분에 인터뷰 기사는 꽤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 카탈루냐주의 야심찬 시범사업 계획을 한국 정치권에도 알려 다소 정체된 한국 기본소득 논의에 자극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에 제안하고 내가 카탈루냐 사무국에 제안하여, 지난해 12월 14일에 온라인(zoom)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이란 제목이다(이하 ‘카탈루냐 간담회’).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같이 행사를 주최했다.

필자가 간담회 사회를 맡았다. 한국에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현황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카탈루냐에선 ‘카탈루냐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제목으로 세르히 라벤토스 사무국장이 발표했다.

한국 국회엔 해외와 교류 행사를 하기 위한 시설과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 카탈루냐 간담회는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문 동시통역사 두 명이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통역했다.

한국 참가자는 사회자와 발표자 외에 현장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민주당 서영석·윤영덕 의원,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 서정희 군산대 교수, 윤형중 LAB2050 대표가 참석했다. 카탈루냐 사무국 참가자들은 온라인화면 저편에 모여 앉았다. 라벤토스 사무국장 외에 누리아 쿠엔카 레온 주지사실 사무총장, 마크 발라게르 카탈루냐주 공공정책연구소장, 다비드 카사사스 시범사업 과학위원장, 재역 윤 강 카탈루냐주 한국연락소 대표, 사회학자인 돌로레스

메디나 포사디에르 등이 참가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안효상 이사장은 “한국은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결성을 시작으로 기본소득이 한국 현실에서 갖는 의미를 탐구하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고민했다. 2016년 기본소득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 기본소득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대했으며, 2018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제도화해가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후 기본소득 논의가 쇠퇴한 듯 보이지만, 농민기본소득이나 전남교육청의 학생기본소득 등 다양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최근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은 “좁은 의미의 소득보장 정책을 넘어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전망을 제출하고 있으며, 제도적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라벤토스 사무국장은 시범사업 추진 배경, 시범사업 내용,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 밝혔다(시범사업 내용은 이 글 앞부분에 언급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지자체 단위에 보편 지급함으로써) 개인, 가족, 집단에서 일어나는 파급효과, 시민활동 참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관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탈루냐에서 우리 목표는 빈곤의 퇴치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으로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이라고 밝히고, “유럽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이번 실험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국 참가자가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서 최상위 10% 소득자를 제외한 것이 보편성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하고 질문하자 라벤토스 사무국장은 “앞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면 조세개혁으로 소득 최상위 10%로부터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시범사업에 반영했다”라고 답했다. 라벤토스 사무국장은 시범사업이 보편성 훼손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조세개혁까지 포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찾겠다”고 부연했다.

사회학자 돌로레스 메디나 포세디에르는 “설문조사 때 시민들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설명하고 조사하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비율이 늘었다”라며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을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유형중 LAB2050 대표는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하자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라며 “카탈루냐 시범사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지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필자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이 다른데도 두 나라 모두 불평등 해결의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꼽는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서울과 바르셀로나에서 만나 경험을 나누었으면 한다”는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카탈루냐와 한국의 기본소득 지지자에게

카탈루냐 시범사업은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어떤 정치적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떤 현실적 장애물과 만나게 되는지 보여준다. 한국과 정치제도가 달라 바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카탈루냐는

독립을 지지하는 좌파 정당 간 연합이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약을 합의하는 배경이 됐다. 다수당인 카탈루냐 공화좌파당을 중심으로 더 급진적인 민중연합후보당, 카탈루냐 포데모스 등이 연정을 구성하며 소수파의 제안이 정부 공약에 포함될 수 있었다.

전면적 기본소득을 바로 추진하기에 앞서, ‘증거에 기반한 정책 시행’을 명분으로 대규모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한국도 우후죽순 유사 기본소득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액과 예산 규모가 너무 작고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계획이 뒷받침되지 못해 사업 확장을 기대하기가 난망하다.

기본소득 도입 전 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가 지극히 보수화되는 국면에선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시범사업부터 해보자고 제안할 필요도 있다. “기본소득 즉각 도입하자. 다만 예산이 없으니 일단 ‘용돈’ 수준으로 주자”라는 제안보다 “우선 일부 지역 먼저, 그러나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해보자”라는 제안이 분명 수용성은 더 클 것이다. 이 같은 전술적 유연함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카탈루냐에서 노동조합 기반 사회당이 예산삭감을 주도한 것처럼, 기본소득 운동이 어떤 전략을 택하든 정치적 반대파는 나올 것이다. 정치적 해결책도 찾아야겠지만, 반대를 돌파하려면 역시 아래로부터 대중의 사회적 압력이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이 노동운동과 충분히 권리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노동조합과 그에 기반한 정치세력이 고용노동의 기득권에 집착해 기본소득에 반대할 때는 투쟁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평범하면서 비장한, 또 경쾌한 그 표현을 카탈루냐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잘 전달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할 수 있다면 꼭 전달하고 싶다. 어려움 속에 버티는 한국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독일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 연구소 (FRIBIS)의 윈터 스쿨 참가기



이지은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이사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1. 윈터스쿨 지원기

지난 겨울 언제나 습관처럼 BIEN 뉴스를 클릭했다. 지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호기심이 일었고, 머리를 약간 식히고 싶기도 했다. 그런데 어랏! 뉴스의 첫 페이지에 흰 백발에 볼 한 가운데까지 입꼬리가 올라가 인자하게 웃고 있는 필립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교수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을 클릭하고 나서 내용을 읽어보니, 독일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 연구소Freiburg Institute for Basic Income Studies: 이하 FRIBIS에서 “오늘날 세계적 문제와 기본소득 논쟁”을 주제로 필립 판 파레이스의 지도하에 윈터스쿨을 개최한다는 내용이였다. 1월 16일부터 23일 5일 동안 기후위기, 팬데믹, 국제분쟁과 같이 현 시대의 큰 과제들이 기본소득 의제를 뒷전으로 밀어낼지 아니면 오히려 논의를 추동하는 기회가 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 참가대상자는 박사과정의 대학원생과 박사 후 연구원이었다.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책의 5~7장¹⁾을 읽어가는 것이 요구사항이었다. 또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짧은 정책보고서²⁾를 팀별로 작성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의무사항이었다.

당시 나는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에 주저한 것이 사실이었다. 잠시 동안 이곳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기회비용에 대해 강렬하게 고민한 뒤, 숨을 한번 고르고 지원하게 되었다. 내가 기대했던 바는 먼저 판 파레이스 교수의 수업을 직접 듣는다는 것 그리고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있는 여러 학생들과의 교류, 마지막으로 그 외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미지의 가능성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었다.

지원한지 약 일주일이 지나서 참가를 수락한다는 기쁨의 메일을 받은 뒤, 내가 처음으로 준비한 일은 판 파레이스(2017)의 책을 다시 읽는 일이었다. 이 책의 번역서는 수업 때 이미 공부하였고 이후 여러 번 읽었었기 때문에 주요 흐름과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원서로 읽었을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이 책을 읽었을 시점과 비교했을 때, 나의 관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것도 작용했겠지만, 책에서 다루고 있는 방대한 내용과 세부적인 사례들이 다시금 눈에 들어왔다. 특히 각 장의 각주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게 된 기회였다. 또한 번역문에서 담아내기 어려운 원문의 맛과 힘이 남다르게 느껴졌다. 특히 서문은 다시 읽어도 신선하고 강렬했으며 특히 서문의 마지막 문단은 여러 번 소리 내어 읽었다.

“A basic income is not just a clever measure that may help alleviate urgent problems. It is a central pillar of a free society, in which the real freedom to flourish, through work and outside work, will be fairly distributed. It is an essential element of a radical alternative to both old socialism and neoliberalism, of a realistic utopia that offers far more than the defense of past achievements or resistance to the dictates of the global market. It is a crucial part of the sort of vision needed to turn threats into opportunities, resignation into resolution, anguish into hope.”³⁾ (강조 필자)

이 책은 약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보아도, 서구 중심적이지만 기본소득의 교과서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시-공간을 아울러 방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심 이번 수업에서 최근의 위기들과 연계하여 기본소득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한 일은 FRIBIS에 대해 살펴보는 일이었다. 사실 이전에도 홈페이지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눈여겨 살펴보지는 않았다. 이번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면서 놀라웠던 점은 꽤 큰

1)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홍기빈 역, 2018)로 번역되었으며, 책의 5~7장은 기본소득의 철학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의 쟁점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2) 이후 FRIBIS 홈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이다.
 3) 원서 3페이지, 번역본의 17페이지에 해당한다. 책의 프롤로그는 영문으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규모의 연구소라는 점,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기본소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 연구팀은 연구자 그룹만이 아니라 활동가 및 외부연구자를 포함한 융합적인 조직구성 속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소에 대한 정보는 부록에서 추가적으로 다뤘다. 아무튼 나는 나와 관심분야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박사생 2명에게 미리 이메일을 보냈다. 다가오는 윈터스쿨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고 시간이 괜찮다면 따로 만나 현재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더 얘기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한 친구는 돌봄과 공유지에 관심이 많았으며, 다른 한 친구는 생태적 전환을 중심에 두고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있었다. 윈터스쿨에서 이 두 친구와 이야기했음은 물론, FRIBIS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연구원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작업은 한국의 사례를 잘 설명할 수 있기 위해 내용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특히 2022년 대선이 한국 기본소득 운동에 남긴 과제와 의미, 이후 기본소득한국네트워에서는 기본소득을 생태·사회적 전환 속에서 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2. 윈터스쿨 참여기 : 2023년 1월 16일 ~ 20일⁴⁾

수업은 따듯한 오후에 시작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겨울을 어느 때보다 따듯하게 만들었고 유럽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시 중심부를 흐르는 드라이잠Dreisam 강에서 약 5분 정도 걷다보면 수업하게 될 건물이 있었다. 여기에 온 참가자들은 대부분 FRIBIS에서 연구 및 활동을 하고 있는 박사과정의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이었다. 외부에서 온 참가자는 나를 포함하여 독일 내 다른 지역대학의 연구원, 브라질에서 온 에두아르도 마타라조 수플리시Eduardo Matarazzo Suplicy⁵⁾, 핀란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박사생 정도였다. 5일 간의 수업 일정은 생각보다 꽤나 빡빡했다. 서로 짧게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판 파레이스 교수는 기본소득 역사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역사 이야기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역사 수업은 그야말로 생생했고 동양인인 내게 매우 이국적으로 느껴졌다. 전-기본소득의 역사에 대한 설명은 기원전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기본소

4) 나는 이 장에서 인상과 느낌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메모했던 것, 강의 이후 다시 한 번 책을 보면서 다시금 새롭게 이해하게 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책에서 발견한 주옥같은 문장들도 자주 인용하였는데, 인용페이지는 번역서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중요개념의 경우 영문을 함께 표기하였다.

5) 에두아르도 수플리시는 브라질 노동자당의 창설자이자 1997~2015년 상파울로주의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룰라 전 대통령과 함께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모든 브라질 국민에게 기본시민소득renda basica de cidadania을 지급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법을 의회의 양원과 룰라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촉구하여 법안이 제정되었다

일정표

월요일	기본소득의 역사
1300-1330	환영
1330-1630	강의및 토론 (필립 판 파레이스)
1630-1730	오늘 수업 정리/다음날 수업내용 공지
화요일	철학
0900-0930	월요일 수업 복습
0930-1045	강의및 토론 (필립 판 파레이스)
1045-1100	타타임
1100-1230	내부 토론 (필립 판 파레이스 & Lisa Reuter)
1230-1330	점심식사
1330-1630	소규모 그룹 토론
1630-1730	전체 토론 및 정리
수요일	경제
0900-0930	화요일 수업 복습
0930-1045	강의및 토론 (필립 판 파레이스)
1045-1100	타타임
1100-1230	내부 토론 (필립 판 파레이스 & Tobias Jäger)
1230-1330	점심식사
1330-1630	소규모 그룹 토론
1630-1730	전체 토론 및 정리
목요일	정치
0900-0930	수요일 수업 복습
0930-1045	강의및 토론 (필립 판 파레이스)
1045-1100	타타임
1100-1230	내부 토론 (필립 판 파레이스 &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1230-1330	점심식사
1330-1630	소규모 그룹 토론
1630-1730	전체 토론 및 정리
(1815-1945)	프라이부르크 대학 공개강의(필립 판 파레이스)
금요일	결론: 오늘날 글로벌 문제가 기본소득을 뒷전으로 밀려나게 할까? / 글쓰기 워크샵
0900-1030	목요일 수업 및 공개강의 복습
1030-1045	타타임
1045-1200	글쓰기 워크샵
1200-1245	최종 정리
1300-1400	점심 식사

특의 5가지 특징 중 현금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특징을 만족시킨 정책이 있었다고 했다. 이후 18세기 말엽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확산되기 전까지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부조와 사회보험 모델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판 파레이스 교수는 복지국가의 성장 맥락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당대의 시대적 필요 속에서 귀납된 것임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비로소 ‘권리’라고 명시한 토머스 페인의 제안을 기본소득 이념의 역사적 시초로 보고 있었다. 페인이 기본소득을 정당화했던 논리는, 기독교 전통에 근거하여 땅이 인류 전체의 공동재산이라는 사유에 기반한다. “내가 호소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이며, 베품이 아니라 정의다.”(p.179) 이후 이러한 아이디어를 보다 확장시킨 토머스 스펜스는 성인기의 지금이 아닌 평생에 걸친 지급, 개간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건물, 기타 모든 개발물들을 포괄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안은 교구단위였고 정치적으로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후 전국적 규모에서의 기본소득을 주장한 조제프 샤를리에에는 “나라 전체의 ‘토박이’ 거주자 모두에게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세 달에 한 번씩 획일적인 ‘영토 배당금(territorial dividend)’을 지불하며, 그 재원은 건물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토지를 임대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지대로 충당”(p.184)하자고 주장했다. 페인, 스펜스, 샤를리에의 제안들은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사상은 자연은 만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사적소유는 정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위대한 유토피아주의자들 Great Utopians 중 한 사람이었던 샤를 푸리에의 『가짜 산업』이라는 책에서 반복된다. “만약 문명 질서가 인간에게서 수렵, 어로, 채집, 목축이라는 자연적 생계의 네 가지 활동 - 이것들이야말로 말로 인간의 제1권리를 이룬다 - 을 빼앗아갔다면, 토지를 가져간 계급은 이렇게 좌절 상태에 빠진 계급에게 최소한의 충분한 생계수단을 빚지고 있는 것이다.”(p.189) 하지만 푸리에가 염두에 둔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보편적 제도는 아니었다. 이후 푸리에의 제자인 빅토르 콩시데랑은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최소소득을 주장했고 이것이 노동의 매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p.189). “최소한의 소득을 미리 주는 것(avancer le minimum)은 자유의 기초이며,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보장하는 장치다. ‘최소소득 없이 자유 없다. 일하고 싶을 만큼 산업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최소소득도 없다.’ 이것이 대중 해방의 진정한 핵심이다.”(pp.189~190)

존 스튜어트 밀은 『정치경제학 원리』 2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서 푸리에주의 Fourierism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 (푸리에주의적) 시스템은 사적 소유의 폐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상속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산물의 분배에 있어서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도 감안할 것을 공공연히 주장한다. (중략) 분배에 있어서 먼저 일정한 양의 최소소득이 공동체 성원 개개인 모두에게 생계비로 배당되며, 그 개인이 노동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그렇게 한 뒤에 남은 생산물은 노동, 자본, 재능이라는 세 가지 요소 사이에서 미리 결정된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뉜다는 것이다.”(p.190)

이후 기본소득의 이념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으로 퍼져나갔으며 자세한 내용들은 책의 4장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1986년 9월 샤를 푸리에 집단^{Colletif Chareles Fourier}이 전 유럽을 아우르는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회합을 최초로 조직하였으며, 이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전신인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참고로 샤를 푸리에 집단은 사회학자 폴-마리 불랑제^{Paul-Marie Boulanger}, 경제학자 필리프 드페이^{Philippe Defeyt}, 철학자 필리프 판 파레이스에 의해 조직되었다.

판 파레이스 교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제안된 역사적 배경들을 깊이 있게 짚어 설명했다. 짧은 시간 역사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장구성에 다시금 놀랐다.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 내용이 변화해왔으며, 이러한 배경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현 시대에 필요한 교훈과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설명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론은 여러 흐름 중 하나이지만, 명백한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당위가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정당성이 인간의 필요를 원천적으로 채울 수 있는 공유자원에서 비롯한다는 점이다. 2023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공유부 배당으로 주장하는 것의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역사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한다면 Torry(2021)의 책을 참고할 수 있겠다.⁶⁾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윤리적 논쟁

둘째 날은 윤리적, 철학적 측면을 다뤘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판 파레이스 교수의 강의와 이후 FRIBIS의 연구원 한 명과 판 파레이스 교수와의 내부토론, 그리고 점심식사 후 학생들의 소규모 토론이었다. 먼저 강의의 요지는 기본소득을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개념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유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라고 보는 관념을 말하며, 이때의 자유는 형식적 자유^{formal freedom}가 아니라 실질적 자유^{real freedom}로 해석하는 것이다(pp.251~252). 즉,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단순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진정한 역량^{genuine capacity}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p.252).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자는 것이다(p.252). “엄격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분배적 정의 개념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가 아니라, 그러한 자유의 근저를 형성하는 선물^{gift}의 최소극대화다. 즉 그 선물이 실질적 자유를 행사할 물질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가장 소득이 적은 이들의 소득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p.254) 판 파레이스는 오늘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선물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배분은 아주 불평등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하는 역할은 이 선물을 모든 이들이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p.254).⁷⁾ 그는 기본소득을 넓은 의미에서 공동 상속물^{common inheritance}

6) Torry, M. (2021). Basic Income: A History. Edward Elgar Publishing.

7) 그는 이후에서도 “우리의 경제는 사실상 선물을 나눠주는 기계로 기능할 뿐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공동유산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정도는 아주 불평등한 실정이다.”라고 말한다(p.256).



쉬는 시간에 단체 사진

을 분배하는 것으로 생각한 벨러미, 콜, 사이먼의 제안을 본문에서 소개함과 동시에 이외에도 Marie-Louise Duboin(1988), Gar Alperovitz(1994), Ronald Dore(2001) 등도 유사한 제안을 했음을 언급하고 있다(각주 25, p.306). 그는 집단적으로 물려받은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다시 8장의 지구적 차원의 분배정의를 다루면서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심화된 논의(책 8장의 내용)로 나아가기 전에, 각주 17과 18의 부분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다. 각주 17에서는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Michel Bauwens and Rogier De Langhe(2015)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설령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해도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커먼즈commons에 참여한 데에 대한 총액으로 지불되는 보상인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호소는 대안적인 사회보장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안적인 방법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의 쇠신”을 반영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조직하기 위해 가지게 된 새로운 수단”을 반영하는 것이다(각주 17, p.304).

판 파레이스 교수는 분배정의 개념에 기반하여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기본소득을 하나의 인권으로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한다(각주 18, pp.304~305). 무조건적 소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소득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인권의 측면에서 빈곤에서 빠져나오기에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여러 가지 소득보장형태(부의 소득세, 보편적 근로장려금 등)로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 논리는 다르다. 기본소득은 공정한 분배이지 공정한 재분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p.257)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장의 작동을 통해 여러 생산요소에 대한 보상

이 결정되는 과정의 배후에 숨어있는 중요한 현실은,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를 자본가가 전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가 과거에서 물려받은 가치를 전유한다는 것이다. 물론 두 집단 사이에서도 또 각각의 집단 내부에서도 그 전유의 정도는 대단히 불평등하지만 말이다.”(p.306, 필자 강조)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에 대해 세 가지 주요 비판이 있으며, 이에 대해 이렇게 반박한다. 첫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개인이 성취한 결과물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 ‘모든 사람의 삶에서 맞이하게 될 실질적 자유, 가능성들possibilities, 기회들opportunities을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p.258)이다.⁸⁾ 둘째, 기본소득의 액수가 과도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유증, 기부, 근로소득, 자본소득, 각종 거래, 소비, 탄소배출, 부가가치 등 무엇이든 세금을 매길 수 있으며, 단일세, 누진세, 역진세, 이들의 조합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pp.258~259). 셋째, 기본소득이 결국에는 시장에 부담을 주는 기제가 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상속’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정한 청구권이 최소한 잠정적으로 현금형태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 파레이스는 이러한 설명이 공화주의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적-평등주의적 접근에 속한다고 말한다. 첨언하면, 자유-평등주의적 접근에 속한 여러 철학자들이 얼핏 보면 기본소득을 지지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추구하는 사회상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다.

나아가 판 파레이스 교수는 책의 8장에서 평등주의적 사회정의의 범위scale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어떠한 사회정의 개념을 채택할 것인가와 무관하게,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단위를 인류 전체로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정보, 자본, 재화, 노동력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지구화 시대에 더욱 중요한 정의론이다. 만일 분배정의의 스케일을 지구 차원으로 확대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민자의 유입과 기여자의 유출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이미 유럽 내에서 난민 문제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중심주의에 기반한 이민자 배제 전략도 존재한다. 국경을 넘어서 부정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실정이다.

판 파레이스는 지구적 기본소득의 도입이 유토피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본소득과 같은 지구적 차원의 분배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때, 각 국의 복지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이주 및 난민 문제를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지구적 기본소득의 예시로든 것이 토지세를 통한 배당, 탄소세 부과를 통한 탄소배당 정책이다. 하지만 그는 이것은 일부 사례에 해당한다며, “지구적 정의가 요구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성원들 사이에서 실질적 자유를 공정하고도 지속가능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중략) 하지만 희소한 공동자원이 지금 아주 불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래 세대가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세대 내부에서도 공정한 해법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마

8) 그는 “정의의 핵심은 기회, 역량, 가능성, 실질적 자유를 평등화하는 것이지 결과를 평등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pp.261~262)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아마티아 센의 캐퍼빌리티capability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참여소득을 캐퍼빌리티 관점으로 해석하여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의 결합안도 제시될 수 있다(이상준, 2021, 2022).

련하기 위해 힘써야”(p.523)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공동 상속물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부터 지구적 차원까지 모든 기회들을 움켜쥐어야 한다고 보았다.

오후에서는 주로 기본소득의 주요한 비판 6가지 문제에 대해 소규모 토론이 이뤄졌다. 6가지 비판 지점으로는 첫째, 서비스 방식이 아니라 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둘째, 상대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가령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체해야 하는가? 셋째, 기본소득이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넷째, 말리부 서퍼에게 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어떻게 연대(solidarity)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인정(recognition)의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내가 속한 토론그룹은 주로 노동윤리, 말리부 서퍼에 대해 논의했다. 말리부 서퍼는 하루 종일 파도만 타며 일은 하지 않고 여가만 즐기는 한량을 말한다. 과연, 말리부 서퍼들이 그저 놀기 때문에 소위 ‘사회적으로 무가치’하고, 이에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상호성(reciprocity)의 원리에 위배하는 것일까? 최근 <아바타2: 물의 길>를 봤던 나에게 말리부 서퍼는, 영화에 나왔던 바다생태계를 돌보는 멧카이나 부족과 다를 바 없었다. 인간들이 보기에 ‘바다 나비족’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바다를 헤엄치는 종족으로 보이겠지만, 그들은 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관계를 맺으며 화합하며 살아감으로써 그 생태계 자체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의 섭리를 해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 자체가 중요한 일인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면 말리부 서퍼와 같은 게으름뱅이를 양산할 것이라는 사고는, 생산적인 일과 그렇지 않은 여가를 구분하는 편협한 노동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무언가를 지키는 일은 과연 가치가 없는 일일까? 일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는 사고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토론을 했었다.

기본소득의 경제적 측면

셋째 날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측면을 다뤘다. 강의에서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첫째,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의 차이, 둘째, 전 세계에서 있었던 실험들, 셋째,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 넷째, 여러 가지 자원마련방식이다.

먼저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① 자산조사에 기초한 최저소득제도, ② 기본소득에서의 순소득, ③ 부의 소득세에서의 순소득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⁹⁾ 물론 이러한 비교는 공공지출이 전혀 없다고 가정함으로써 이론상의 비교이지만 이를 통해 각 제도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2년 밀턴 프리드만에 의해 유명해진 부의 소득세는 빈곤함정 및 복지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해

9) 책의 2장과 6장의 일부(pp.90~101, 318~324)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경제학 강의를 하는 판 파레이스 교수

기존의 복지체계를 소득세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의 유사점은, 기존의 자산조사에 기초한 최저 소득제도에서는 100% 한계세율로 인해 빈곤함정과 복지의존성을 발생시키지만(그림 3.1 참고), 이들 제도에서는 한계세율이 100%로 보다 낮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림 3.2와 3.3 참고). 일을 해도 복지급여가 깎이지 않기 때문에 근로유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빈곤함정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실질적 자유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부의 소득세의 경우에 ① 주로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② 수령시점이 신청시점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차(time lag)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혜자의 입장에서 효용이 떨어질 수 있고, ③ 정기성

측면에서 연 단위 지급이며 ④ 소득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주요 특징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부의 소득세와 비교하여 기본소득의 장점은 첫째, 후불 지급이 아닌 사전적으로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빈곤을 완화하는데 더 좋은 제도라는 점, 둘째, 빈자와 부자를 나누는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보편적 제도라는 점이다. 이 점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의 소득세는 손익분기점, 그림 3.2에서 y^* 의 이하인 부의 소득세와 y^* 이상인 양의 소득세가 동일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순수혜자와 순기여자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이로 인해 수혜자에 낙인효과를 발생시키며,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달리 불확실성을 낳는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예측가능한 금액이 미리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부의 소득세가 훨씬 유리한 부분은 지출의 총량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부의 소득세가 기본소득보다 ‘훨씬 비용이 싼 제도’로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용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적으로 재정환상(financial illusion)임을 설명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모두 고려하면, 두 제도의 순효과가 같게 설계될 지라도 부의 소득세를 포함한 자산조사형 소득보장제도의 경우 ‘내는 돈’이 적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 통치성(governmentality)의 문제이기도 하다. 세금을 조금 걷어서 소수의 빈자에게 지급할 것인가 혹은 모두에게 걷어서 모두에게 지급할 것인가의 통치성. 두 제도의 경제적 비용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통치성을 더 선호할 것인가?

순소득 비교

그림3.1 자산조사에 기초한 최저소득제도에서의 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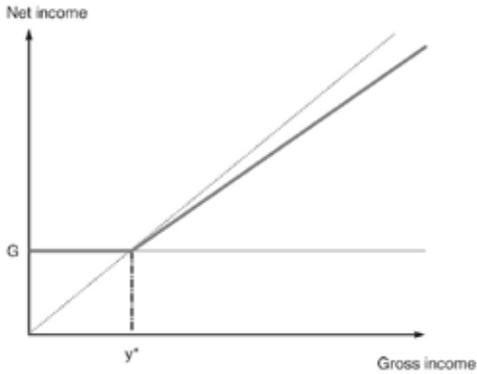


그림3.2 기본소득에서의 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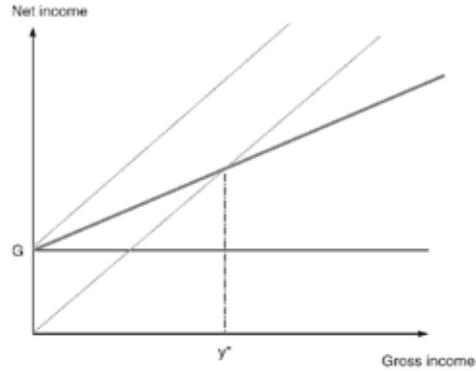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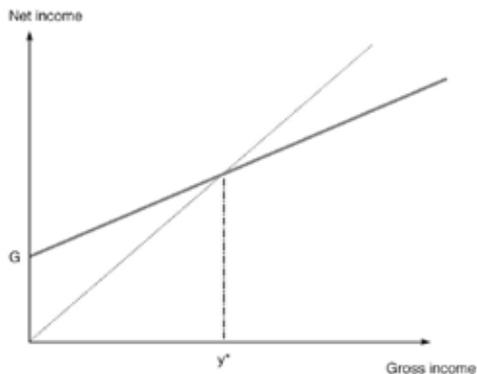


그림3.3 부의 소득세에서의 순소득



주)

- 가로축: 총소득 = 조세 및 이전소득 이전
- 세로축: 조세 및 이전소득 이후
- 45도 점선: 세금이 전혀 없고 최저소득보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순소득, 순소득 = 총소득
- G: 최저소득 수준
- 굵은 선: 자산조사에 기초한 최저소득제도에서의 순소득
- y^* 이하: 제도의 순수혜자, y^* 이상: 제도의 순기여자

그림출처: 책의 pp.91~93의 그림 발췌

다음으로 다뤘던 것은 전 세계에서 있었던 기본소득의 실험들이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소규모로 이뤄졌던 여러 실험들 외에, 2008~2009년 나미비아의 실험, 2011~2012년에 있었던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에서 있었던 실험, 1970년대 북미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친 부의 소득세 실험, 그리고 가장 최근의 네덜란드와 핀란드 실험까지 지속적으로 소득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실험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판 파레이스 교수가 강조했던 부분은, 이러한 실험들이 기본소득의 고유한 특성인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제한된 기간과 순기여자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해당 노동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에 효과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험은 대중의 이목을 끌고 정치적 주목을 받기 때문에 정책논의의 확산에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실험들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은 계량경제학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일부 충족할 수 있다. 주로 젠더, 아동의 수와 연령, 배우자 소득 등에 따라 구분된 여러 범주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양과 한계 순소득을 관찰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다(p.335).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순소득의 총액은 증가하지만 자원마련으로 인해 한계소득은 감소하게 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줄일 것으로 예측된다. 여러 나라에서 몇 가지 모델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종합적으로 도출된 예측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노동시장의 참여와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p.336).¹⁰⁾

그러나 판 파레이스가 강조한 것은 계량경제학 모델의 두 가지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첫째는 이러한 결과값이 특정한 시공간과 문화-제도적 조건 속에서 도출된 값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달라지면 다른 결과가 예측될 것이다. 둘째는 계량경제학 모델들은 노동공급 효과에서 고용의 양적 측면에 주목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서 주목하는 여러 효과들을 포착하지 못한다. 가령,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처우가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이러한 일자리의 고용조건(질)이 나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기본소득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효과’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pp.62~67). 하지만 시뮬레이션 모델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및 노동의 질적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뿐더러 이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델의 쓸모는 몇 가지 노동공급 감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여러 가지 방식의 자원마련이다. 조세 및 복지제도를 잘 갖춘 국가일수록 개인 소득세는 주요한 재원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소득세 체계가 덜 발달된 국가의 경우 다른 대안적 재원을 더 찾아보는 것도 이점이 있다. 책의 6장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듯이, 자본, 자연자원, 화폐, 소비에서 비롯한 재원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은 유로배당의 재원이다. 먼저 유로배당의 재원은 부가가치세이며, 범국가적 조세체계로 부가가치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독일의 괴츠 베르너가 독일 기본소득 모델의 주요 재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주장했고 이는 이후 스위스의 국민투표의 기본소득 모델에서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채택하는데 영향을 주는데, 과연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부가가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탐구를 통해 향후 범국가적 기본소득의 재원안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오후의 소규모 토론에서 나눴던 주제는 이동성(mobility) 관련이었다. 사회정책을 전공하고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고 있는 마틴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일 유로배당이 실시되어, 전 유럽국가에서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지역 간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제기이다. 유럽의 경우 2023년 2월 기준 27개국인 유럽연합(EU)에 가입하여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통합되었다.¹¹⁾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내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이동성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간 주거비, 생활비 등의 차이가 존재하

10) 각주 20과 21(p.382)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11) 1985년 쉥겐 조약이 체결되면서 회원국 간 출입국 통제가 사라져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발효되면서 단일통화인 유로euro가 회원국 간에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

기 때문에 구매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오히려 생활지출비가 싼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상당히 흥미로웠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사례를 들어 토론했다. 한국의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재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금액을 추가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존재했고, 소비처를 지역사회 내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기제도 존재했음을 설명했다. 마틴은 흥미롭게 들었으며 재원 마련 방식은 정책공학적으로 향후 많은 이슈가 존재할 것이라고 의견을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판 파레이스 교수는 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답했다. 먼 미래이겠지만 ‘만일 아시아 단위에서 기본소득 모델을 구상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스쳤다.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넷째 날은 기본소득의 정치적 측면에서 논의했다.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윤리적 측면과 매우 밀접하다고 판 파레이스 교수는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대체로 기본소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측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뤘다. 먼저 노동조합이다. 현재의 복지국가를 형성하는데 노동자 계급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영국, 미국,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노조의 반응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다만 네덜란드의 식품산업 노조는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특히 노조의 구성이 여성, 저임금의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높았다는 특징이 있다. 네덜란드의 사례를 제외하고 일부 노조 지도자들이 우호적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대체로 노조의 반응은 무관심이었다(p.406).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소득의 경우 정부가 시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며 이 과정에서 노조는 개입하지 못한다. 또한 기존의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을 통해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확고한 듯 보인다. 오히려 기존에 조직화 되지 못한 불안정 노동자들precariat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그룹에는 소수의 기업가들이 있다. 인상적인 사례에는 독일의 사업가인 괴츠 베르너(1994~2022)의 주장이다. FRIBIS 연구소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재단의 기부자이기도 하다. 그는 독일의 주요 약국 체인인 DMdrogerie market¹²⁾의 창립자이자 CEO이며, 기본소득의 강력한 옹호자이다. 2005년 경, ‘하르츠 IV’ 개혁으로 수급자들의 근로를 촉구하는 압력이 증가하였는데, 이때 베르너는 기본소득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소비세를 재원으로 모든 형태의 소득세와 기존의 소득이전의 다수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먼저 1,200유로(당시 독일 1인당 50%가 넘는 액수)의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약간 완화시켜 몇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그는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의 인지학anthroposophy 교의에 근거하여, 기본소득이야말로 노동자들을 더

12) DM은 한국의 올리브 영과 같이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가정용품 등을 파는 소매점이다. 유럽 12개국 3,700개 이상의 매장에서 62,6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출처: 위키백과).

욱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경제를 더 잘 작동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하나의 문화적 총동 Kultruimplus으로 보는 그의 관점은 이후 스위스의 기본소득 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pp.418~419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여성 또한 기본소득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이다. 이유는 여성은 현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고 성별 임금격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여성들에게 금전적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 내부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합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이 기존의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사회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집단이다.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민주의 정당은 네덜란드 노동당PvdA¹³⁾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 사민주의 정당보다 더 좌쪽에 있는 정당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열의가 더 낮지만,¹⁴⁾ 가장 중요한 사례는 독일 좌파당Die Linke이다. 판 파레이스는 베르너 쾰바르트(1896)가 “모든 사회주의 윤리에 있어서 중심점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찬미”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사민주의를 포함하여 사회주의 정당들이 기본소득에 인색한 이유를 노동윤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를 푸리에와 같은 ‘유토피아 사회주의’에서는 보다 자유에 방점을 둔다. 그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전통을 되살린다면 강조점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노동과 놀이의 점진적 통합에 있다”(p.438)고 말하면서 마르크제의 1967년의 강연 <유토피아의 종말>의 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지금 좌파 인텔리겐차의 전위 집단 내에서 다리 푸리에의 저작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본인들도 인정했듯이, 푸리에야말로 자유로운 사회와 자유롭지 못한 사회의 질적 차이를 명확하게 밝힌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동이 놀이가 되는 사회, 심지어 사회적 필요 노동조차도 해방된 인간의 진정한 필요와 조화를 이루며 조직될 수 있는 사회의 가능성을 아무 두려움 없이 이야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르크스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p.438에서 재인용, 강조 필자)

또한 기본소득의 주요 지지집단으로 녹색당이 있다. 1970년대 말 정치무대에 등장한 이후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가장 크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곳이 녹색당이다. 그러나 전체 연립정부에서 소수 당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기본소득보다 더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당의 최우선의 목표는 아닐 수 있다.

13) 1980년대 초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촉발한 것은 앞서 논의한 식품산업노조 덕분이었다. 20년 후인 2016년 최종 제출된 기본소득 제안은 사실상 부의 소득세였다(pp.432~433, p.485)

14) 핀란드의 좌파동맹Vasemmistiliitto, 아일랜드의 소규모 정당인 좌파민주당Democratic Left,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등이 있다(pp.434~435).



수플리시의 노래

이후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에두아르도 수플리시의 이야기였다. 브라질이 어떻게 기본시민소득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지, 단계적 도입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기본소득이 단순히 소득지원이 아닌 인적자본을 증진시키는 기능까지 기대했었다는 것 등등. 그의 이야기는 노래로 마무리 되었다. 갑자기 자신의 스웨터를 벗었는데, 그 안에 하얀색 반팔티에 밥 딜런의 “Blowin' in the Wind”의 후렴구가 적혀있었다. 함께 노래 부르기를 청했고, 나는 어떤 문화적 배경과 심지어 이 노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입을 움직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1963년에 발표된 이 곡은 반전과 평화를 의미하는 저항가요의 의미를 가졌다. “친구여, 그 답이 바람 속에서 날아가. 바람 속에서 날아가고 있다고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라는 후렴의 내용은, 마치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절박한 사회적 요구들과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는 답들이 그저 힘없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노래를 모를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 가사가 적힌 반팔티를 입고 와서 함께하자고 제안한 그의 다정함에 감사함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된 다른 하나의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교황에게 쓴 편지였다. 쉬는 시간에 그는 여기 모인 판 파레이스 교수와 자신, 그리고 참여 학생들이 함께 교황에게 편지를 써보자고 제안했다. 이 모임에 취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다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자 하는지를 적어 맨 아래 모두의 서명을 받은 뒤 교황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비록 답은 받지 못했지만,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작은 것부터 실현시켜본다는 의미에서 진보적이라 생각했다. 그는 81세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 브라질에서부터 왔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느껴졌다.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은 어제 저녁,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있었던 판 파레이스의 공개강의¹⁵⁾에 대해 그리고 수업 전반에 대해 이야기했다. 목요일 공개강의에서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 운동 혹은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논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자리였고 물론 윈터스쿨을 듣는 우리들도 참여했다. 판 파레이스는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코로나19, 기후위기, 전쟁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거대한 비전과 이에 정합하는 논리와 정책들, 그리고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코로나19의 발발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게 된 기제가 되었으나, 선진국가의 경우 기존의 수급요건 및 기간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수행되거나 일부 국가에 한해서 일시적 현금지급으로 수행된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의 방향에 대해 논해보자고 제안했다. 그가 설명한 기본소득의 필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 손실에 대한 공정한 분배, 둘째, 생산력으로서의 자유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의 의미를 넘어 기존의 인적자본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인적자본을 개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우리에게 유토피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가 매우 제약되어 있는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을 마련하고 실질적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5일 동안 기본소득의 역사에서부터 기본소득의 개념과 특징, 현실 속 사례들과 그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윤리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을 망라하여 공부하고 토론했다. 시·공간을 아울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각자의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마련되지 못했지만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된 시간이었다. 마지막 수업은 책상을 탕탕탕 두드리면서 마무리되었다. 독일은 박수 대신 책상을 여러 번 두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나눈다고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찰흙이 있다. 이 찰흙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특징으로 한다. 각각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본소득제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구별 기본소득 여행을 하면서 발견했던 여러 모양들은 각자의 유토피아 혹은 사회상에 따라 지어졌다. 작게 성공한 사례도 있었고 다수가 역사의 뒀안길에 남겨진 실패한 사례로 남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끈질기게 살아있다. 어떠한 모습의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인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오면서, 점점 더 일자리는 소멸하지만 생산성은 고도화된 사회, 그리고 환경은 무참히 파괴되어 위험이 점점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부의 불평등은 더욱 쉽게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자원의 파괴 및 착취 문제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는 기본소득 운동에서 핵심이 될 것이다. 위대한 유토피아인들이 어디 유럽에만 있겠는가? 2023년 한국사회에서 거대한 이상을 품은 유토피아인

15) 아래 홈페이지에 강의영상을 볼 수 있다. <https://www.fribis.uni-freiburg.de/en/2023/philippe-van-parijs-a-world-in-crisis-boost-or-damper-for-basic-income/>

들이 이미 존재하고 또 벌써 개미처럼 자신과 우리의 이상을 짓고 있다. 우리 또한 그러하다. 꿈을 모아 실현하는 것, 그 방향과 다양한 모양들을 지구 반대편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전쟁 후 노동계급의 포섭을 위해 사회보험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였고 이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주요 모델이 되었듯이, 시대적 필요가 잘 준비된 유토피아적 이상과 만난다면 가능성은 있다. 지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기본소득의 필요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떠한 사회상을 그려낼 것인지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 공론장에 미래 세대와 지구 생태계까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 Van Parijs, P. & Vanderborght, Y., (2018), 『21세기 기본소득』, 홍기빈 역, 오월의 봄. (원서출판 2017)
- 이상준. (2021). 「참여소득, 캐퍼빌리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시민과 세계』, (38), 107~160.
- 이상준. (2022). 『일·복지·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소득』. 서울: 온마음.
- FRIBIS 홈페이지(<https://www.fribis.uni-freiburg.de/en/fribis/>)

[참고] FRIBIS 연구소 소개¹⁾

(1) FRIBIS 이사회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 연구소 FRIBIS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있는 6개의 다른 연구소와 교수진으로 구성된 역량 네트워크이다. FRIBIS 이사회에는 경제정책 및 질서이론 Order Theory의 학과장인 베른하르트 노이머커 교수 Prof. Dr. Bernhard Neumärker를 포함하여 심리학, 신학, 사회·문화인류학, 교육학, 컴퓨터 공학·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있는 6명의 교수가 소속되어 있다.

(2) FRIBIS Matrix

FRIBIS 팀은 보통 3-4명의 과학자(연구자)와, 주로 그들의 경험을 통해 특정한 연구주제에 대해 전문가로 입증된 2-3명의 비학술적 활동가로 구성된다. 이러한 활동가 그룹은 팀 매트릭스에서 “전달 그룹 Transfer Group”으로 불리는데, 자신의 지향과 경험을 연구에 접목하고 그들의 인맥과 기술을 통해 연구결과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FRIBIS 팀과 팀원들은 서로 교류하며 활동범위를 넓히고 네트워크 전체를 확장한다. 각 팀에는 코디네이터가 배정되어 팀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른 팀과의 협력을 꾀한다. 아래 표는 FRIBIS 팀 구성의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

팀 주제	VATUBI (부가가치세 재원의 보편적 기본소득) LFT
연구 그룹 (대개 3-4명)	Prof. Dr. F. Schneider; Dr. E. Dreer Dr.F. Wakolbinger; Prof. Dr. B. Neumärker
전달 그룹 (대개 2-3명)	H. Page; E. Schmidt
코디네이터	FRIBIS-Dok.

FRIBIS 팀은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연구팀으로 참여하거나, 계획된 UBI 프로젝트의 타당성 평가 연구 및 전문가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과거의 프로젝트와 경험연구를 평가하고 이를 미디어에 소개한다. 신청서가 제출된 후 FRIBIS 이사회에서 FRIBIS 팀으로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활동 중인 팀은 기간 연장을 위해 후속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FRIBIS 팀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① 표준 FRIBIS 팀 (SFT)

- SFT로 승인받으려면 비공식 신청서가 필요함. SFT는 여행경비, 이벤트 및 개별활동, 회의비, 제3자에 대한 소정의 사례금, 언론 홍보 및 출판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SFT는 많은 재정 지원이 제공되지 않음.

② 대형 FRIBIS 팀 (LFT)

1)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를 요약한 내용이다.

- LFT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예산, 일정, 사전 작업목록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LFT는 신청에 따라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자를 고용할 수도 있음.

③ 외부 FRIBIS 팀 (EFT)

- EFT는 자체 자금이 있는 기존의 팀으로, FRIBIS 네트워크 멤버십을 통해 교류 및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음. FRIBIS 재정 지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제공됨.

(3) FRIBIS 재정

FRIBIS는 제3자 펀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FRIBIS의 창립 이사인 베른하르트 노이머커 Bernhard Neumärker 박사가 이끄는 경제정책 및 헌법경제이론을 위한 괴츠 베르너 교수직 Götz Werner professorship²⁾에서 출발했음. 괴츠 베르너 교수직은 베아트리체와 괴츠 W. 베르너 부부의 기부에 의해 형성됨. 괴츠 베르너는 독일의 대형 약국 체인 업체인 dm-drogerie markt 회사의 CEO로, 독일어권에서 가장 저명한 UBI 지지자 중 한 명임. 참고로 베르너는 2005년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삼아 1,000유로(당시 독일 1인당 GDP의 약 35%)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영향으로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발의한 이들도 부가가치세를 주재원으로 제안했다(Van Parijs & Vanderborght, 2018: 356에서 재인용).

(4) FRIBIS 팀

FRIBIS 팀은 총 16개로 구성된다. 각각의 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팀명	목표	내용	관련 출판물	연구자 그룹
1 평화구축을 위한 기본소득 (BIP)	한 사회가 탄력성, 지속가능성,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해, 분쟁 후의 맥락에서 기본소득의 적용가능성을 조사함	분쟁 연구에서 국제적 관점을 도입하여, 세 가지 구체적 사례연구에 초점을 둠 분쟁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서로 다른, 스리랑카 북부, 북아일랜드, 이라크와 시리아에 초점	M. Franke, B. K. J. Neumärker 2022: "A Climate Alliance through Transfer: Transfer Design in an Economic Conflict Model", World 2022, 3(1), 112-125.	Dr. John Barry Diana Bashur(Doctoral Student) Patrick Brown(PhD in Politics) Prof. Dr. Roberto Leombruni Marcel Franke(PhD candidate)
2 Basisgeld	독일에서 "Basisgeld"로 알려진 부분기본소득의 매개변수를 조사함	과학, 정치, 정책결정이 결합된 팀. 매개변수에는 아동수당, 교육급여, 임시소득(스위스), 시민 소득에 대한 혜택감소를 변형 등의 문제를 포함	논문 및 정책보고서 시리즈는 게재될 예정이며, 의사결정자에게 전달될 예정	Prof. Dr. Alexander Spemann Dr. med. Baukje Dobberstein Prof. Dr. Ute Fischer Dr. Stefan Bach Dr. Wolfgang Strengmann-Kuhn

2)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wp.uni-freiburg.de/en/goetz-werner-professur-gwp-fuer-wirtschaftspolitik-und-ordnungstheorie-english/> 괴츠 베르너에 대한 일화는 아래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https://basicincometoday.com/goetz-werner-the-first-inspirer-of-ubi-in-germany-has-died-at-age-78/>



3	자연과 기후를 위한 기본소득 (BINC)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과 관련한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접근방식 탐색	인도네시아 뉴기니(타나 파푸아)의 삼림 내 탄소저장량 보호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연구	Mumbunan S., Maitri, N.M.R., Tazkiana, D., Prasajo, A., Sihite, F., Nabella, D.M. (2021). Basic Income for Nature and Climate. On the first Basic Income proposal to conserve nature and combat climate change on the largest tropical island on Earth. Depok: Research Center for Climate Change Universitas Indonesia. (ISBN 978-602-60534-3). Schmidt-Pramov, F. (2021). A basic income for nature and climate in Tanah Papua. Berlin: GlZ. (Policy Brief).	Dr. Sonny Mumbunan Gudrun Kaufmann(PhD candidate)
4	돌봄 (CARE)	돌봄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이 사회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 탐구함	사회의 돌봄 활동과 관련하여 UBI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Prof. Dr. theol. Klaus Baumann Prof. Dr. Ute Fischer Gudrun Kaufmann(PhD candidate) Verena Löffler(PhD candidate) Lucia Tonello
5	탐험기 본소득 (Expedition BGE)	Expedition Basic Income은 어떤 기본소득 방식이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지 실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대규모의 전국적인 국가지원 파일럿 프로젝트의 틀 내에서 달성될 것임	직접 민주주의와 보조성을 통해 UBI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독일 전역에서 파일럿 추진을 위한 서명을 수집하며, 이후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는 수락여부를 결정함.	영상자료 https://www.youtube.com/	Julia Prof. Dr. Jürgen Schupp Baumhauer(Ethnologist)
6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본소득의 효과를 '현상 유지' 기본 시나리오 및 대안적 개혁안(근로수당, 선별적 사회부조, 기타 유형의 보편적 현금이전)과 비교하여 평가함. 주요 효과는 재정비용 및 시사점, 분배 효과, 금융 노동시장의 인센티브 효과임	기본소득 연구 관련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개선하고 개발하고, 유로배당과 같은 특정 안 또는 특정 국가의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방법론적 자료들을 제공함.	Torry, M. (2021). Feasibility study: A Basic Income pilot project for Wales. A response to the report "Piloting a Basic Income in Wales" (No. 02-2021). FRIBIS Discussion Paper Series. Chrisp, J., Smyth, L., Stansfield, C., Pearce, N., France, R., & Taylor, C. (2022). Basic income experiments in OECD countries: A rapid evidence review. Richiardi, M. (2022). A basic income for France: Ideas for a debate (No. 02-2022). FRIBIS Discussion Paper Series.	Prof. Ugo Colombino Dr. Valerija Koroec Dr. Aida Garcia-Lazaro Prof. Nick Pearce Prof. Matteo Richiardi Dr. Malcolm Torry Dr. Stephen Nuñez Jack Landry(Research Associate) Dr. Eric Qiao
7	보편적 기본소득 비정부기구 (MUBINGO)	UBI 실현을 미션으로 삼은 NGO를 위한 효과적인 소셜 마케팅 접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사회혁신 연구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수용의 동인을 파악하고, 인구집단별 다양한 기본소득에 대한 선호도를 추정함. 나아가 시민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설계함.	-	Prof. Dr. theol. Klaus Baumann Prof. Dr. Jörg Lindenmeier Prof. Dr. Dieter K. Tschewlin
8	네트워크 분석 및 재무 다이어리 (NetF)	기본소득을 분배 기제로 사용하는 상호보완적인 지역화폐를 연구함	현재 세 가지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중임	-	Prof. Dr. Janos Kertész Sowelu Avanzo(PhD student)

9	참여와 UBI - 미래의 내러티브 (PartUBI)	직접적이고 참여적 형태 뿐만 아니라 경제적 '내러티브'로서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함	철학적, 문화적 연구 관점에서 경제적 내러티브로서 기본소득을 살펴봄	Leon Hartmann's dissertation (working title: "Futures of democracy. On the relationship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unconditional basic income")	Prof. Dr. Sebastian Kaufmann PD Dr. Robert Krause Prof. Dr. Andreas Urs Sommer Milan Wenner, M.A.
10	제재없음 (Sanctions-Free)	하르츠플러스(HartzPlus) 연구는 2019년 1월-2022년 봄에 종료됨	베를린의 사회경제 연구소(INES)와 함께 HartzPlus라는 독립적인 과학 실험을 수행하여 향후 3년 동안 우리의 개입이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	https://sanktionsfrei.de/assets/Hartzplus-Studie_Endbericht.pdf	Aseman Golshan Bahadori(MSc. Research Associate) Claudia Comelsen(MA. in art history, German studies, philosophy) Dr. Tanja Schmidt Dr. Verena Tobisch
11	사회계약 과 신질서 자유주의 (SOCOBIS)	현대 사회계약론을 탐구하고 기본소득 사회를 위한 사회계약 조건과 규칙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함. 이를 통해 노이마커 교수가 제안한 신질서 자유주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프라이부르크 대학 사회계약연구소 (SoCoLab)과 협력하여 계약이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회계약의 지속가능성 요건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함	-	Dr. Otto Lehto Clem Davies(research associate) Prof. Dr. Bernhard Neumärker
12	보편적 기본 소득과 젠더 (UBIG)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제안을 구별하는 주요 특징이나 요소는 무엇인지, 관련 긴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등에 대해 연구함	-	Prof. Dr. Almaz Zelleke Prof. Dr. Toru Yamamori Chloe Halpenny(PhD student) Clem Davies(PhD candidate)
13	보편적 기본 소득과 사회-생태적 전환 (UBITrans)	보편적 기본소득이 사회-생태적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함	녹색성장, 포스트성장, 탈성장에 이르는 다양한 잠재적 시나리오를 고려하면서 기본소득이 사회문화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연구함	2022년 6월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강의 시리즈가 진행 중임	Dr. Ulrich Schachtschneider Hanna Ketterer(sociologist) Dominik Schröder(PhD student)
14	보편적 기본 소득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제적 조건이 유리함. 이 국가에 가장 효과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함.	리히텐슈타인의 재정 예산을 분석함. 유관 대학과 연구소와의 정보 교류를 위해 공동 워크숍과 심포지엄을 개최함	-	Dr. Tanja Kim Anna Bojko(MSc. Economics) Dr. Hartmut Hübner Kyra Sophie Rimrodt(MSc. Economics) Dr. Elisa Streuli
15	부가가치세 재원의 보편적 기본소득 (VATUBI)	기본소득의 재원조달 형태로서 VAT에 대해 연구함	그림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소비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제변화의 영향과 기본소득의 재원조달 형태로서 VAT에 대해 연구함	-	Dr. Elisabeth Dreer Prof. Dr. Bernhard Neumärker Prof. Dr. Dr.h.c.mult. Friedrich Schneider Dr. rer. soc. oec. Florian Wakolbinger
16	물-에너지-식량 결합 및 대외원조 기본소득팀 (WEF_FAB)	기본소득 도입이 개발도상국의 사회 및 생태시스템 회복력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조사함	기본소득이 효과적인 개발원조 수단으로 어느 정도 사용될 수 있는지, 그 적용 맥락이 기본소득 기제에 어떤 영향을 부과하는지 살펴봄	-	Prof. Dr. Bernhard Neumärker Prof. Dr. Michael Jacobson Prof. Dr. Reinhart Kössler Dr. Elina David-Teodol Prof. Dr. Elizabeth Ransom



전남학생기본소득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인터뷰어

이관형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장

여행을 해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쉬는 날과 일하는 날의 구분도 별로 없이 사는 것 같다. 김대중 교육감과 인터뷰를 하려면 전남 교육청에 가야 한다. 전남 교육청은 무안에 있다. 목포서 가깝다고 한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실제로 그런지 마음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루를 내서 다녀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지는 않다. “그래, 좀 이른 봄 나들이를 하는 거다.” 온난화 때문인지 봄은 벌써부터 와있는 느낌이다.

오랜만에 정장에 버버리까지 입고 목포역에 도착한다. 무안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이르고, 목포관광을 하기에 너무 촉박하다.

목포역에서 유달산 쪽으로 무조건 걸었다. 새롭게 단장한 목포 근대박물관 주변(손혜원 땅투기 의혹 받던 곳이 이쯤 아닐까 싶다. 근데 전혀 투기를 할 만한 곳으로 보이질 않는다. 실제 투기부분은 무죄였던 것 같다.), 김대중 선생(난 ‘김대중 대통령’보다 ‘김대중 선생’이 훨씬 익숙하다.)이 청소년 시절 공부하던 방, 수군영水軍營이 있던 곳에 조성했다는 목포진 역사공원 등을 구두를 신고 걸었다. “아, 발아파.”

거리 조성은 잘해 놨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은 드물었다. 그런데 예외가 나타난다. <김00 선지 해장국>이다. (궁금하면 칠백 원, 왜 오백 원이 아니냐고? ‘이 사람이 물가 오른 거 모르나?’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기가 맛집인가 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가는, 진짜 맛집이란다. 안타깝게도 난 이미 역 앞에서 김치찌개를 먹은 다음이었다.

목포에서 무안으로 넘어간다. 세상에, 양파로 유명한 무안에 웬 아파트가 이렇게...; 전남도청, 경찰청, 전국에서 가장 클 것 같은 전남여성가족재단 그리고 목적지 전남교육청이 대단위 행정타운을 형성하고 있어서 맞은 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으로 보였다.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다. 김대중교육감과 한 시간 짝 채운 인터뷰를 했다. 나이는 2살 많으시고, 전남에서 대학생활을 하셨는데 수도권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한 나와 거리감이 전혀 없다. 그간 386세대니 586세대니 하는 게 실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공유영역이 예상보다 넓고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내내 부연설명 필요없이 “찍하면 입맛”이라고 다 알아들었다. 내용 자체는 무거울 수도 있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제 교육감님이나 나나 “실연失戀도 달콤하게” 회상할 나이가 되지 않았는가? 언제 한 번 더 뵙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다.

돌아오는 길에 원조경쟁이 치열한, 코롬방제과점과 씨엘비(코롬방의 이니셜)베이커리에서 유명하다는 바게트를 사가지고 왔다. 물론 두 군데 모두에서 산 건 아니다. 둘 중 어디서 샀을까? 궁금하면, 칠백 원!

저도 철학과를 나왔기 때문인데, 철학을 전공하신 특별한 지원동기가 있으셨는 지가 궁금합니다.

-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냥 막연하게 제 적성에 가장 맞는 건 철학인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곡성 태생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밖에 안 다니시고 한학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곡성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는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폐병에 걸리셔서 남원 도립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퇴원을 해서 나오셨을 때는 가세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아버지는 집에서 서당을 여셨어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다니기 전인 어린 나이때부터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다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시골에 사는 것 치고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습니다. 곡성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동신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광주 첫 고교 평준화세대,

소위 말하는 추천 1세대입니다.

뽕뽕이?

- 예, 뽕뽕이. 그러니까 그때 광주일고, 광고를 안 가고 저는 동신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재단이 동강학원이었습니다. 동강학원에는 남고 뿐만 아니라 여중, 여고, 남중까지 있었습니다. 동강학원에는 소속 남녀 중고를 포괄하는, 춘계, 추계 독후감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신학원에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소설가 한승원 선생님이 여중 선생님이었고 남고에는 글 쓰시는 김수중 선생님(훗날 교수가 되시는데), 아동문학가로 유명한 전원범 선생님 등이 계셨습니다. 이 독후감대회에서 1학년인 제가 『데미안』으로 1등을 했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당시는 정음사판 세계문학전집이 유행이었는데, 그걸 누가 많이 읽었는가를 놓고 친구들과 겨루기도 한 걸 보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는 철학과를 가야 되겠다고 은연 중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보면 제 희망전공이 철학과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철학과는 전남에서는 전남대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대 못 가면 전남대 가야 되니까 전남대 철학과를 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책읽기를 좋아하고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 철학가가 제일 좋겠다 싶어서 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고등학교 때 철학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갔는데, 뭐 좀 후회를 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떠셨는지요?

- 저도 주변에는 그때 철학과 다닌다고 말 못 했어요. 시골에 가면 아주 그냥...

왜 점 보는 과를 갔냐고 그러시지들 않던가요?

- 버린 사람 취급을 받아서 어머니가 제가 철학과 다닌다는 말씀을 아마 3학년 때까지는 하지 못하셨던 것 같네요.

저도 군복무를 군병원에서 했는데, 병원이다 보니 군무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철학과 대학원 졸업하고 왔더니깐 점 봐 달라고 해서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편견

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 그렇죠.

어떻게 교사를 하셨나요? 윤리 가르치셨습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 철학과에는 교직과정이 없었는데, 전남대는 있었나 봅니까?

- 네.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더러 선생님이 되어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다고 항상 말씀을 하신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니께서 교사가 되라고 하신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서전에도 썼습니다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순창 분이신 데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좌익 계열로요. 외할아버지 함자가 흥자 정자 표자신데, 300두락을 갖고 있는. 굉장한 지주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다 팔아서 만주에서 금광을 한다고 가셨는데, 실은 독립자금을 마련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옥과의 과학대학 이사장님께 들었습니다. 이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데,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개량주의 비판 있었으나 교육운동 필요성 느껴 교사의 길로

옥과가 연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아닙니다. 곡성이요, 그 뒤가 순창이고.

거기 과학?

- 과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전남과학대학교. 이 학교가 그래서 해방 이후에 폐교를 겪기도 하는 겁니다. 청년단들을 피해서, 피신해서 살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84년 전두환 정권 때가 돼서야 빨간 줄이 없어졌거든요. (전두환 정권은 83년부터 유화책을 쓰기 시작한다: 첨부: 인터뷰 정리자)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그 이야기를 안 하신 거지요. 하여튼 빨간 줄이 있으면 정치를 한다거나 공무원이나 다른 취직을 하는 건 안 되는데 선생은 됐던 모양이더라고

요. 그러니까 교사를 하라고 계속 채근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철학과 다니면서 내가 혹시 직업을 갖게 되면 철학교사를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고민이 뭐였냐면 제가 대학 1학년 때 10.26이 나고, 2학년 때 5.18이 났어요. 제가 그걸 겪었습니다, 나중에 도망갔습니다만. 그걸 겪으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야학이랄지 노동운동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거지, 교사로 가는 것은 개량주의라고 비판받던 시대예요.

저도 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저는 그때 그러면서도 갈 곳은 교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교사로 가서 교육 운동을 해야 한다고 몇몇 친구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학 때부터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명여고 윤리 교사로 교직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머니의 뜻도 작용을 했고 여러 과정을 겪긴 했지만 제 생각도 일치하게 되어 교사가 됐죠.

전교조 활동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이미 대학 생활에서 보이는데요.

- 그렇죠. 그때부터 의견을 같이한 친구들은 다 교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남에서 그 친구들이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교사들이 모여서 스터디 하면 다 용공으로 몰려서 잡아가던 시절입니다. 아람회, 오송회 사건이 나면서부터 교사들 모여서 공부할 때도 숨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YMCA라는 우산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YMCA 교사회로 시작해서 교사협의회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전교조의 시작이 된 거죠. 대학부터 쪽 이렇게 연결돼서 전교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대학 재학 중 10·26, 5·18 연달아 겪으면서 학생운동, 교육운동의 삶 살게 돼

전교조 활동을 하셨는데,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점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 일단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사들이 결성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민주화’라는 말을 쓸 수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교육 이념의 문제, 교사의 역할 문제 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또한 그 때만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복, 수학여행, 앨범 등 교사들이 포함된 부정, 비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촌지 같은 것이 만연했습니다. 5.18을 겪은 후에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되면서 학교 속에서도, 교육 속에서 민주화해야 된다는 과제가 생겨납니다. 처음 전교조를 만들고, 만들어가는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시국선언하고, 교육민주화 선언하고 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당시로서는 굉장한 투쟁이었죠. 여러 구습들이 온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교조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전교조가 만들어졌을 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복직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복직을 안 하셨잖아요?

처음엔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이후엔 소신에 따라 복직 안해

- 그랬죠. 전국에서 1,500명이 넘게 해직이 됐는데요, 전남은 178명인가 됐어요. 저는 목포에서 해직이 됐는데 목포에서만 42명이 해직이 됐으니까. 한수, 즉 한강 이남의 단 일지회에서는 가장 많이 해직된 데가 목포입니다. 제가 대표자 같은 역할을 목포에서 했는데, 계속 합법화 투쟁을 하고 해직교사 복직 투쟁을 했죠. 그리고 5년 뒤에 YS 정권이 들어섰죠.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전교조 합법화를 공약했었습니다. 그런데 YS가 되면서 무산이 됩니다. YS가 그 때 전교조는 인정 못 하지만 생계문제가 있으니 복직은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교조를 하지 않겠다는 탈퇴각서, 전향서를 쓰도록 합니다. 5년 동안에 우리들은 가정이 피해를지고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탈퇴각서나 전



향서를 써주고 복직을 하되 모두가 다 들어가면 전교조 자체가 사라지니까 집 지킬 사람은 남겨두자. 이렇게 된 겁니다. 각 시도에서 조합원 수가 많은 데는 2명, 적은 데는 1명, 광주 같은 데는 1명, 전남은 수가 많으니까 2명, 서울은 2명,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처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부장하고 저 하고 안 쓰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전교조 지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쯤 지나게 되니까 복직한 선생님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분회를 만들어 활동을 하게 되면서 밖에 남은 해직자의 역할보다는 학교 안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라도 탈퇴서를 쓰면 복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삼스럽게 탈퇴서를 쓴다는 게 흔쾌한 일은 아니었고 끝까지 안 쓰고 합법화될 때까지는 버티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전교조 합법화 투쟁이 중요하니까 차라리 지방의회나 이런 데로 진출해서 합법화 투쟁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 운동권 출신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한 70여 명 당선이 됐는데, 저는 목포시의회

무소속, 당시 민주 진영 후보 비슷하게 나가서 당선이 돼서 시의원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저의 정치 활동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 그렇지요. 95년에 시의원이 됐으니까.

3선 하셨습니까?

- 3선 했어요.

그러면 시의원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살기 힘들었죠.

- 그러니까 시의원 하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교조 활동도 했지만 YMCA 사무총장도 하고, Y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을 많이 만드는 데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시의원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전교조 합법화는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대선에서 DJ

에 대한 비판적 지지 활동을 했습니다. DJ가 되면서 저는 운이 좋게도 재선 때도 무투표 당선이 되고 3선 때도 선거 없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3선 전반기 때 김대중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40세인가 41세인가 젊은 나이에 제가 시 의장 일을 맡았습니다. 그때 의장을 하면서 활동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활동도 하고, 정당 활동도 그때 입당을 해서 했고.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탄핵 국면이 전개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때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어요. 이곳은 DJ 본산인데 동계동계가 민주당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으로는 나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해왔던 여러 사람들이 ‘아니, 김대중이 안 나오면 누가 나올 사람이 없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마를 하려면 의장을 그만둬야 돼요. 떨어질 건 뻔한데, 나와 봤자. 그래도 할 수 없이 의장 그만두고 출마를 했죠.

교육문제 해결 위한 연장선에서 정치에 뛰어들어

열린우리당으로?

- 네. 그런데 탄핵이 이루어지니까 급격하게 지지도가 높아졌어요. 저도 당선될 뻔했죠.

오히려 열린우리당 돌풍이 불어서.

-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당선될 뻔했다니까요. 근데 막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에 동교동계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추미애 이런 분들인데, 이 분들이 중심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꼬마 민주당, 하여튼 민주당이 만들어졌어요. 민주당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목포에서 총력을 다 했습니다. 목포가 상징적인 곳이라 총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지지도는 계속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 여파로 이쪽 서부 벨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김효석, 이낙연, 한화갑, 목포는 김홍일 의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대신 나온 이상열, 여기는 꼬마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아주 잘 기억합니다.

- 저는 한 10% 정도 차이로 떨어져버렸죠. 그때가 2004년인데 아무튼 이렇게 정치활동을 좀 했습니다.

네 분 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긴 하네요. 교육감님 교육계에 오래 계셨고, 당연히 우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 현재 우리 교육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큰 문제는 안타깝게도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력이 가장 빠르게 하향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열이요?

- 아니요. 교육력, 학생들의 교육력이에요.

학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 그렇죠, 학력. 그런데 대학 입시에 필요한 학력만이 아니라 소양, 인성 등을 통칭하는 의미로 교육력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일부러 ‘학력’이라는 말씀을 안 쓰시고.

- 말씀드렸지만 대학 입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의미로 교육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동안 교육만큼 계층을 깰 수 있는 사다리가 없었고, 어쨌든 그게 희망이었는데, 이게 다 무너진 거죠.

사다리는커녕 계층 재생산의 도구가 돼 버렸죠.

- 교육 격차가 심해져서 교육의 불평등이 사회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일도 안타깝고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한 ‘수월성 교육’의 성과인, 소위 말하는 학력 또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사PISA 점수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 2위였는데 계속 추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해력이 거의 바닥이라고 하던데요.

- 그렇죠. 그 지점입니다. 교육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기본이. 그러니까 교육의 기본인 사고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문해력이라는 건 사고력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육감님.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그럴까요?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 문해력은 언어 능력입니다. 언어 능력인데 언어 능력은 사고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독서력이 떨어집니다. 대학 입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까마는 이걸 학생들 사고력을 높이고, 지적 능력을 향상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스킬을 기르는 거예요. 함정을 만들어 놓고 떨어뜨리기 위한, 소위 말하는 변별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스킬 말입니다. 소위 스카이라이프 이런 일류 대학을 가면 신분, 미래가 보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만 통과하면 되니까 모든 것을 그 시험 중심으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성이 중요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시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지선다에서 오지선다로 바뀌기는 했지만 객관식 시험만 보게 되니까 사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교육력 빠르게 저하, 전남이 가장 심각

하여튼 대입이 문제인 거는 알겠는데, 저희 때도 사지선다 아니었나요? 지금은 오히려 오지선다인데?

- 그랬죠.

근데 왜 사고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까지 경쟁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어디든 대학만 가면 직장이 보장되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랬군요. 저희 때 하고는 진학을 자체가 다르죠, 지금은.

- 당시에 서울대 정도 가는 학생이 지금은 인서울 정도

한다고 봐야죠.

그렇더라고요.

- 그러니까 책을 안 읽죠. 책을 초등학교 때 읽다가 점점 안 읽게 돼요.

읽을 수가 없죠, 시간적으로.

- 독서를 해도 지금은 교과 과정에 연계한 독서만 합니다, 시험 문제에 관련된 독서만. 단편적인 독서만 이루어지고 스토리 독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고전 같은 거는 읽지를 않죠, 우리나라처럼 고전을 안 읽은 데가 없어요.

『데미안』도 읽고 그래야 되는데.

- 그러니까 재미로 초등학교 때는 읽었어도 점점 그런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독서력이 약화되면서 사고력이 약화되고, 그것이 문해력까지 저하시키고 결국 학문 역량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요.

큰일이네요.

-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이 교육 격차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대학진학이나 고시를 통해 계층상승을 꿈꿀 수 있어야 하는데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결정이 돼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노력하고 성취하는 학생도 없는 것 아니지만 그 퍼센티지가 너무 낮아지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지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울러 고등학교도 서열화되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 독서할 여유도 없고, 할 이유도 못 느껴

실제로 대학들도 특정 지역 고등학교에는 조금 더 이니셔티브를 주는 거 같아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남은 참 불리하네요.

- 전남이 최하입니다. 지금 학력이 최하예요. 수능 꼴찌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심각한 문제네요.

- 전남이 다른 건 몰라도 공부는 잘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남 광주가 최하위입니다. 광주는 아마 광역시 중에서 꼴찌일 것이고, 전남은 확실하게 꼴찌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데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보다도 못합니까?

- 이번에 꼴찌 했어요. 제가 교육감을 맡은 후 처음 치러진, 이번 수능 결과는 내년에 나와요, 아직 공개를 안 하는데 꼴찌일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역 대학이야기도 여쭙겠습니다. 학생들이 희망이 없나요? 여기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가서 출세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 있죠. 지금도. 결국 대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불안해하죠. 대학을 갔어도 진로가 100%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근데 전남대는 부산대나 경북대보다는 위기가 덜하다고 그러거든요.

- 그렇다면 어쨌든 전남, 광주 등에서 대학 나름대로는 노력과 감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전남은 인문 분야나 이런 쪽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학과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아무튼 전남이 그렇게 교육적으로 추락을 했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원인은 전반적으로 전남이 갖고 있는 환경이 그만큼 어렵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전남 지역소멸 지수 전국 최고에는 전국 최저의 교육력도 영향 커

- 경제적인 환경, 지역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죠. 요즘 지역 소멸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남을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교육력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은 지역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가 됐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이 있는데, 16개 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소멸지수가 가장 높지요.

- 예, 전남이 심각하죠. 그런데 전남의 출생률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지금 전남이 10이거든요. 1을 유지하고 있어요. 세종시가 1.2가 되는데, 거기는 광역지자체로서는 예외라고 봐야 할 테니까요.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이 1위입니다. 서울이 0.6이 안 될 거고요. 전국적으로는 0.78인 거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출생률이 높은 데가 전남 영광인데, 1.7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출생률은 높는데 왜 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하냐? 그것은 당연하지만 도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남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일부는 광주로 가는 거죠. 상황이 급박하니까 며칠 전부터 MBC, KBS 등 언론들이 전남의 인구 감소의 심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떠납니다.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년이 많이 떠나는데 그 이유는 교육 때문입니다. 전남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데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전남은 어쨌든 간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육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저는 민선 4기 교육감으로서 이 문제를 아예 드러내야 하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드러내고 우리 상황을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할 방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을 통한 지역 소멸방지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우선은 교육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선 당장 진학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진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남은 농산어촌이 많으니까 학생수가 적은 작은 학교들이 많아요, 학생들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교육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불이익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이 학교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의 질을 높이면 교육 때문에 떠나는 숫자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남에도 좋은 일자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전남에 있는 좋은 일자리들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가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타 지역에 소위 명문학교 아이들이 와서 좋은 일자를 다 차지해버린다?

-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네요.

-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진로진학센터를 학교에 다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권역별로 묶어서 시내에다가 센터를 설치해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센터에 오면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질 높은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나 다, 아마 모든 교육감님이 다 자기 지역에서 질 높은 교육하고 싶어 할 텐데, 어떤 게 질 높은 교육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울까요?

- 괜찮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이나 도시에 비해서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 하면 너무 작은 학교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점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강점이 돼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맞춤형 교육을 하기가 좋습니다. 대도시나 서울 강남 같은 곳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대학 입시라는 목적 하나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

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오히려 잘만 갖추면 맞춤형 교육을 하기가 좋아요. 근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할 거냐? 저는 다른 도시보다 디지털 기반교육, AI 교육을 더 먼저 도입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학생수가 적으니까 무조건 불리하다고만 생각을 해왔는데요. 코로나가 그 기회를 줬어요, 우리한테. 코로나가 퍼지니까 혼자 공부들을 했어요.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했잖아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체험을 했죠. 선생님들도 그런 걸 경험하셨죠. 저는 코로나가 끝나서 학생들이 학교에 모인다고 하더라도 비대면 수업을 사라지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습을 진행한다면 과밀화된 도시교육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런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특성화교육, AI교육 선진적 도입으로 교육 격차 잡겠다

실제로 속된 표현으로 ‘강남서 공부 못하면 최악’이라고들 합니다. 더 나쁘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 수가 많으면 교육이 안 되는 건 저도 체험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고품질의 강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 관련하여 두 가지가 있죠. 먼저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전남의 교육격차문제가 지역소멸의 원인 중 하나인한, 시군이나 도하고 협력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선생님입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은 선생님이 한 분이, 하나의 수업안을 갖고 20여 명의 학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비대면 AI수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디지털 기기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전 학생들한테 보급하고 있는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디지털기기를 가지고 외부 콘텐츠를 받아서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교사가 가르치는 일, 즉 ‘티칭’이 아니라 ‘코칭’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걸 교사가 못

하면 학생들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최초로 교사연수원에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교사들이 먼저 코칭법을 연수 받고, 연수 받으신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른 학교들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에도 효과가 있겠네요.

- 학생이 선생님의 수업을 받다가 AI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 안내를 받아서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이 AI시스템에서는 본인이 공부한 것이 다 기록으로 나오고 평가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평가를 하려면 시험을 봐야 하고 선생님이 채점해야 하고 문제 내야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끝났더라도 이것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교실 안에 들어가게 하자, 전남에서는, 그렇게 지금 전략을 짜 놓고 있습니다.

전남 교사 역할, 티칭teaching 더하기 코칭coaching으로 확대

연장선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학벌 기반 능력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소위 좋은 대학 가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우리 초중등교육은 대학 가는 데에 올인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 대열을 쫓아가기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학벌 위주의 사회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벌 위주의 사회인 것이 사실이지요. 앞으로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은 여전히 학벌을 만들어가는 교육이 공교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라도 현시점에서 이걸 등한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너무 보편 교육 중심, 그래서 수월성 교

육보다는 보편 교육 중심으로 혁신 교육, 진보교육이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 방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조를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로진학상담센터 같은 걸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학원 같이 학생을 지원해 주는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를 가기를 원하는 학생이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심화 수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이 나오면 그것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남을 떠나지 않더라도, 꼭 서울에 가서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넓혀가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진보 교육 쪽에서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편중을 지적하고 이를 폄하해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용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니까요. 그런 걸 원하는 학생들은 지원을 해서 원하는 바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학벌이 필요 없는 직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에 맞도록 기르고, 또 진로 쪽으로 유도를 하는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회 문제가 얽혀 있는 큰 문제라서 고민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셨을까요?

- 우리도 보편적 복지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보수적인 시각들이 있어서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쟁점이 됐는데, 그 전에 경기도 같은 곳에서는 진전이 있었죠. 저는 기본소득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성공시킨 사례가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시의원이 된 95년에 급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서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못 내는 학생들은 점심 때 굶어야 되는 식아동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전국 최초 도입으로 진보정책 기여한 자부심 있어

비참하죠.

- 그때 목포에서 조사해 보니까 결식아동이 5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당시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종교단체나 복지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지원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산법상으로 지원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복지예산을 통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목포시였습니다. 목포시에서 지원을 해서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목포시에서도 예산 문제를 들어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계속 싸우고 사례도 들고 법률 문제도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2000년도에, 아마 대전 유성구하고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결식아동을 돕는 무상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약 10년이 지나서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무상급식을 통해 제가 우리나라 진보를 상당히 앞당기는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무상급식논쟁이 있었고 오세

훈 시장이 시장직을 그만두는 등 파장이 컸습니다. 이 과정들을 쫓 봐왔습니다.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육력이 떨어지고 지역 유출이 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소득, 학생교육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교육감 출마하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선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월 20만원씩 초중고 학생들에게 1년에 240만원을 주게 되면 여기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돈이죠.

- 큰돈입니다, 우리 전남에서 보면.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출생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니는 동안에 주게 되면 교육력도 높이고 지역 소멸을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념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려면 의회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받아들여기가 좀

어려워요, 전라남도의 도민들, 학부모들을 만나면 기본소득 개념이 어렵다고들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도 받고 토론도 했어요. ‘기본소득’ 명칭을 ‘수당’으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나왔구요.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세까지 월 10만원씩이나 8세까지 주거든요, 그걸 연장해서 수당 개념으로 20만원씩 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또 농민회나 이런 쪽에서는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는 등 수당 개념이 보편화돼 있으니 차라리 교육수당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러면 명칭은 그렇게 하자, 어쨌든 간에 근본은 기본소득이지만 명칭은 그렇게 하자고 양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하자면 수당하고 기본소득은 다른 것이긴 합니다. 하여간 그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교육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어떤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미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교육기본소득, 교육 격차 해소에 결정적 역할 하리라 기대

-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제인지, 그제인지 언론에서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했는데 코로나 때문이라는 기사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돌봄을 교육당국에서 방치해가지고 학원으로 몰았기 때문이라는 비판 기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사교육비에 의존하지 않고 있는 데가 전남입니다. 꼴찌입니다. 그러면 전남에서 사교육비가 가장 적게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우리 공교육 기능이 좀 역할을 해서 그런 것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교육비가 도에 따라서 3배 차이가 나요.

시쳇말로 돈 놓고 돈 먹기가 돼 버렸는데, 공부도.

- 그렇죠. 전남에는 들어갈.

돈이 없다.

- 전남에서는 사교육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1차적으로는 우리 학생이 수업을 시로 본인이 하더라도 다 돈 줘서 사서 봐야 하고, 학원 다니고 싶어도 학원이 없거나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 외에도 전남에는 5.7%의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은 고맙게도 다산입니다.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은 자녀 한 명에 월 20만원씩, 두 명이니 월 40만원씩 지원이 되니까 1년이면 48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문화 가정들에게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조손 가정들이 많아요, 가정이 깨져서. 이런 걸 생각하면 전남의 상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기본소득 개념으로 고성군 등에서 월 5만원, 7만원씩 전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크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기본소득,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사회적 취약층에 특히 도움될 것

경남 고성 말씀하시는 거죠?

- 네. 우리는 지역 소멸의 문제, 교육 격차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그리고 전남은 특히 교육문제로 가장 어렵기 때문에 교육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그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을까요?

- 없죠. 왜냐하면 전체 학생에 주는 거니까, 이것은 선별하는 게 아니니까.

기본소득관련 이야기이기는 한데,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올해 열리는데, 전남 목표하고 서울에서 분산 개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시게 된 이유, 준비 사항 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명칭은 교육수당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원래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6개 소멸예상 군, 또 6개 시의 6학급 이하의 작은 학교들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시작만 하게 되면 각 시군의 역량에 따라서 매칭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주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망했던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이뤘던 것처럼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 전남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계적인 차원의 기본소득에서 여러 선구적인 모델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의 제목인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와 닿았어요. 우리의 사례도 이야기하고 범세계적인, 혹은 국가적인 문제들에 대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보완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면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 ‘교육 실천적 삶’, 김대중 대통령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교육철학적 소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 철학 혹은 비전에 대한 본인의 평소 소신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는 전남에서 태어나서 전남에서 교사를 하고 전남에서 교육 행정을 하는 교육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은 저는 정약용 선생님한테 배우면 된다고 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18년 동안 강진에 계시면서 600여권의 책을 저술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교육 방식 속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교육의 좌표가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몸소 실천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약용 선생님의 교육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교육도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교육에 대

해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의 철학 중에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서.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교육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은 서생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은 상인적 현실 감각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기로 실천하기 위해 교육감에 출마를 했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으로써 교육현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학생들의 사고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기본을 너무 도외시하고 다른 나라의 교육 방식을 무작정 도입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성찰을 해봅니다. 한때는 우리 교육의 모든 방향이 핀란드식 모델을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덴마크 열풍이, 지금은 독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의 기본이 그런 것들을 추종해 나가는 방식이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도르프니 뭐 이런 거 말씀이시지요?

-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교육계,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적 상황과 민족적인 도리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있고 DNA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제1과제로서 학생들이 사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인성교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인성을 실천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먼저 하고, 미래교육, 지식교육이 뒤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서생적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 진보, 보수의 입장들을 떠나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것이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면서 소년 김대중 공부방이 있길래 거기를 갔었습니다.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 김대중 대통령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같으시니 더욱 기대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이 교육감 첫 임기시죠?

- 처음이죠.

교육정책을 제대로 펴려 한 10년은 하셔야 되는데...

- 글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으로 뽑으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마는 민심이라는 무대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히 한 시간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 그런데 제가 인터뷰가 아니고 좀 살아온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인생 역정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비슷하죠. 80년대 학번들이.

- 좀 재미있었습니다. 대화하듯 해서.

박승희 열사 선생님이셨다는 거를 알고 놀랐습니다. 이제와

돌이켜 보니 젊은 게 아니라 어린 나이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잘 아는 선배와 편한 대화를 나눈 기분입니다. 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존재'를 응원해

: 십시일반 기본소득 프로젝트 기획자 '자우'를 만나다



자우 십시일반 기본소득 기획자

인터뷰어

한인정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페이스북을 뒤적이다 자우님이 ‘십시일반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누군가를 존재 자체로 응원한다는 말은 나 역시 존재 자체로 응원 받는 느낌이었다. 뜻 깊은 일에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남겼다. 가끔 함께 하는 이들이 보내주는 편지글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다. 그가 궁금해졌다. 무작정 이야기를 걸었고, 그가 주최하는 돌봄 시간에도 참여하며 마음을 나눴다. 프로젝트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무르익은 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인터뷰하자고 연락을 남겼다. 흔쾌히 응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이 이야기가 자신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란다.

꽃샘추위가 살을 에던 3월의 월요일 오후, 광명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포근한 방석에 앉아 돌봄의 손길들이 묻어난 따뜻한 떡국을 대접받았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차를 몇 번이나 내려 먹었는지 모른다. 시계를 바라보니 어느덧 3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멈춰서서 고립과 연결의 경험을 성찰하는 이였다. 전환의 감각을 자신에게서 또 누군가의 시간 속으로 흘러보내는 이였다. 그를 보며 트리나 포올러스 Trina Paulus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떠올렸다. 모두가 쫓아가는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애벌레, 그 길에서 만나는 인연들. ‘덕택에’ 살아간다는 느낌이랄까. 멀게만 느껴지던 공유부가 내 삶에 훌쩍 다가온 느낌이 들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난 당신도 그럴 터이다.

#.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자우라는 이름이 궁금해요. 본명인가요?

- 본명은 아니에요. 지리산 기슭에 있는 실상사에서 받은 이름이에요. 자비로운 비라는 뜻이에요.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 내리는 자비로운 비가 되라는 뜻이에요. 제가 살고 싶은 지향이 담겨 있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광명YMCA 법씨학교라는 대안 학교에서 교사로 지내고요. 가능한 만큼 멸종반란이라는 기후생태정의 활동을 하는 곳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시일반 기본소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씨학교 교사는 어떻게 선택하시게 된 걸까요? 아마 삶의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선택이 이어졌을 텐데요.

- 울산에서 평범한 인문계고를 다니며,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청소년기를 보내고,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되

게 공허한 거예요. 첫 학기에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자취방의 문을 닫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고립감이 확 느껴졌어요. 미지의 세계 같던 서울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세계로 바뀌었어요. 너무 우울했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고, 그 방식이 상당한 고립감과 우울감을 가져다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소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같은 껍데기 속에는 황폐한 내면이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걸 느꼈던 것이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방향을 잃었고, 방향이 시작됐죠.

어떤 방향과 도피를 하셨나요?

- 당시에 국제 자원 활동이라고 있었어요. 한참 한비야 열풍이 불던 때였죠. (오, 저도 한비야가 꿈이었어요. 책까지 다 읽었어요) 맞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좋아보였어요. 마주한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멋져 보이는 삶에 대한 동경이 합쳐져서 국제 자원 활동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베트남을 갔어요. 베트남에서 생김새가 다르고 다른 언어를 쓰는



데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했어요.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의 문화를 알려주고 교류하면서, 존재로서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겨울엔 인도를 갔죠. 그때 절대적 가난에 대해서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 다음 해 여름에 프랑스로 떠났는데, 프랑스는 회색처럼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전에 갔던 국가에 비해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요?) 음. 환대의 느낌도 덜했고, 공원 나가는데 나이 든 남성분이 휘파람 불면서 “나랑 뽀뽀 할래” 이런 성희롱도 있었고, 여성이자, 동양 사람으로서 대상화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국제 자원 활동이 가져다준 감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대학을 가셔도 관계를 맺은 이들은 많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했고, 가면으로 만나는 느낌이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지 못한 채로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열등감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밖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의 어려움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껍데기를 넘어선 만남이 어떻게 가능할

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느꼈던 감각은 달랐어요. 나로서 만나는 느낌이라까. 그 감각이 저에게 소중한데, 그 경험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껍데기’를 내가 나일 수 없는 듯한 느낌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딱 그거예요. 대학교 2학년일 때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대학생이면 경제 수업은 들어야지’ 싶어 경제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 학기에 여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시험을 치러 들어갔는데 난생 처음 시험지가 백지로 보이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성적을 무효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휴학을 해야 하는데 핑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교통사고가 나면 휴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충격적인 거예요. 이까짓 성적 때문에 나를 파괴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게, 도대체 이 껍데기가 뭐길래 내 삶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싶어서. 그때 학교를 때려칠 거라고 난리를 치기도 했죠.

‘언제까지 이 껍데기를 채우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할

건가.’ 그런 고민이 드셨겠네요.

- 그렇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주변을 보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나고,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런 끊임없는 임무가 있는 거죠. ‘나는 절대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자퇴서를 들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교수님이 기억에 남는 말씀 해주셨어요. “네가 고시 공부한다고 했으면 그만두고 했을 텐데. 네가 캄보디아에 해외봉사를 갈 거라고 이야기하니 우리 과(인류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학사경고 받지 않을 정도만 마무리하고, 갔다 다시 돌아오라”고요.

#. “삶이 네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지.”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 휴학하고 캄보디아에 갔어요. KOICA에서 NGO 사업장에 활동가들을 파견하고 활동비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기도 하고, 우물을 파주기도 하는 한 NGO의 사업장에 파견되었어요. 그때 시골 생활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 집에서 소, 돼지, 오리, 닭, 개, 고양이가 다 같이 지내요. 사람들은 나무집 2층에서 모기장 하나 치고 살고, 오토바이로 이동하고, 지나가면서 밥 먹었냐고 서로 안부를 묻고, 밥 안 먹었으면 손가락 하나만 얹어서 같이 밥 먹는 문화를 경험한 거죠.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환대하는 삶 말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민폐를 끼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쪽 진로 생각을 접었죠.

행복했어요? 그런 삶이?

- 네. 진짜 행복을 맛보았어요. 나를 파괴하지 않고 풍요로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명절이 되면 캄보디아 친구 오

토바이 뒤에 타고 사원에 가서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반찬 한 개로 밥을 먹어도 따뜻하고 배부른 느낌이 있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가난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눔의 삶을 살더라고요. 거기서 마음의 여유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GDP로 환산되지 않는 삶의 질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필리핀에서 도시 빈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생활한 적도 있는데. 엄청 열악한 가운데서도 같이 나눠 먹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며 서로를 위로하는 정서가 있었어요. 서로를 챙기는 그런 마음들이 좋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필리핀에 수 백 년 넘게 이어져 온 계단식 논이 있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자들을 맞이해 주던 마리아라는 할머니가 말씀해주셨어요. “이 땅은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에게서 왔다”고요. 그런 만남을 통해 나의 뿌리가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들의 자긍심은 어떤 뿌리에서 오는 거라고 느꼈어요. 저는 뿌리가 없던 것 같아요. 고향이 울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곳에 제가 속한다는 감각은 없었는데,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어딘가에 속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고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게 됐죠.

졸업을 좀 늦게 하셨네요?

- 네. 졸업을 한 뒤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갈까 하다가, 공부는 정말로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필리핀에서 시작하게 된 공정여행을 계속 해야겠다 싶어서 대전에 있는 공정여행하는 청년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공정여행은 돈을 가진 이가 주인공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여행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여행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여행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관계에서 되게 폭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았어요. 당시 대표는 사회적 기대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미성숙한 방식으로 구성원들에게 풀었고, 구성원들은 소진되어 나가 떨어졌어요. 저도 극단적으로 피폐해졌어요. ‘우리는 공정여행을 하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과 관계는 공정하지 않은가.’ 그런 고민이 깊어졌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도망치는 데 성공하셨나요?

- 네. 그때 붙잡은 동아줄이 지리산에 있는 인드라망 대학(이후 생명평화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현재는 운영이 중단되었다)이었어요. 꺼져가는 불꽃같은 저를 환대해 주셨어요. 살 곳도 내어주시고, 먹을 것도 내어주시고. 그야말로 회복할 수 있는 시공간을 선물 받았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드라망 세계관’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세계관이 얼마나 서로를 소외시키고,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고, 외롭게 만들었는지도 돌아보게 됐죠. 그리곤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의사소통 방식부터, 농사를 짓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등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교육이 얼마나 사람을 쓸모없게 만드는 거였는지 돌아보게 됐죠. 그렇게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 살고 있던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음 해 커뮤니티 밥집을 같이 만들게 되었어요. 뭔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하지만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소진이 되기도 하고, 저는 결국 밥집 운영을 그만두고 인드라망 활동가로 남게 되었어요. 지역에서 지리산이음이라는 단체와 함께 청년활동가들을 위한 재충전 프로젝트도 기획해서 진행해보기도 하고요.

인드라망 활동가는 실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생계는 어떻게 이어나가셨어요?

- 생명평화대학 활동가로 소속되어 대학과 관련한 일, 실상사와 관련한 일, 그리고 실상사 작은 학교라는 중고등 대안학교 마을 교사로 일하기도 했어요. 당시 지내는 공간과 먹는 것에 비용이 들지 않아서 월 50만 원 정도를 받고도 생활이 가능했어요.

즐거움 일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 당연히 있었죠. 제가 함께 만든 커뮤니티 밥집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자전거를 타고 유자청을 사러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당시 돌아보면 이미 몸이 소진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힘든 걸 잘 소통하지 못했죠. 사실 이것도 결국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에, 일을 만들고 막 달려가고, 그 과정에

서 나와 주변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소진이 와서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애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애쓰면 자꾸 집착하게 되어서. 그래서 느슨하게 관계 맺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참여하고 애쓰면 그만큼 희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미가 없다보니 삶의 활력이 별로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드디어 법씨학교 이야기가 시작되겠네요.

- 맞아요. 당시 실상사에 방문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분들에게 삶의 활력에 대해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겨울에 제주도를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 중 한 분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법씨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시간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제주도에 도착한 날 우연히 그 선생님을 따라 법씨학교에 가게 됐고, 그때 법씨학교 학생들에게서 솔직하게 자신을 직면하는 힘을 느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침 광명 본교에서 교사를 구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지리산에서의 5년 생활을 정리하고 광명으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법씨학교에서는 어떤 것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 생활교사로서 초등 4~5 학년들을 만나고 있어요. 학생들과 하루하루의 일상을 우당탕탕 같이 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양육자들과 자주 소통하고, 동료 교사들과 회의도 많이 해요. 대안학교에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의 전부다’라는 말을 해요. 그만큼 교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교사가 자신답게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고, 교사들이 서로에게 엄청 코멘트를 해줘요. 방학 때마다 교사 연수를 가는데, 그때 속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가 잘 꺼내지질 않았어요. 선생님들의 질문은 계속 들어오고... 그때 엄청나게 울기도 했죠(^.^). 정말 우여곡절은 많았는데, 내 안의 껍데기들(예를 들면 눈치를 보고,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잘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좌절감을 겪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들이요)이 깨어지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과정을 함께 해



주는 동료 선생님들이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나답게 살아가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십시일반기본소득 프로젝트: 물질과 이야기가 흐르는 일

깍대기는 가라. 시 읽는 것 같아요. 알맹이를 찾기 위한 여정. 자취방에서 고립감을 느꼈던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십시일반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십시일반기본소득 프로젝트는, 한 존재를 응원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어서 누군가에게 이를 선물해주는 프로젝트예요. 1년 동안 매월 50만원을 선물하고요. 보통은 한 사람이 5만원을 내시는데, 자신의 형편에 따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각 프로젝트당 십여 명 내외의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은 3번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곧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이 나요. (3월부터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맺음이 되었다)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아마 자우님의 삶의 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지리산에서 지냈을 때 사람들이 내어주는 것들에 의지해서 긴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잖아요. 그러다 보니 삶을 전환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았죠. 삶의 불안정성을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께 해결할 방법으로 작게나마 십시일반 기본소득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전환의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실현하기에 삶의 형태가 너무 불안정한 분들의 예가 있다면요?

- 예를 들면 첫 번째 십시일반기본소득을 받은 동료는 동물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동물권 활동이라는 것이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말하는 ‘일’들을 병행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이가 하는 일, 동물들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일들은 이 사회를 깨어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덕에 깨어난 한 명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그의 삶의 기반이 너무나



불안정해서 생활을 제대로 해갈 수가 없다는 게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이가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지낼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또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보았어요. 하지만 전환의 삶은 그들에게만 유용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환의 씨앗을 뿌리고 길러내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 시공간을 찾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뭐라도 하자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것이고, 저와 뜻이 맞는 분들이 함께 해주신 거죠.

그럼 이 프로젝트를 전환을 위한 무엇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환과 돌봄을 위한 지지망, 안전망, 씨앗 그런 것이라고 봐요. 제가 최근에 십시일반기본소득을 받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막상 돌보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존재를 돌보지만, 막상 나를 돌볼 힘은 사라지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들의 활동은 '활동'이라고 말해지지 않는데, 십시일반 기본소득은 그런 이들에게 약간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나를 돌보는 데 사용하고요. 돌봄이 선순환되는 거죠.

방금 이야기하시다가, '활동이라고 말해지지 않는 활동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십시일반기본소득을 받게 된 동료는 이전에는 동물권 활동가였고. 지금은 동물권 활동을 하지 않지만, 내면 작업을 하면서 채워지는 에너지로 다른 활동가들을 돌보는 활동을 해요. 임금노동을 하지는 않지만 그이의 돌봄 또한 의미 있는 활동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는 종종 틀 밖에 있는 활동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라보고요. 하지만 홀로 가능한 활동은 없어요. 다른 돌봄들에 기대어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요. 요즘 '쓸모'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해 성찰하게 돼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 있으셨어요?

- 십시일반 기본소득을 받는 분 중에서 기본소득 받는 것으로 본인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었

어요.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계속 고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챙기지 못하게 되면 소진되고, 결국엔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서로 돌보기 위해서는 돈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상호부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공적 시스템도 있겠지만, 그건 충족시켜야 하는 여러 기준이 있잖아요. 뭔가를 증빙해야 하기도 하고, 성과를 위해서 써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존재’를 지원하는 방식을 만들어야겠다 싶었죠.

공적 지원시스템은 돌보는 일들을 지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모순적으로 느껴져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단체에 몇 천만 원씩 프로젝트비가 입금돼도 인건비는 전혀 없거나 아주 적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을 값싸가며 일을 해내야 하죠. 일이라는 것들이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왜 그렇게 흘러가는 걸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죠.

이 프로젝트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넣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2014년에 기본소득을 알게 됐거든요. 당시에 ‘내 통장에 매달 70만 원씩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내 삶과 지역사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를 묻는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리산에 사는 친구들이랑 그걸 했거든요. 사실 그들은 이미 적은 돈으로도 삶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던 이들이라, 바라는 게 크지 않았어요. 다만 기본소득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삶을 보다 안정감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상상했어요. 그걸 계기로 기본소득에 관해 관심이 생겼고, 기본소득의 철학이 맘에 쏙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맘에 ‘썩(!)’ 드신 걸까요?

- 무조건성이요. 조건 없이, 증빙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당연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개별성에 대한 인정도 좋았어요. 사실 많은 구성원이 가정에 종속

되는 위치에 있는데 기본소득은 각 개개인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무조건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지향을 이 프로젝트에도 반영하고 싶었어요. 저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너무 좋거든요. 저 역시 지리산에서 살 때 기본소득과 유사한 것을 받은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지리산에 먼저 정착한 선배세대들이 돈을 모아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1년 간 기본소득을 주는 ‘청년 활력 기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옆에서 목격한 경험도 있었죠. ‘십시일반’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왔어요.

그 경험이 자우님께는 어떻게 와닿았어요?

- 사실 너무 얼떨떨하면서도 신기했어요. 그전에는 되게 날카롭고, 소진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리산에서 사람들이 지낼 곳도 마련해주고 먹는 것도 주고 기본 생활이 해결되니깐 큰 걱정 없이 잘 누렸어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깐 삶의 여백이 생겼어요. 그런 원 경험을 하고 나니깐 ‘세상에 사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존재 자체로 응원 받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던 것 처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시일반 뒤에 무엇을 붙이면 좋을까 했을 때, 그 지향이 기본소득 철학에 가까워서 십시일반 기본소득이 되었어요.

기본소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하셨던데요. 어떠셨어요?(참고로 자우가 진행한 십시일반 기본소득 프로젝트 인터뷰 전문은 <http://blog.naver.com/jawoo0513>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원래는 기본소득을 받는 친구들의 소식을 아예 공유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증명하는 것들을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선물의 이야기가 흐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과 그 모습을 기꺼이 지지하는 마음 간의 연결고리랄까요. 그 흐름이 사실은 서로 돌봄이고, 선물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선물 받는 이와 선물하는 이의 마음들을 가능한 만큼 기록하게 됐죠.

어떤 마음들이 흐르고 있던가요?

- 기본소득 프로젝트에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 중에 고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누군가의 활동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고마움이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예술’로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거리에서 소리치고, 성명서를 읽고,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경제적 보상이 없다 보니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죠. 또 ‘주고받는 감각’에 대해 표현해주는 분들도 많았어요. 사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는 우리는 ‘받는 것’을 꺼리죠. ‘빚’이 되어버린다는 감각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깔끔하게 더치페이하고.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이처럼 부담감도 의무감도 없는 사회가 얼마나 삭막한가요. 서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요. 그런데 십시일반기본소득은 ‘서로 신경 쓰면서’ 주고받는 감각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맞아요. 저도 기본소득이 그런 감각들을 일깨워서, 연결감을 만들고, 각자가 저마다의 색깔로 열렬하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나요?

- 십시일반기본소득을 받는 분이 들려준 얘기인데, 사회운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생계는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생계를 해결해내지 못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 세계에 내 자리가 있구나. 나를 환대하는 존재들이 있구나.’ 그런 감각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전에는 막연히 돈을 더러운 것으로 봤는데 환대의 감각을 통해 흐르는 돈은 어떤 신성함을 일깨울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자우님은 이런 프로젝트가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됐으면 좋겠나요?

- 그런 마음이야 당연하죠. 사실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하고 있지만 금액이나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저는 기본소득의 가치가 최대한 알려지는 방식으로 정책이 입안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들,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던 것들, 그것을 독점화하면서 이익이 생겨나는 것들

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면 좋겠어요. 저에게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공통의 권리가 있고, 그것이 태초에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해가는 거예요. 지구에게서 받은 선물은 나 혼자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거잖아요. 나 이외의 존재들은 물론, 세대를 넘어선 인식도 중요하죠. 그런 철학이 기본소득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면 좋겠어요.

기본소득을 소비 촉진제로 이야기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 네, 기본소득이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감각을 일깨워줄 텐데 그것이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나의 권리라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 역시 가져가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의 기본소득이 그런 감각으로 이해되는 것 같진 않아요. 기본소득이 단지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기본소득의 철학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고 느껴져요.

물론 자우님 이야기가 모두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철학까지 가닿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당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시가 급한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기본소득이 우선 시행된다면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할까요?

- 제 지향은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 전환을 위해서 정성과 에너지를 쓰고 계신 분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살아내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런데도 진짜 조건을 두고 싶지 않아요. 농촌 기본소득으로 해야 하나, 생태 활동으로 해야 하나, 생태활동을 어떤 식으로 정의해야 하나, 그런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사실 맘 같아선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십시일반 기본소득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럼 모두가 서로서 손을 잡아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의외로 손을 잡아주고 싶은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사회적 상속에 관심을 가



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유무형의 자산을 가진 이들과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연결될 수 있을지가 고민되어요.

사회적 상속이 뭐예요?

- 저도 60+기후행동을 하시는 윤정숙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하시고, 그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의 시기를 거쳐 오며 유무형의 자산을 갖게 된 어른들이 본인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필요한 이들(주로 청년세대)에게 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사회적 상속’을 운동 차원에서 고민하시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요즘 십시일반기본소득을 시작했던 첫 마음을 떠올리며 사회적 상속을 디자인 하는데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생태적 전환, 기후정의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적성이 존재하는 화폐라면, 존재 자체로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와는 조금은 색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네요. 자우님은 앞으로도 십시일반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유지해 가시려는 건가요?

- 지금 3번째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데 이제 첫 번째 기본소득을 받는 친구가 올 3월에 1년 과정이 마무리되거든요. 계속 후원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사회적 상속을 운동 차원에서 고민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흐름을 보려고 해요.

슬슬 마무리 질문할 시간이 왔네요. 그럼 이런 생태적 전환의 삶을 지원하는 방식을 지속한다면 이 사회는 또 자우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 지금은 나밖에 생각을 못 하는 고립된 사회잖아요. 그런데 십시일반기본소득 혹은 사회적 상속과 같은 시도들이 지속된다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각자가 자기답게 살아가며 연결됨 또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각자의 고유성과, 세상의 통합성을 함께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함께 성숙해가고 싶어요. 자신의 빛을 마음껏 발산하면서요.

펼쩍펼쩍 뛰며 놀자고 보채는

이영광
시인

할인 행사 개업 행사나 떨어하는 데 줄 서서 기다렸다가 뭘 사는 걸 좋아합니다. 명당이라는 로또 가게 앞에 둥글게 띄리 튼 긴 줄도 좋아하고요. 혈한 곳에 있을 때면 다 같이, 조금 덜 혈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 평생 유리했어, 어딘가 늘 한 자락 여유가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싫습니다. 어쩐지 쌤마이로, 비싸 보이는 거요. 나 평생 불리했어 어디에도 한 자락 여유가 없었어, 하는 생각이었으면 좋겠소…… 하지만,

진짜진 몰라요. 유리하게, 조금 쪼들렸던 거 비싸게 군 거겠지. 지난날, 지난날을 꿈처럼 살아서 아마도 노후는 화성 같겠지만 노후라니, 내가 노후를 생각하게 된 게 어딴니까. 사는 덴 어디라도 비비고 기델 덜 아픈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쩌다 시만 좀 쓰려고 하면 이런 생각들이 스르륵 사라져요. 불리한 곳, 비빌 데도 기델 데도 없는 곳에서 유실된 말이 아니면 금방 싫증이 난다는 건데……. 사실 사라짐도 싫증도, 여유가 있어요. 땡땡거리면서,

하품하면서, 비명 아니면 신음만 듣다가 또 하루가 갑니다. 안 비싸지질 못하고 빈둥거리다가, 쌤마이로 태연히 저문다는 거예요. 나는 대책도 무대책도 없는데, 시는 늘 펼쩍펼쩍 뛰며 놀자고 보채는 아이 같지요

•이영광

1998년 『문예중앙』으로 등단. 시집으로 『그들과 사귀다』 『나무는 간다』 『끝없는 사람』 등이 있다.

69시간

손택수
시인

수염이 째깍거린다
시계가 턱에 걸려있다
아침에 깎은 수염이 까끌해 오면
오후가 지났다는 신호다
초침이 살갓을 뛰쳐나왔다면
퇴근시간이 임박했기 때문,
잘 간수하고 있던 표정이 일그러지고
눈언저리 근육이 실룩이면
자정이 가까웠다는 뜻
불면증 치료를 받기 위해
시간외수당을 번다
어릴 땐 잠보였는데
나는 그때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있었나 보다
턱, 턱 숨이 막혀온다
다시 알람을 맞추듯
책상 서랍 속의 전기면도기를 돌린다
69시간이라니 망측하게,
69엔 노동도 성도 없다
나의 수염 시계, 턱은 시방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겨우 여기

강영숙

소설가

지은은 최근에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기혼 여성 본부장 발탁은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해서 은근히 자부심마저 느꼈다. 작은 부동산 개발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소 규모이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회사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도움이 컸다. 물론 제일 큰 도움은 엄마로부터 받았고 지은은 늘 엄마 생각을 했다. 이제 엄마한테 모피 코트를 사줘야지, 이제는 정말 사줘야 해, 그걸 못 하면 난 사람도 아냐. 지은은 첫 달 급여명세서를 보며 살짝 웃었다. 정기적인 인상 폭이라고 해봐야 5퍼센트 정도인데, 이번엔 달랐다. 엄마에게 모피 코트 정도를 사주는 건 당연한 보답이었다. 내가 무슨 셸럽이어서 엄마한테 모피 코트 사준다고, 생태 환경 무시한다고 비난할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 꼭 사드리자! 지은은 뿌듯했고 이 모든 변화된 상황을 견인한 자신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일 년 중 3월은 회사 일정상 가장 분주했다. 투자자들이 결정되는 시기라 눈이 다 돌아갈 지경이었다. 게다가 다음 주에는 창립기념일 기념식도 진행해야 하는데 챙길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팀장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디테일에 민감한 지은은 케이크 디자인, 기념식장 배경 화면 디자인에 식사 장소까지 직접 챙겼다. 다른 사람이 하면 뭔가 완벽한 느낌이 덜했고 조금씩 조악하거나 어색한 부분이 보였다. 게다가 지은은 자신이 모르게 어떤 일이 결정되는 것을 전혀 용인하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했다.

지은은 정 팀장이 케이크 업체에서 받아 전달해준 레터링 문구를 워크 스페이스 앱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고 있었다.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창립 15년 진진투자개발그룹이 당신의 자산과 투자를 책임집니다.

축하 메시지를 짧고 심플하게 바꾸고 케이크 위와 옆

면의 모든 불필요한 장식을 다 제거하라고 썼다. 그리고 지은은 상상했다. 창립기념일 당일 케이크를 들고 직원들 앞으로 걸어 나갈 자신의 모습을…….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장식을 다 없애면 약간 썰렁하지 않을까요. 브로콜리나 버섯 없이 접시에 덩그러니 올린 스테이크 같다고 할까.

지은은 부하 직원의 글을 읽으며 혼자서 피식 웃었다.

열한 시 오십 분이 되자 직원들이 일제히 사무실에서 나갔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건물 지하 식당가로 내려가는 동안 지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업무 관련도 아니고 모르는 번호여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오늘 점심 메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었다. 지은에게는 결정 장애가 있었는데, 순간 직원들이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카레 먹으면 괜찮겠다. 지은은 그 순간 바로 카레로 결정해버렸다.

늘 먹던 민치 카레를 주문하고 동료들이 하는 드라마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다. 갑자기 식당이 소란해지는 듯해 지은은 바깥으로 나왔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사무실로 올라갔다. 그리고 빠르게 가방을 챙겨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시동을 켜기 전 지은은 트렁크에서 운동화를 꺼냈다.

지은의 엄마 용선이 일하는 마트는 국내에서는 꽤 큰 규모의 푸드 전용 프리미엄 매장이었다. 그동안 용선은 주로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용선은 나이에 비해 동안이기도 했고 마트 일을 즐겼다. 용선은 지원하는 곳마다 거의 채용이 됐고 일하는 동안은 늘 웃는 낯으로 손님에 대해 회사 평가도 좋았다.

평일 낮에 마트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 있다. 1층 마트는 거의 저온 창고처럼 느껴질 지경이었다. 지은은 약간 당황해 방향을 잃고 허둥댔다. 그러다 층별 안내도를 확인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 바닥을 초록 색깔로 칠한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표시된 사무실 존이 보였다. 지은은 노크하고 난 뒤 기척이 있기까지 기다렸다. 푸른색 점퍼를 입은 남자 한 명이 문을 활짝 열고 지은을 안쪽으로 안내했다. 지은은 회의 테이블로 안내되었고, 푸른색 점퍼를 입은 다른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안쪽에서 나와 지은이 앉은 회의 테이블로 왔다.

그들은 먼저 CCTV 화면을 보여주었다. 상단에 표시된 날짜는 2022년 2월 7일이었고 시간은 마트 영업 종료 시각 직전인 밤 열 시 사십 분쯤이었다. 시간대가 늦고 코로나 때문인지 매장은 지나치게 썰렁해 보였다. 매장 판매 사원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냉동식품 코너의 진열장에서 물건을 집어 가방에 넣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화면의 어느 쪽도 클로즈업한 것이 아니었지만 지

은은 흑백 왼쪽 모서리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머리 전체를 모자로 감싼 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은 분명 엄마였다.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건가요? 이분이 저희 엄마인 건 맞지만요.

순간 앞에 앉은 푸른 점퍼의 남자가 갑자기 잔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다.

-자 그럼, 7일 이전인데 다른 날 화면도 한 번 보실까요?

남자가 손바닥으로 입을 감싼 채 화면을 확대했다. 화면 속의 직원은 매대 위쪽에 있는 상품을 꺼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는 중이었다.

-저희 엄마가 지금 저기서 물건이라도 훔쳤다는 건가요?

지은은 얘기를 빨리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었다. 옆에 앉아 있던 여자 직원이 지은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저는 여기 마트 직원은 아니고 정용선 님을 고용한 식품업체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용선 님은 우리 회사 소속이세요. 이전부터 마트 보안 담당자께서 정용선 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제가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따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머니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물품을 빼돌리셨고, 증거는 CCTV에 다 있습니다.

직원이 말하는 물품이란 냉동만두와 냉동피자 같은, 돌덩어리처럼 팽팡 언 냉동식품이었다. 지은은 갑자기 다리가 풀렸다. 엄마는 식탐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은 더욱 아니었다.

-아니 저거 그냥 만두잖아요! 비싼 것도 아니고.

지은은 갑자기 안성을 높였다. 식품업체 직원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말을 가로채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그런 물건이 있을 때는 회사에서 다 수거하셔야 하잖아요. 엄마가 수거를 대신해준 거니까요.

지은은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저희 마트 원칙상 이런 경우 절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을 가볍게 처리했다가는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저희 마트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고 지하 사무실 공기가 몹시 냉랭했다.

-아니, 겨우 만두잖아요!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팔짱을 끼고 테이블에서 물러나 앉았다.

-오늘 따님께 연락을 드린 것은 어머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서 출근을 하겠다고 하세요. 어머니 설득을 부탁드리고 여기 명세서와 입금처를 드릴 테니 이쪽으로 배상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더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정용선님께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선처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선님이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반쯤할 물건이라고 해서 사유화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님께서는 이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은은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들이 밀려왔다. 지은은 5층 옥상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는 것도 잊어버렸다. 지은은 몸을 이쪽으로 돌렸다 저쪽으로 돌렸다 허둥거렸다. 사람들을 따라 마트 입구에서 손 소독을 하고 입구 게이트를 통과해 마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적당한 냉기와 차분한 음악 때문에 지은은 여기 지금 왜 와있는지를 잊었다. 수도 없이 늘어선 T자 모양의 판매대와 거기 담긴 물건이 모두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졌고, 점심을 먹지 못한 배에서는 몹시 큰 소리가 났다. 지은은 하루아침에 불행의 한가운데 떨어진 기분이었다.

지은은 느릿느릿 신선과일 판매 코너를 통과하고 수산물 코너를 통과해 냉동식품 판매대에 도착했다. 자주색 스커트에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 두건을 쓴 여자들이 각 상품 판매대마다 붙어 서서 손님들에게 뭔가를 팔고 있었다. T자 판매대 앞에서 한 여자가 CCTV에서 본 용선과 똑같은 차림으로 프라이팬 위에서 만두를 굽고 있었다. 자세히 다가가 본 그 여자의 종아리엔 압박 스타킹이 신겨져 있었고, 신발은 서 있기 편한 기능성 신발이었다.

-손님 만두 좀 드셔보세요. 저희가 지금 봄맞이 행사 중입니다. 만두 두 팩을 한 개 가격에 가져가세요.

지은은 여자에게 다가갔고 여자가 주는 초록색 이쑤시개로 만두 한 개를 집어 먹었다. 입 속에 들어간 만두는 굉장히 뜨거웠다. 지은은 말없이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두 팩 드릴까요? 계산은 나가실 때 하시면 됩니다.

지은은 만두 두 개를 담은 봉지와 신용카드를 들고 가만히 서 있다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손님, 잠깐만요.

그때 판매원이 다가와 지은의 손에 들린 비닐에 바코드 라벨을 붙이고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지은은 냉동식품 코너를 지나고 와인 코너를 지난 뒤 매장 끝의 다이소와 생활잡화 코너까지 갔다가 다시 냉동식품 판매대로 돌아왔다. 판매원은 아까처럼 만두를 굽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판매대에 놓인 만두를 더 잘 보이도록 진열하고 있었다.

-저기, 혹시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지은은 판매원에게 다가갔고, 여자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지은을 쳐다봤다.

-저요? 오늘 아침부터 시작했어요. 혹시 담당 관리자님이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 실수를 용서하세요. 제가 대답이 좀 늦었죠?

-실수라뇨, 그냥 여쭙본 겁니다. 수고하세요.

지은은 여기가 엄마가 일하던 자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CCTV에서 용선은 두 팔을 깎지 꺼 허리 뒤로 하고, T자 형 진열대 끝, 냉동식품을 앞면으로 전시해놓은 진열대 옆모서리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가끔 손님들이 지나가면 벽에서 몸을 떼고 만두를 설명해주고는 손님이 없으면 다시 판매대의 측면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한쪽 발바닥을 바닥에 툭툭 치면서 그렇게라도 조금씩 쉬는 모양이었다. 의자라도 하나 있다면 다리가 아플 때 앉아 있을 텐데, 지은은 마트에는 의자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몸을 기댄 순간 뒹뒹대는 냉장고 소음이 더 잘 들리고 등이 차가워졌을 것이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잠이 쏟아졌겠지. 누구나 종일 서 있으면 졸릴 만도 했다. 오전 아홉 시에서 밤 열 시, 설마 엄마는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걸까. 지은은 입술을 물었다. 엄마의 자리는 엄마 대신 취직한 저 여자 판매원이 몸의 한쪽을 기대고 서 있는 돌출된 냉동식품 진열대 옆이었다. 엄마도 저 여자 판매원도 기댈 곳은 차가운 벽뿐이었다. 딸은 본부장이 되었지만, 엄마의 자리는 바로 저기였다. 지은은 그제야 엄마의 실존을 본 것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은 믿기 어려웠다.

디너코스

최진영

소설가

오석진(61)의 환갑을 앞두고, 가족들은 단독방에서 간략한 대화를 나눴다. 생일에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김영선(57)은 집 근처 참치회 전문점을, 오나영(27)은 시내 외곽의 한상차림 한식당을 추천했다. 오민영(24)은 ‘무조건 소고기!!’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다음은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

김영선 구워먹자고?

오민영 스테이크면 더 좋고!!

오나영 4인 스테이크면 너무 비싸

오민영 그래도 환갑인데 소고기 먹자아!!ㅠㅠ

오나영 가고 싶은 레스토랑 따로 있어?

오민영 널 서치해볼게

김영선 오랜만에 가족 외식인데 룸에서 여유롭게 차치 코스 먹지?

오나영 (한상차림 사진을 올린 뒤) 이게 바로 잔칫상이지 없는 게 없음

오민영 스테이크 먹자아

오석진 그냥 집에서 먹으면 안 돼? 음식하기 귀찮으면 배달시켜서

김영선 집에서 먹는 거 자체가 귀찮고 그래도 환갑인데 배달음식은 아니지

오석진 내 생일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김영선 참치회랑 한상차림 중에 당신이 골라

(몇 분 후)

오석진 그럼 난 중국요리 코스로

중국요리 전문점 ‘화양연화’의 매화룸. 동그란 테이블에 모여 앉은 네 사람 앞에 게살스프와 샐러드와 냉채가 놓였다. 오민영은 스프를 떠먹으며 투덜거렸다. 여기

코스 가격이나 스테이크 가격이나 비슷한 거 아니야? 오나영이 대꾸했다. 가격은 둘째고 양부 터 다르잖아. 오석진은 작은 술잔에 고량주를 따르며 가족들에게 말했다. 다들 한 잔씩 하지? 오나영은 칭따오를 오민영은 생맥주를 주문했다. 오석진이 말했다. 너희가 아직 모르는구나. 기름진 음식 먹을 때는 도수 높은 술 마시는 거야. 그래야 기름기가 싹 씻기지. 맥주는 헛배만 부르고, 일단 요리에 곁들이는 술이 아니야. 김영선이 이어 말했다. 이런 걸 맨스플레인이라고 하지 않나? 오석진은 김영선의 술잔에 고량주를 따랐다.

나까지 마시면 운전은 누가 하고?

그래도 내 생일인데, 당신도 한 잔 해야지.

그럼 운전은 누가 하느냐고 김영선이 다시 물었다. 이 정도는 괜찮다니까. 도수 높은 술은 금방 날아가. 오나영이 눈을 크게 뜨며 아빠! 하고 소리쳤다. 오석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도 오석진은 ‘진짜 딱 한 잔 마셨다’는 거짓말을 반복했다. 음주운전의 방점은 ‘딱 한 잔’이 아니라 ‘마셨다’에 찍힌다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회사에서 본부장이 아무도 웃지 않는 징그러운 농담을 던지거나 납득할 수 없는 고집을 부려 아이템 진행을 어렵게 만들면 오나영은 아빠를 떠올렸다. 우리 아빠도 회사 다닐 때는 누군가에게 끔찍한 존재였겠지? 생각하면…… 서글프면서도 화가 났다. 방금 아빠가 한 말,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말 또한 본부장이 자주 하는 말이었다. 본부장의 ‘괜찮다’를 진짜 괜찮음으로 만들기 위해 오나영과 동료들은 주말 특근을 하거나 계획에 없던 출장을 가거나 거래처마다 전화를 걸어 ‘죄송하지만’ ‘이번 한 번만’ ‘가능할까요?’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다. 본부장이 저질러놓은 일을 수습할 때마다 오나영은 분노에 사로잡혀 생각했다. 일을 저 따위로 하면서 어떻게 본부장까지 간 거야? 사실 오나영은 이해하고 있었다. 일을 저 따위로 해도 알아서 처리해주는 (자기 같은) 직원들이 있어 본부장까지 갔다는 것을. 본부장은 회사를 그만 둘 생각 따윈 없었다. 그런 생각은 언제나 오나영 같은 사람들이 했다.

엄마도 마시고 싶으면 마셔. 운전 내가 할게. 오나영은 자기 앞의 맥주잔을 치우며 말했다.

됐어, 너 마셔. 난 별로 안 내켜. 김영선이 대꾸했다.

그냥 마시고 대리 부르면 안 되나? 오석진이 말했다.

그럼 대리비 나 줘. 내가 운전할게. 오민영이 끼어들었다.

당신은 내 말을 어디로 듣는 거야. 내가 술 안 내킨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김영선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오석진에게 말했다. 여기서 집까지 대리비 얼마 안 나올 텐데. 오석진이 대꾸했다. 김영선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식당 직원이 룸으로 들어와 테이블의 빈 그릇을 치우고 전가복을 담은 접시를 내려놓았다. 오민영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위주로, 오나영은 오징어

와 야채 위주로 개인 접시를 채웠다. 오석진은 해삼 하나를 집어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입에 안 맞아? 김영선이 물었다. 기다렸다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오석진이 대답했다. 그럼 아빠는 오늘부터 할아버지야? 오민영이 물었다. 내가 어딜 봐서 할아버지냐. 법적으로도 65세 넘어야……. 오석진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오나영이 물었다. 연금은 언제부터 받아? 설마 연금까지 당겨서 날린 건 아니겠지? 그 질문에는 약간의 가시가 돌아 있었다.

5년 전 오석진은 명예 퇴직했다. 어차피 부장 다음으로 올라갈 자리도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퇴직금을 받아서 주택담보대출금을 마저 갚았다. 오석진은 그동안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을 계속하길 원했으나 55세 경력직을 채용하는 회사는 없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남은 퇴직금이 약소했다. 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대출을 받을 배짱 또한 없었다. 그래서 오석진은 주식을 했다. 약소한 퇴직금은 전부 사라졌다. 김영선은 오석진의 주식 투자와 실패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출이라도 갚았으니 다행이라고 여겼다. 오석진과 30년 간 부부로 살면서 김영선이 터득한 정신 건강 증진 방법 중 하나였다. ‘그나마 다행’부터 찾아내기. 그 시기 김영선도 오랫동안 다니던 출판사에서 나왔다. 연봉은 적고 업무는 많은 곳이었으나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보장해주었기에 꾸준히 다닐 수 있었다. 사장의 퇴사 압박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직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휴직한 사람의 자리를 지켜냈다. 직원들은 손수건을 돌리듯 돌아가며 휴직하고 복직했다. 사장은 젊은 시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생각하는 노동자의 카테고리에 ‘여성’과 ‘청소년’은 없었다. 퇴직 후 김영선은 국비 지원 직업교육을 받다가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영선의 침착하고 꼼꼼한 성격과 도배 작업은 잘 맞았다. 책을 만들 때보다 스트레스는 덜했고 성취감은 컸다. 김영선은 그 일을 80살까지 하고 싶었다.

그럼, 연금은 절대 지켜야지. 내가 날린 건 내 청춘뿐이야. 내 노년은 지켰어.

오석진의 대답을 듣고 오나영은 피식 웃었다. 오나영은 오석진을 ‘대책 없이 무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뒤끝 없고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오석진은 구김살이 없었다. 환갑이 되도록 구김살이 없다면 둘 중 하나 아닐까?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나 천성이거나.

그들 앞에 칠리새우가 놓였다. 오석진은 이번에도 새우를 하나만 집어 맛만 봤다. 근데 너 카톡 프사는 무슨 의미야? 김영선이 물었다. 프로필 사진을 바꾼 후 오나영은 비슷한 질문을 꽤 받았다.

알면서 뭘 물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뜻이야?

알면서 왜 자꾸 물어.

근데 그걸 꼭 선언까지 해야 해? 이번에는 오민영이 질문했다.

결혼이 디폴트니까 선언이 필요하지.

결혼을 안 하겠다고? 이번에는 오석진이 질문했다.

아, 왜 자꾸 같은 걸 물어. 돌아가면서.

그래? 그럼 아빠는 찬성. 당신은?

우리 찬성이 뭐 의미 있어. 다 큰 성인한테.

김영선이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오나영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부모를 쳐다봤다. 그럼 아이는? 아이도 안 낳을 거야? 그래도 자식은 있는 게 좋을 텐데? 김영선의 질문에 오나영은 더욱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비혼 출산을 원하는 거야?

확실히 결혼은 여자한테 손해야. 근데 출산과 양육은 또 다르거든. 그건 결혼이란 개념이 완전히 달라. 엄마는 네가 그 경험은 해보면 좋겠거든.

내가 비혼을 선택한 이유가 뭘 것 같아?

가부장제? 경력단절? 믿을 만한 남자가 없어서?

오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그거 다 맞는데, 가장 큰 이유는 돈. 아이가 생긴다면 나는 부모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거든. 그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결혼을 한다면 결국 나와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랑 하겠지? 그럼 돈 때문에 휘청휘청하겠지? 휘청휘청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경험 대비 리스크가 너무 커. 혼자 사는 게 답이야. 그게 가장 예측 가능해.

오석진이 고랑주를 훌쩍이며 중얼거렸다. 이래서 저출산 이슈가 계속 나오는구나. 오나영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아, 나는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돼. 있는 사람도 못 챙기면서 왜 자꾸 더 낳으라는 거야.

고추잡채와 꽃빵이 나왔다. 이번에도 오석진은 고추잡채만 조금 집어 맛을 봤다. 대체 무슨 요리를 기다리는 거야? 김영선이 물었다. 오석진은 질문과 다른 대답을 했다. 당신도 알지? 김태형이라고, 공주에서 양조업 크게 하는 친구. 엇그제 개한테 연락이 왔는데 못 쓰는 양조장 건물 하나를 수리해서……. 김영선이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난 반대. 뭐든 다 반대. 당신 실패는 주식까지야. 그 이상은 없어. 오석진이 말을 이었다. 그런 게 아니고, 개는 나 돈 없는 거 알아서 투자하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아.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내 별명이 땅거지야. 나는 여태 애들 만나면서 밥값 한번 내본 적이 없어. 내가 계산하려고 하면 다들 말리느라 바쁘다니까? 오나영은 묘한 표정으로 오석진을 쳐다봤다. 저런 말을 해맑게 웃으면서 한다고? 친구들이 땅거지

라고 부르는데도 아무렇지 않다고? 오석진의 말이 이어졌다. 아무튼 개가 양조장 건물을 문화 공간처럼 바꿀 거래. 커피도 마시고 독서모임도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맘 편히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야. 젊은 노인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나보고 같이 일할 생각 없느냐고 묻는데. 진지하게.

당신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해?

나 바리스타 자격증 있잖아. 직업 교육 때 따놓은 거.

평생 사무실에서 페이퍼만 들여다본 사람이 서비스직을 할 수 있겠어?

일단 해봐야 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빠, 근무 시간이랑 페이는? 그런 얘기도 했어?

그건 아직. 하겠다고 말하면 알려주겠지. 아마 최저로 주지 않을까?

식당 직원이 들어와 테이블에 꺾바로우를 담은 접시를 놓으며 메인 식사 주문을 받았다. 김영선은 마파두부덮밥, 오나영은 고추잠뽕, 오민영은 삼선우동, 오석진은 사천짜장을 골랐다. 우리 가족은 각자 취향이 뚜렷해서 참 좋다고, 우리는 메뉴 통일 이런 거 절대 없다고 오석진은 웃으며 직원에게 말했다. 직원은 세련된 미소를 건네며 주문을 확인했다. 그의 군더더기 없는 응대를 보며 오나영은 생각했다. 아빠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아빠는 괜찮아? 자존심 안 상해?

자존심이 왜?

아니, 그래도 아빠는 회사에서 부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제와 친구 밑에서 최저시급 받으며 일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솔직히 아빠 친구들 말도 기분 나쁘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친구한테 땅거지가 뭐야.

오석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아직 젊어서 그래. 나는 이제 그런 거에는 자존심 생각도 안 들어. 우선 난 땅거지가 아니니까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여태 했던 일이라면 모를까 완전히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건데 최저시급 받을 수도 있지. 아빠가 살아보니까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은 따로 있더라고.

어떤 거?

음…… 내가 최선을 다해 숨기려는 걸 상대가 억지로 들춰낼 때? 그럴 때는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는 느낌이라 본능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거든.

예를 들면?

방금 아빠가 말했잖아? 최선을 다해 숨기는 거라고. 그걸 내 생일에 내 입으로 말해야 할까?

오석진의 부드러운 대꾸에 오나영은 입을 다물었다. ‘대책 없이 무모한 사람’과 ‘뒤끝 없고 낙천적인 사람’ 말고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다. 어쩌면 아빠는 본부장과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이제부터는 회사에서 서글픔 없이 화만 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더불어 궁금해졌다. 본부장이 최선을 다해 숨기고 있는 건 뭘까.

메인 식사가 들어왔다. 앞선 요리를 배부르게 먹은 오나영은 고추잠뽕을 두어 젓가락 먹고 말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듯 호기롭게 사천짜장을 먹는 오석진은 전혀 노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30년 넘게 했던 일을 놓고 이제 다시 최저시급의 세계로 들어설 오석진을 바라보며 오나영은 ‘백세시대’라는 말을 생각했다. 정말 백 살까지 산다면 오석진은 이제 절반 조금 넘는 인생을 살았다. 황혼보다 정오, 디너보다 런치에 더 가까운 나이.

생일 축하해, 아빠.

오나영이 맥주잔을 들며 말했다. 오민영도 생맥주잔을 들었다. 김영선은 물잔을, 오석진은 고량주잔을 들었다. 네 개의 잔이 동그란 테이블 한 가운데에서 가볍게 부딪혔다.

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현실 속의 기본소득”으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현대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고 자신의 몫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는 의제와 운동은 언제나 국제주의를 머리와 가슴에 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장 뚜렷한 예가 범아프리카주의 같은 디아스포라의 운동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자 사회운동으로 여겨지는 노동자 운동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착취와 억압이 (국제 노동 분업에 따른) 지역적 차이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문화적 양상에 따른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추동력과 메커니즘 자체가 세계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국가 간 체제(inter-state system)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주의가 취할 수 있는 제도의 한 가지 형태가 대회(congress)였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열리는 대회는 우선 구체적 정세 속에서 해당 운동의 공통 과제를 도출하고 선언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대회를 여는 일 자체가 또한 하나의 운동일 수밖에 없다. 대회 자체가 국제주의 운동의 제도 형태라 한다면, 이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다시 흩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운동의 결절점을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결절점의 색깔을 규정하는 주요한 힘 가운데 하나가 개최지(호스트) 운동의 지향과 역량이다. 개최지의 운동이 해당 운동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향, 즉 좀더 급진적인가 아니면 개혁적인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운동의 대의를 구성하는가, 개최지 국가 내에서 이 운동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영향력을 어떠한가 등이 해당 시기 대회의 성격, 규모, 의미 등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22차 BIEN 대회로 가는 길

2023년 8월 한국에서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IEN Congress)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이렇게 국제주의적 운동의 근거, 형태, 가능성에 대해 짧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은 30년이 넘는 기본소득 국제 운동을 진화를 염두에 두면서도 이번 대회의 고유한 성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역사는 이제 잘 알려져 있다. BIEN의 웹사이트 안의 짧은 소개 글을 보면 1986년에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로 만들어졌으며, (2004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의 결의를 거쳐) 2006년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영국의 가이 스탠딩이 BIEN 25주년을 맞이하여 쓴 글을 보면 좀 더 흥미로운 뒷 이야기는 물론이고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의 (재)등장과 확산의 배경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알 수 있다.

기본소득 운동의 전 지구적 확산은 2016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서울에서 16차 대회가 열림으로써 한 번의 순환을 이룰 수 있었다.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은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국제적인 논의를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색깔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 그리고 운동 자체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초기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은 크게 네 개의 흐름이 합류하고 교차하면서 형성되었다. 하나는 『녹색 평론』을 하나의 깃발로 하는 일부 생태주의 운동이다. 산업 문명의 물질주의 그리고 특히 금융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 근거하여 새로운 생태 문명의 구성을 요구하는 이 흐름에서 기본소득은 고용 노동의 종속에서 벗어나는 수단이며, 일부가 독점하는 부의 정당한 분배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두 번째로 구좌파의 일부였으나 21세기 들어 ‘새로운 좌파 기획’의 흐름이 기본소득 의제를 수용하고, 기본소득 운동에 합류했다. 사회적 공화주의를 정치의 과제로 삼고, 신자유주의의 종식을 당면의 사회경제적 과제로 삼는 이 흐름에서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참여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재원은 특히 신자유주의 하에서 폭증한 ‘불로 소득’의 환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 구좌파에서 출발했지만 87년 체제의 경험이 지속되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개혁의 성취를 커다란 변화의 디딤돌로 삼고자 하는 지식인과 정책가 집단이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현 단계에 대한 인식이나 지향점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 두 번째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졌다. 다만 기본소득을 비롯한 ‘혁명적 개혁 정책’을 성취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를 찾으려 했고, 나름대로 찾았다는 데서 중요하고 또 착잡한 의미가 있다. 네 번째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추구하는 연구자와 정책가 집단이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표제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이념 지향적이기보다는 현대 자본주의의 구체적 작동 방식, 특히 노동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복지국가론이 가지고 있는 난점과 현실 부정합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말한 네 개의 흐름은 이런 분류 방법에 내재한 단순화와 유형화의 난점을 피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런 흐름은 앞서 말한 것으로 합류하기도 교차하기도 하며, 또 수렴하기도 하면서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이라는 더 큰 흐름을 형성했다.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부터 2019년까지 기본소득 운동의 중심 기관이었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 기본소득의 의

미 있는 효과, 기본소득과 다른 복지 제도와의 관계 등에서 잠정적이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어나고 있었다. 우선 기본소득을 공유부 배당으로 봄으로써 정당성과 원천에 대해 좀 더 확고한 이론적 기반을 부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을 공유부 배당으로 보는 것은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 이외의 실정적, 잠재적 제3의 소유 형태를 제시하고 겨냥하는 것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효과와 관련해서 고용 관계를 포함해서 기존의 관계로부터의 탈출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기본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기존의 지배적인 혹은 사실상 강제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나 좀 더 자율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효과에 대한 강조는 국제적으로 ‘해방적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 속에 놓이게 된다. 끝으로 모든 복지제도를 시장화하려는 우파 기본소득론 그리고 공적 사회서비스의 확장론(혹은 이를 넘어서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과 달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이후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라는 표어가 등장하는 배경이 된다.

기본소득의 현실화 혹은 굴절과 왜곡

이 시기는 기본소득 운동에서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는 때이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나마 기본소득 정책을 (다른 진보적인 정책과 함께) 구현해 보려는 정치인이 등장한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세 번째 흐름, 즉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를 모색하려는 흐름과 접점을 이루면서 나타났다. 이런 만남은 이후 성남 청년배당(2016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2019년), 재난 기본소득(2020년), 농촌 기본소득 실험(2021년) 등의 정책과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라는 기표의 확산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런 변화는 기존의 정치 지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기본소득 운동의 선형적 진화 과정으로만 볼 수 없고, 더 큰 정치 과정의 일부로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굴절과 왜곡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굴절과 왜곡은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주류 정치 내에서의 정치 투쟁을 통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주류 정치와 이른바 진보 정치 사이에서였다. 주류 정치 내에서 좀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사람들도 전통적인 복지국가 관념에 따라 기본소득을 반대했다. 물론 이런 반대가 온전하게 이론적,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졌다면 기본소득을 논의를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불호가 기본소득이라는 의제 자체도 외면하게 만든 게 현실이었다. 또한 주류 정치 내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조차 기본소득에 대한 물타기를 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의 효과나 의미에 대해 자기 나름의 관점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라는 핑계로 기본소득 의제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새로운 사상이자 정책인 기본소득이 제대로 된 공적 토론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가로막았다. 다음으로 주류 정치와 진보 정치 사이에서 일어난 굴절과 왜곡은 정확하게 말하면 진보 정치 내부에서의 굴절과 왜곡이다. 주류 정치 내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치

인은 넓은 정치 지형에서 보자면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류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보수적, 자유주의적 진영의 일부로 치부된다. 이런 분할선 속에서 (기존의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발견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분포와 중첩되어) 기본소득은 이른바 진보가 채택할 만한 정책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는 분명 기본소득을 요청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은 도리어 활발해졌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 (혹은 농민수당)이 대표적인 예이며, 정선군은 일찍부터 ‘군민 기본소득’을 실시하고자 했고 (하지만 사회보장 협의에 계속 계류 중이다) 전남에서는 신안군에서 에너지 배당이 실시되고 있으며, 도 전체 차원의 ‘남도 활력 소득’과 전남 교육청의 학생 기본소득(학생 수당)이 추진 중이다.

이런 변화는 2022년 대선 결과로 전체적으로 보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이후에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어찌되었건 굴절과 왜곡 속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 되면서 급진적 성격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이 지점에 기본소득을 제대로 실현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곤혹스러운 위치가 있다.

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2023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주제가 ‘현실 속의 기본소득’으로 정해진 것은 앞서 말한 변화 그리고 우리의 곤혹스러운 위치를 반영하면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과 실험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기본소득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모색하기 위한 우리의 방향을 담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2023년 4월 초)에 대회의 프로그램, 자원, 구체적인 준비 등에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이 많다. 그래도 준비되고 있는 것을 간추리면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 유사 정책에 대한 공유와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기본소득 실험이 향후 기본소득 실시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도출하는 자리 등이 준비 중이다.

다음으로 민주당 내에서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본소득사회위원회가 출범한 것에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체제가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주요한 의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당연히 기본소득을 주요 의제로 내세울 것이다. (다만 문제는 기본소득 의제를 어떤 시대적 과제와 결합하여 제시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전망과 관련해서 각 정치 세력의 입장과 계획을 듣는 것은 주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리에 미국의 ‘보장소득 시장 모임’이 참여할 수 있다면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회 프로그램 가운데 기본소득 운동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기본소득의 정의에 관한 세션이 열린다는 점이다. 201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현실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본소득을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생겼고, 이를 위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내에 워킹그룹이 만들어져 활동해 왔다. 이 세션은 그간의 토론 성과를 정리하고 BIEN 차원에서 합의된 기본소득의 정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이번 대회에 특유한 것은 아니지만 BIEN 창립 회원이자 여전히 기본소득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애니 밀러, 가이 스탠딩, 필리프 판 파레이스가 참여할 예정이다. BIEN의 창립과 함께 현대의 기본소득 운동이 시작된 지 40년 가까이 되고,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도 이미 10년을 넘은지 오래인 지금 기본소득 운동의 베테랑이 함께 하는 것은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나오는 경구를 실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카르페 디엠.

19세기 독일의 역사가 레오폴트 폰 랑케는 “모든 세대는 신과 등거리에 있다”고 말했다. 2년마다 혹은 1년마다 세계 각지를 돌면서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모든 대회는 기본소득 운동의 진화를 반영하고 또 추동했지만, 각각의 대회는 다른 대회와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과 힘이 있다.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도 진화의 흔적만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한국의 현실, 즉 정치 지형, 기본소득 운동의 확대와 분화 등등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기본소득을 온전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우리 몫일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이라는 역사적 어셈블리지

-『역사적 관점에서 본 보편적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in historical perspective (피터 슬로만 외, 2021, Palgrave Macmillan)

조민서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1.

2022년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민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후보가 패배하면서,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하나의 정치적 순환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의 의제로 자리잡은 것이 2009년이다. 1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기본소득이 공론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유력 정치인이 정책으로 제안하는 아이디어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간명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가 수립했고,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에서 주로 인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다. 이 간명하고 직관적인 특성 덕분에 기본소득이라는 깃발 아래에는 다기한 행위자들이 모여든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소득불평등 완화, 성평등, 탈노동, 탈성장, 이른바 ‘노동의 종말’이 도래했을 때 발생하는 유효 수요의 문제, 플랫폼 자본주의 등 다양한 담론들이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뒤섞인다.

기본소득에 이질적인 열망들이 응결되는 것은 동시대적인 경향만은 아니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이들은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역사의 장면들에서 기본소득의 원형을 찾아내고는 한다. 이런 역사 서술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은 18세기 토마스 페인의 기본증여, 19세기 샤를 푸리에의 최소소득, 20세기 영국의 데니스 밀너의 ‘국가 보너스’ 제안과 클리포드 더글라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신용운동, 대서양 건너편에서 펼쳐졌던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에 대한 논의

등으로 이어지다가 20세기 후반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및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설립으로 이어진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본소득은 21세기 초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현금지급 파일럿들과 정치적 제안들에서 볼 수 있듯, (통상 빅토르 위고를 인용한) “때를 만난 아이디어”로 소개된다.

다른 논의 구도에서라면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기본소득을 매개로 연결되는 이 서사는 (어쩌면 미래의 기본소득 지지자가 될지도 모를) 독자에게 분명 흥미롭게 읽힐 것이다. 그렇지만 이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유구한지를 웅변하는 서사로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읽어볼 수는 없을까? 『역사적 관점에서 본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것이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저자로 참여한 이 책은 2019년 1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진행된 워크숍을 모태로 삼고 있다. 저자들의 문제의식은 이질적인 맥락에서 발원했던 논의와 동학들을, ‘기본소득’이라는 모종의 관념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 계보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겨냥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이런 경향은 1986년 이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일국적 차원을 넘어선 기본소득 운동이 네트워크 형태로 조직되고, ‘만인에게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급부’와 같은 식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정전적 정의가 확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역사적 아이디어의 정치·언어적 맥락에 천착하는 지성사intellectual history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경향은 기본소득의 이념형ideal type을 물화시킬 위험이 있다. ‘기본소득의 역사’에 등장하는 국가 보너스state bonus,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보편 수당allocation universelle 등등이 제안되었던 배경과 목표했던 바는 모두 다르고 여기서 초역사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소득’의 정의와 같은 것을 찾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의미 자체가 불안정하다면, 기본소득의 역사는 단일한 이야기로 서술될 수 없다. “때를 만난 아이디어”와 같은 승리의 서사로는 더더욱 쓰여질 수 없다.”(6쪽) 대신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방향들을 제안한다.

첫째, 기본소득이 취했던 형식들의 언어와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탈빈곤 정책의 흐름에서 폭발했던 ‘기본선floor’에 대한 관심만 하더라도 각국의 복지국가 형태와 문제, 사회적 기대에 따라 다른 ‘기본소득들’을 낳았다. 1960년대 미국의 경우 여러 행정 단위에서 패치워크처럼 존재하던 복지프로그램의 복잡성에 대한 대안으로 현금지급이 제안되었고, 이에 따라 음의 소득세와 보편적 기본소득 간의 경계선이 흐려진 상황에서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이라는 범주가 부상하였다.¹⁾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중앙화된 자산조사 방식과 구빈법 전통이 존재하고 있었고, ‘정률세 보편주의flat-rate universalism’라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자산조사 방식에 따라붙는 낙인을 제거하기 위한 기본

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조민서. 2022. “존엄의 최저선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미국의 보장소득이 한국의 기본소득에 제기하는 질문”. 계간 <기본소득> 11호.

소득 구상들이 제출되었다. 이처럼 상이한 문제의식과 정책 수요에서 비롯된 기본소득‘들’의 특이성에 주목해야만, 각각의 기본소득‘들’이 당대에 차지했던 의미를 복원할 수 있다. 둘째, 다른 모든 아이디어들처럼 기본소득 역시 자유부동하지 않기에, 항상 특정한 개인과 기관들, 특히 정책 기업가(policy entrepreneur)를 특정한 기본소득 제안과 함께 분석해야 한다. 이들에 주목할 때 기본소득 캠페인이 발원한 구체적인 궤적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공적 토론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소득이 그토록 여러 차례 다양한 장소들에서 일련의 ‘물결’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현된 적은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 넷째, 기본소득의 지구사(global history, 곧 기본소득이 초국가적인 운동의 의제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을 탐문해야 한다. 이는 기본소득이 자신을 보편화할 수 있는 모종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신화를 걷어내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상이한 맥락 사이를 여행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탐구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대안적인 접근을 소개하는 서론에 이어 구체적인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정치적 삶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는 개별 장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장들은 다시 3부로 나뉜다.

먼저 1부는 20세기 중반 영미권의 보장소득 논의를 다루고 있다. 피터 슬로만(Peter Sloman)의 “기술관료적 자유주의로서의 기본소득: 20세기 영국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프레이밍하기”, 다니엘 자모라 바르가스(Daniel Zamora Vargas)의 “1940~1972년 미국에서의 기본소득: 어떻게 ‘재정 혁명’은 사회정책을 개조했는가”, 앤드류 V. 산체스(Andrew V. Sanchez)의 “1960년대 미국에서의 기술적 대격동과 보장소득 옹호론”, 알리사 바티스토니(Alyssa Battistoni)의 “풍요의 이면: 1960~80년대 미국에서 보장소득에 대한 페미니즘과 생태주의의 논변들” 네 편으로 구성되어있다. 피터 슬로만의 2장 글은 일정한 수준의 소득 보장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20세기 영국의 복지정치사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했으며, 그 영향은 어떠한지를 분석한 그의 저서 『[현금] 이전 국가: 현대 영국에서의 보장소득이라는 아이디어와 재분배의 정치』(Transfer state - The Idea of a Guaranteed Income and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in Modern Britain (2019, Oxford UP))의 내용을 기본소득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3장, 4장, 5장은 미국에서의 보장소득 제안이 어떻게 재정학적 논의, 기술 혁명, 페미니즘과 생태주의를 위시한 반자본주의적 대안 등 다양한 문제의식에서 제각기 발원했는지를 보여준다.

1부의 글들이 영미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이질적인 진영들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각 진영에서 내세웠던 기본소득들이 얼마나 상이했는지를 다루고 있다면 2부에 수록되어있는 세 편의 글은 공통적으로 탈산업화의 물결을 맞이하여 일(work)의 문제와 연관된 기본소득 논의들을 다루고 있다. 안톤 야거(Anton Jäger)의 6장 “우리 노동에서 자유로워져서 자연과 다시 하나가 되는: 기본소득과 프랑스 및 저지대 국가들[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의 탈노동(post-work) 정치”, 마크-앙투앙 사바테(Marc-Antoine Sabaté)의 7장 “실업자들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고용된 이들의 해방시킬 것인가? 프랑스 복지개혁 논쟁에서의 보편적 기본소득”, 왈터 판 트리어(Walter Van Trier)의 8장 “‘두 번째 투표 전략’에서 ‘기본소득’으로: 앙드레 고르는 왜 마음을 바꿨을까?”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 시간대와 논의의 범위는 상이하다. 하지만 이 글들은 하나같이 상품화된 노동의 형태로 조직되고 영위되는 자본주의 하의

‘일’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냐는 질문이 노동과 생계의 연계를 해체 내지는 약화시키고자 하는 기본소득이 내포하는 문제의식을 어떤 형태로든 소환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3부에 실린 글들은 1부나 2부에 비해 지역적, 주제적 연계는 약하지만, 기본소득의 정전적 정의를 수립하고 (이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확장되었던)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을 주도했던 서유럽권의 기본소득 논의를 지방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9장 “기본적 필요와 전 지구적 빈곤의 발견”은 평등주의적 정치와 대비되는 충분주의적^{sufficientarian} 정치의 계보와 그 효과를 비판적으로 논구해온 새뮤얼 모인^{Samuel Moyn}²⁾에 의해 저술되었으며, 기본소득이 함축하는 사회적 최저선에 대한 관심이 전 지구적 탈빈곤 담론과 어떻게 공명했는지를 보여준다. 10장에 수록된 엘리자베타 폭스만^{Elizaveta Fouksman}의 “일자리인가 소득보장인가? 남아프리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과 현금 지급의 정치”는 산업자본주의 하에서 완전 고용을 사회보장의 전제로 삼아왔던 북반구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정치경제적 환경에 놓인 남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기본소득이 정치화될 수 있었던 경로를 탐색한다. 11장에 실린 루이즈 하^{Louise Haagh}의 “자유에서 금융으로: 어떻게 발전과 관련된 조건과 패러다임은 기본소득 논쟁의 틀을 형성하는가”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위기 국면마다 부상했던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논쟁에서 나타났던 ‘자유’와 ‘평등’의 역사적인 차이와 반복을 드러낸다. 마지막 12장은 책의 편집자 중 한 사람인 자모라의 판 파레이스에 대한 인터뷰로,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시작된 현대적 기본소득운동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

이 책은 서론에서 제안하듯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상이한 시공간에서 그려왔던 궤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글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글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기본소득은 항상 구체적인 역사적 시공간에서 특정한 질문에 대한 응답 중 하나로서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20대 대선 국면에서 정점을 찍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한국 사회의 논의는 그 아이디어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축을 둘러싸고 회전해왔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정당한지, 이 아이디어는 재정적, 정치적, 제도적으로 실현가능한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토론이 상이한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벌어졌고, 이는 정치인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가졌던 관심과 교호했다.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은 주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다기한 문제^{problem}에 대한 해결책^{solution}으로 적합한지를 둘러싼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기본소득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적합한지, 그 형태는 어떠한지 해야 하는지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소개한 이 책은 기본소득을 일, 충분성, 자유, 평등, 성장 등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question}에 대한 응답^{answer}들을 내포하고 있는 아이디어로 주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가령 오늘날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최저선은

2) 국내에 소개된 이와 관련된 모인의 작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김대근 옮김, 2022년 국내 번역, 글항아리)가 있다.

어디인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어떠해야 하는가? 종래와 같은 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면, 성장을 전제로 한 사회보장의 시스템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한국 기본소득 운동에 참여해왔던 개인들과 단체들은 복지제도 개혁과 공유부, 토지 정의와 젠더 정의, 탈성장과 조세 개혁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방점은 다르지만 이런 질문들을 저마다 묻고 답해왔다. 이 책의 저자들이 주장하듯 역사적으로 상이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이 제각기 매우 다른 형태로 등장했던 것처럼, 현재에도 이질적인 이해관심을 지닌 행위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단일한 기본소득을 상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들 각각이 희구하는 열망들이 응결된 프로그램의 이름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고,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기본소득‘들’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럼에도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이 상이한 움직임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우산 아래 함께 이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 역사적 맥락을 뛰어넘어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 간명한 아이디어의 힘에서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단순성 덕분에 이 아이디어에 접속하는 행위자들의 면면은 늘 다양했고, 지금 현재도 이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는 변화하고 있다. 이들이 기본소득을 조우하기까지 품었던 열망의 형체는 무엇이었는가? 이 열망들은 왜 기본소득으로 구현되었는가? 각자의 꿈을 가지고 모인 이들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지금, 여기의 기본소득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동자본주의 하에서의 기본소득

⋮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플랫폼이 정동affect을 대하는 태도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킨 부분이 플랫폼자본주의의 등장이다. 플랫폼자본주의는 정동자본주의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플랫폼이 공동체의 흥내를 내고 판을 깔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성으로 하여금 정동affect 즉, 생명력과 활력을 발휘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플랫폼의 판 위에서 웃고 울고 즐기고 향유하고 활력과 정동을 발휘하면 그 이득은 모두 플랫폼 소유주가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플랫폼은 정동을 천연자원과 같이 다룬다. 플랫폼에서 정동을 촉발하는 참여자들은 큰 부수적인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재미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노력은 참으로 눈물겹다. 다시 말해 플랫폼에서의 정동을 부추기고 촉발하고 생산하는 참여자들은 ‘활력정동이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자본이 된다’는 명백한 사실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정동의 흐름이 발생하는 지점이나 머무르는 지점마다 화폐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의 다양한 정당들조차도 활력을 발휘하게 하는 플랫폼의 구도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도 드러난다.

여기서 정동은 ① 정서변환양식 - 감정emotion과 정서affection는 꿈쩍 안할 때 마음으로서 유발성과 돌발성, 공회전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시 말해 아주 날카로운 포크와 나이프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서과 감정이다. 이에 반해 정동은 정서와 정서를 정렬하고 수선하고 정돈하고 배열한다. 다시 말해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런히 배열하여 ‘맛있다’라는 마음으로 이행하는 것이 정동이다. ② 흐름으로서의 정동 - 정동은 인지부조화처럼 가브리엘 타르드가 말한 양자적 흐름을 발생시키는데, 그것은 유행, 트렌드, 따라 하기, 모방 등을 의미한다. 정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모방의 욕망이라는 점에서 ‘나처럼 해보면 재미있을 거야’라는 부추김을 하는 인플루언서들의 행위양식이 있다. ③ 상호작용으로서의 정동 - 정동하기/정동되기의 과정은 능동/수동의 과정이 아니다. 정동순환은 정동하기를 미학화

하는 돌봄하기의 양식만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동되기로 정동적 반응을 하는 돌봄되기의 양식에서도 가치를 생산한다. 이를 욕망가치, 혹은 정동의 강렬한 가치라고 펠릭스 가타리는 말한다. 그 밖에 정동의 역할은 정서와 정서 사이의 이음새의 역할 어퍼던스라고 불리는 매끄러운 행위유도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2. 정동자본주의에서의 욕망노동과 욕망가치

정동자본주의의 개막은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에 있어서는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이 개방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성장주의는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인지자본주의를 거쳐 정동자본주의를 최근의 양상으로 드러냈다. 인지자본주의는 팬데믹 이전에 주로 쟁점화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 골목상권 대기업 진출, 1세계와 3세계의 분리, 집단지성에 대한 갈취 등을 ‘코드의 잉여가치’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었다. 주로 ‘의미화=가치화=코드화’를 공동체의 외부에서의 전문가들이 해내고 그것을 갈취하는 인클로저의 색다른 형태였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질적 착취를 도모하는 자본의 등장은 개척하고 추출하고 채굴할 외부의 상실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지자본주의 역시도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자, 플랫폼자본주의로 점차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컴퓨팅 중심으로 인지자본주의를 넘어서 정동의 흐름이 보여주는 인지부조화를 확률론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딥 러닝으로서의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정동자본주의에서의 욕망노동은 플랫폼에서 머무르면서 정동을 촉발하고 정동이 촉발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존의 욕망노동에 대한 구도들은 ①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다음날 출근하기 위한 준비동작이라는 점, ② 정신장애인이 상담을 받고 분석노동을 그 자신이 한다는 점, ③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상화노동을 한다는 점, ④ 아동들이 벽에 색칠을 하면서 발달노동을 한다는 점, ⑤ 가정주부들이 가사노동을 통해서 살림을 한다는 점 등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이는 근대의 주인공담론이 갖고 있는 주체만이 가치증식에 능동적이라는 구도로부터 벗어나 있다. 다시 말해 근대의 이분법은 대상으로 간주된 소수자, 민중, 생명, 여성 등의 욕망노동을 부분노동으로 만듦으로서 자본화를 할 수 있었던 구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자본주의 개방은 플랫폼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네트워크 노동으로서의 욕망노동을 가치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노동은 복잡계로서의 전자적인 그물망에서 인간, 사물, 생명, 자연 등이 비스듬한 관계를 맺음으로서, 기계류 혁신의 원천이 되는 관계 맺는 방식과 관계 내부에서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욕망노동에 따른 욕망가치(=정동의 강렬한 가치)를 그림자노동이나 부분노동으로부터 추출하여 보편적 기본소득의 형태로 가치화하는 것은 정동자본주의로 하여금 천연자원으로서의 정동을 추출하고 채굴하는 인클로저 방식이 아니라, 협력자와 동반자, 파트너로서의 욕망노동의 주체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생산한 욕망가치를 적절히 지불하고 협동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전문가의 세련된 능력이 아니라, 다소 어눌할 수도 있는 민중과 소수자들의 수행이라는 특이점이 네트

워크와 공동체, 사회를 풍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빅데이터의 재료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지성을 성장시키며 기계류의 혁신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볼 수 없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동의 상호작용과 돌봄모듈

앞서 언급했듯이 정동의 미학화를 통한 정동순환의 보존을 위한 행위양식이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동하기/정동되기는 능동과 수동이 아니라고 할 때 정동적 평등을 위해서 그간 정동의 순환에서 수동이라고 간주되었던 주체성에 대한 가치화의 가능성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특히 2~3인 단위의 돌봄모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완화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기후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돌봄의 수행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화폐화된 돌봄 다시 말해 돌봄의 가치화를 통해서 화폐를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을 바탕으로 받고 있는 영역에서 과연 기후재난 상황에서 능동적인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쟁점이 그것이다. 결국 돌봄의 가치화의 형태는 한편으로는 가치의 저평가라는 지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돌봄의 시장화로의 편입을 통한 ‘고귀한 의미로서의 자발성’, ‘자원에 따르지 않는 야성성’의 무력화지점이라는 양극단의 논점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대상이라고 간주되었던 소수자와 민중에 대한 보편적 기본소득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소수자라는 특이점이 관계성좌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차이를 낳는 차이로 향한다는 점과, 민중이라는 관계망이 자발적인 돌봄의 판이 된다는 점에 대한 대대적인 긍정을 의미한다. 특히 자기돌봄과 서로돌봄 사이, 커뮤니티돌봄과 돌봄모듈 사이, 우애로서의 돌봄과 환대로서의 돌봄 사이, 절대돌봄으로서의 아이와 노인에 대한 돌봄과 배치돌봄으로서의 가정 내의 복잡화된 돌봄 사이 등 여러 가지 돌봄의 유형과 성격 사이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이음새가 정동이다. 그런 점에서 돌봄의 사각지대 논의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정동순환의 이음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 이음새의 일종으로서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하나의 이행의 구성요소라고 본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나오며 : 정동자본주의를 넘어 정동해방의 기본소득으로

정동자본주의의 개막은 정동의 강렬한 가치, 다시 말해 욕망가치에 대해서 추출과 채굴의 입장에선 플랫폼의 등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공유경제를 주장하는 두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쉐어링으로서의 공유경제는 바로 플랫폼이 자신을 위장잠입전술을 네트워크나 제도, 시스템에서 수행할 때 스스로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쉐어링으로서의 공유경제는 오픈 액세스 개념

이나 공동이용의 개념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자신을 공유경제라고 말한다. 우리가 대신 염두에 두어야 할 공유경제는 커머닝으로서의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관리, 공동소유, 공동제작의 형태를 띤다. 커머닝으로서의 공유경제는 아주 간단한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끄럽게 이용하는 셰어링으로서의 공유경제와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명백한 차이는 감추어지고 숨겨진 전제가 된다.

플랫폼자본주의의 등장은 이제 정동이 갖고 있는 무한채굴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를 테면 사랑 할수록 사랑의 능력이 증폭되는 것을 무한한 사랑으로서의 정동노동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계가 있고 고갈되기 쉽고 유한한 사랑으로서의 감정노동을 구분하는 경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동 자본주의(=플랫폼자본주의)는 플랫폼이 공동체의 판으로 완벽히 가장되면서 사랑의 무한성과 같은 정동노동의 판이 깔리기를 원하는 자본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판을 대신 깔아 내적으로 질적 착취의 모습에 머무르는 플랫폼이지만, 그것에 포섭된 정동의 모습들을 면밀히 관찰한 사람이라면 금방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구원으로 여기는 종교나, 관계에서의 영적인 성숙으로서의 작은 공동체, 돌봄, 사랑, 우애, 현대의 탈물질화된 정동순환, 순수증여와 증여의 낙차효과, 볼 수 없는 것이 윤리와 미학 등과 같은 정동노동을 최대치로 설정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정동해방의 흐름이 미리 전제된 형태로 플랫폼의 판의 내부 이외에도 재야생화로서의 외부에 깔려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동자본주의가 정동의 채굴과 추출에 몰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정동해방과 활력해방으로 가득한 탈성장 전환사회가 하나의 잠재성이자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정동해방의 거대한 전환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발휘할 여러 모델 중 하나의 특이점으로서의 모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정동자본주의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탈성장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정동해방, 활력해방, 욕망해방, 돌봄해방의 판을 구성하는 이 행의 구성요소로 만드는 실천이 유효한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시작점에서

나민진

청년진보당 당원

2022년 12월 28일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당장 올해, 2023년부터 기본소득을 못 받게 되는데 해당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나에게 기자회견문을 써 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아 처음으로 기자회견문을 써 보게 되었다.

기자회견문이라는 거창한 이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매사에 걱정과 생각이 많은 성격 때문일까 미루고 미루다 써본 첫 기자회견문은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작성하니 걱정했던 것보다 편하게 기자회견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작성한 내 생애 첫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고를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청년기본소득은 2016년 성남에서 최초로 ‘성남시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청년복지정책으로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24세 이상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생기기 전 타지역에 사는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하며 성남에 사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이후 경기도 청년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전체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가 내는 세금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조례였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당사자인 98년생인 나는 22년 7월부터 25만원씩 7월, 10월, 12월 3번 총 75만원을 성남지역화폐로 받았지만 마지막 4회차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의 당사자이다. 그동안 지역화폐로 받은 돈으로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거나 명절 차례를 지내기 위한 음식 재료를 사는 재료비, 최근에 가지게 된 취미인 등산을 위해 등산 장비를 구매하

는 등 나도 좋지만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뿌듯함까지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청년기본수당을 폐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와 황당한 마음을 담아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

성남은 지난 지방선거 때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며 기존 시에서 30억 예산을 배정하면 경기도에서 70억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여 진행되던 청년기본소득의 예산 편성 대신 ‘청년 취업 ALL PASS’ 사업이라고 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취업 청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면 이미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종의 청년 및 그 외 다른 이유로 신청대상에 들지 못하거나 해당 사업에 필요성이 없는 청년들은 시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장의 정권변경으로 인해 청년들의 한줄기 희망이었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건 진정으로 청년의 삶, 시민의 삶을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원고청탁을 받아 내가 쓴 글이 들어갈 ‘기본소득과 나’ 라는 코너의 이름을 보며 나는 기본소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 삶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긴 글을 읽는 걸 힘들어하는 내가 지난 계간지의 글들을 몇 번이나 읽으며 내 원고를 써 내려갔는지 모르겠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과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십시일반 기본소득 기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헤린님은 '화제의 인물: 김소연(자우)'에서 소개된 '십시일반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번 코너를 통해 십시일반 기본소득 기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시일반 기본소득의 경험이 곧 '기본소득과 나'를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혜린

십시일반 기본소득 참여자

지푸라기가 되어주신 당신들께,

처음에는 민망하고 겸연쩍었습니다. 어떤 윤리적 의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쓸 줄 알고 보내주시는 걸까?’ 얼마 전 절에서 삼천 배를 했습니다. 제주 비자림로에서 베어지는 삼나무를 만나고 난 뒤였습니다. 일백 배를 할 때마다 외는 부처님들을 나무라고 생각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일천 배를 마쳤을 때, 주변에 계시던 보살님들께서 다가와 절을 하고 나서 어떻게 몸을 살피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찬 물에 무릎과 발을 담궈라, 이 매트를 쓰면 올라올 때 더 쉽다..’ 점심을 먹고 다시 돌아와 절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문득 보살님들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알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 그러다 문득 간절히 기도하는 이를 보면, 그 기도가 무엇이든 돕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존재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삼천 배를 한다는 건, 사랑과 연민의 의지가 아니고서야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목격한 이들이 스스로 그 사랑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힘이고 우리의 본질이구나. 그렇게 비자림로의 삼나무들, 도살장의 돼지들 닭들 소들, 수조 속 물살이들 그 부처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보살님들도 이미 함께 기도해주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ですよ. 저도 어떤 간절한 기도(직접행동)를 보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여러분이 저를 지원해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결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무얼 기도하든 함께 기도해주고픈 마음,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함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응원과 든든함을 일 년간 느꼈습니다.

‘자격’에 대해 자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소개 글을 쓰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어떤 전시를 했고 어디서 강연을 했고… 그런 것을 적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부일 뿐인데, 왜 이것을 나라고 소개할까. 일부가 절단되고 숨겨지고 꾸며진 모습으로 나를 소개한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작년 모처에서 이력을 ‘있는 대로 많이’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력서를 작성했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예롭고 의롭고 깨끗한 모습의 나만을 끌어 모아야만 ‘강사’, ‘패널’, ‘작가’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즐릴하고 짜질하고 더러운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 편협한 자격성이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회는 존재의 일부만 드러내기를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의 나에게만 프로필 사진 자격을 부여하는 SNS처럼요. 전시한 적 있지만 정신질환도 있었던, 강의한 적 있지만 성노동도 했던, 의로운 구호를 외치지만 때로는 가해자였고 피해자였으며 또는 그 어떤 위치도 아니었던… 그런 양면성을, 온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일부의 나’만을 노출하고 광고하는 것이 일을 얻고 돈을 버는 데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필연적으로 경계자여서 사회가 정한 기준들에 이리저리 비쪽 벗어나고는 합니다. 활동을 하며 자격 미달, 비효율, 불법이라는 이름을 자금심으로 여길 수 있었고, 잘못된 기준은 있어도 잘못된 존재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계를 위해 사회에서 허용된 모습을 연기했고 여전히 효율적인 존재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금지된 애도를 하고, 불법적 연대를 하고, 더러운 존재로 남겠다고 현장에서 말했지만, 일터로 돌아갈 때에는 ‘정상인’의 모습을 흉내 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지원사업으로 활동과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럴 듯한 제목과 그럴 듯한 명분의 행사를 기획하고, 협소한 틀의 사업계획서에 자격을 증명해야만 사업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한 단체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정작 예상치 못한 일상적 사건이 생겼을 때 여전히 부족한 예산으로 애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천만 원의 예산이 있어도 보이는 행사에만 사용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일상적 지원은 모두 전전긍긍 십시일반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 그렇게 생계 벌이나 존재로서의 일상적 생존 예산은 따로 마련해야 하는 모습을 보며 허망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사업계획서를 따라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기 위해 ‘자격 있는’ 존재로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것… 그것은 마치 ‘희생자’가 되어도 ‘무고’해야 하고 ‘동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쯤의 미덕

이 있어야만 그 대우를 받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자격, 사회가 존재에게 요구하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저 살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숨 쉬고, 밥 먹고, 일기 쓰고, 산책 하며 하늘도 보는… 그게 전부일 때가, 그게 지극히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저에겐 작년이 그랬습니다. 자격을 증명하는 일도, 나를 광고하는 일에도 지쳤던 때입니다. 현대 사회의 노동은 많은 경우 그의 존엄을 소득과 맞바꾸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존재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엔 어떤 자격도 거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자신을 ‘판매’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이나 자원을 사회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그 시간을 취업하면, 휴가하면, 퇴직하면… 으로 유보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불안감을 주입합니다. 나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포장하여 스스로를 잘 판매하는 것을 ‘자기 구실’이라 말합니다. 남들을 결눈질하고 비교하면서 불안하게 하여 자본을 추구하게 합니다. 많어도 불안하고 적어도 불안합니다. 그래야 그를 자본의 노예이자 부품으로 착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면 착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본은 자신을 판매하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악’으로 여깁니다. 백수, 게으른, 속 편한, 젊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름표를 붙이면서요. 자본이 자격의 기준입니다.

일 년의 기본소득을 받으며, 누구나 이런 일 년을 경험한다면 세상이 많이 바뀔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5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제겐 충분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자마자 억지로 하던 생계 일을 그만두었고, 나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활동에도 휴지기를 가지게 되면서 ‘활동가로서의 나를 지원한 것 일 텐데 활동하는 모습을 SNS에 더 보여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일종의 ‘판매’이자 거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또 ‘활동가 헤린’이 아닌 ‘존재 헤린’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라는 자우(‘십시일반 기본소득’ 기획자)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상품으로서의 나에서 벗어나 존재로서 스스로를 존중했던 시간입니다.

1년 간 생계를 걱정 않고 나누고 관계 맺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 고민하는 대신에 어떻게 돌려줄까 고민했습니다. 오롯이 주고 오롯이 받음으로써 서로에게 돌봄과 치유가 일어나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받는 존재인 저에게도 치유가 일어났지만, 주는 이들 또한 그 자체로 치유 받을 수 있음에 기쁘고 놀라웠습니다. 살아가는 데

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는, 그저 '존재함'으로 환대받고 부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하지만 '실험'인 일을 함께하면서 우리 존재의 신성함을 목격했습니다.

작년 생태마을디자인교육에서 선물경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때 이런 것을 메모했습니다. “받으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받기’에 미숙한 사회” “무언가를 받을 때 ‘괜찮아요’ 거절하는 것은 보답의 의무가 두려워서, ‘날 칭찬하지 마’, ‘내게 선물하지 마’ 한다.” 기본소득을 경험하기 이전의 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존재들의 연대를 말하면서도 기대기를 두려워했고, 돌봄에 대해 말하면서도 의지하기를 겁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돌봄과 나눔이 우리의 본질임을, 다름 아닌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는 걸 일 년을 보내며 알았습니다. “온전히 받고 기꺼이 신세지고 다시 돌려주고 그 이상 돌려주는 것이 삶이고 우주”임을 배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의무와 연결 없는, 더치 페이하는 지급과 자립 같은 건 없다는 걸, 나의 존재는 이미 ‘받기’를 전제로 한 삶임을...

언젠가 지푸라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어느 날 절벽 가까이로 밀려났을 때, 잡을 지푸라기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운이 좋아 그 지푸라기를 만났지만, 그것이 운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지푸라기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럴 때 제가 하나의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존재를 선물 받은 일 년이었습니니다. ‘존재 헤린’에게 기꺼이 먼저 손 내밀어 준 자우에게, 그 손을 쥐고 엮어 일 년을 만들어 준, 저의 지푸라기가 되어주신 당신들께, 마음으로 함께하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그 최초의 연민과 사랑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일 년이었습니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한 해를 보내고 있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연결을 만들어 나가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들이 몹시도 궁금하고,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함께 기도하는 데에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선물하는 마음에 자격이 필요하지 않듯이, 존재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데에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어느 존재라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축복 받고 돌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존재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리듬으로 숨을 쉬고 어떤 걸음걸이를 가졌든, 당신의 모든 경험을 응원합니다. 온전한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제게 그러했던 것처럼요.

기본소득의 실재를 찾기 위한 여정

김민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강사로 재직 중인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을 들어오기 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3년 남짓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지역사회 주민, 취약계층 등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고 이러한 고민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역사회복지관을 떠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공부를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였습니다.

대학원 진학 이후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접하게 된 것은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였다는 뉴스를 통해서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접한 후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서적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이 자리 잡은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은 저의 석사학위논문이었습니다. 저의 석사학위논문에서는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거나 실험을 하기 위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책분석들을 사용하여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석사학위논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의 도입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영구배당기금을 통해 주민들에게 천연자원의 수익이 배당되고 있지만, 이는 특정 지역의 환경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격렬하게 논쟁이 되는 것은 자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원 마련은 기본소득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기반으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청년, 중장년, 노년세대로 구분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세대별로 기본소득 도입 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기본소득에 대해 세대별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세대별로 기본소득 도입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정책은 그 효과가 긍정적일 때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기본소득의 실증적인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연구자와 함께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과거 청년배당)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청년배당의 효과성을 청년의 삶의 만족도로 살펴본 결과,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받은 집단은 다른 지역에서 청년배당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집단 간 비교해 보았을 때 청년배당이 청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결과가 긍정적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기본소득 도입은 정말 어려운 일임을 점점 깨닫고 있지만, 미래의 사회보장의 모습으로서 기본소득은 개인의 삶의 만족, 자유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매력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마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저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규명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데이터가 오랜 기간 축적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년기본소득의 효과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해 보는 것이 개인적인 연구에 대해 희망하는 방향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은 청년들의 삶과 지역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청년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본다면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현재 유일하게 대부분의 기본소득 개념에 부합하는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배당기금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천연자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영구배당기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배당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래스카의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기본소득 연구자들께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가 연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연구자들은 미래 사회보장의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저 또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발전에 미력하지만 있는 힘껏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연구활동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9 772733 812007
ISSN 2733-8126

2023 봄
#015
가
민
간
학
보

